

# 통일환경 및 남북한관계 전망: 2014~2015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통일환경 및 남북한관계 전망:  
2014~2015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 통일환경 및 남북한관계 전망: 2014~2015

인 쇄 2014년 12월

발 행 2014년 12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최진욱

편 집 인 통일정책연구센터

등 록 제2-02361호 (97.4.23)

주 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4·19로 123(수유동) 통일연구원

전 화 (대표) 900-4300 (직통) 901-2523 (팩시밀리) 901-2544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기획·디자인 (주) 늘폼플러스 (070-7090-1177)

인 쇄 처 (주) 현대아트컴 (02-2278-4482)

ISBN 978-89-8479-799-4 93340

가 격 6,000원

© 통일연구원, 2014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 734-6818 ·사무실: 394-0337

**통일환경 및 남북한관계 전망:**

**2014~2015**





# 목 차

I. 동북아정세 .....	1
1. 동북아정세 .....	3
2. 북핵문제 .....	36
II. 북한정세 .....	41
1. 정치동향 .....	43
2. 경제동향 .....	49
3. 사회동향 .....	57
4. 군사동향 .....	63
5. 대외동향 .....	73
6. 대남동향 .....	81
III. 남북한관계 .....	89
1. 남북대화 .....	91
2. 남북 교류협력 .....	100
IV. 북한인권과 인도주의 사안 .....	109
부록: 2014년 주요 사건일지 .....	117
최근 발간자료 안내 .....	131



I

동북아정세 ...







---

## 1. 동북아정세

### 가. 동북아질서

2014년 국제사회는 “지정학의 귀환(Return of Geopolitics)”을 목도하였다.<sup>1</sup> 미국은 상대적인 국력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며 기축통화국으로서 국제경제질서 상의 중추적 지위를 수성하기 위해 진력하고는 있으나, 지도국가로서의 적극성을 점차 상실해 가는 피로한 패권국가로서의 모습을 역력히 드러내고 있다. 단극체제가 점차 해소되면서 나타나기 시작한 간극을 잠재적인 도전국가들이 메워 나가는 다극체제로의 이전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푸틴 3기 러시아는 유럽지역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에 적극 개입하며 전략적 입지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아태지역에서는 중국 및 북한과의 전략적 제휴로 ‘신동방정책’을 더욱 거세게 추진하고 있다. 중국도 센카구 열도 영유권 주장 등으로 주변국들과의 영토분쟁을 불사하면서, 아시아의 안보는 아시아 국가가 담당해야 한다는 ‘신안보관’을 주창하고 나섰다. 이들의 도전은 전세기(前世紀) 힘의 우위를 추구하며 국제질서의 재편을 주장하고 나섰던 현상타파국가들(Revisionist States)의 재림을 연상케 하는 것이었다. 종언을 고하는 대신 고전권력정치의 드라마가 역사에 재등장하고 있는 형국이다.<sup>2</sup>

---

1 Walter Russell Mead, “The Return of Geopolitics: The Revenge of the Revisionist Powers,” *Foreign Affairs*, Vol. 93, No. 3 (May/June 2014), pp. 69~79.

2 이런 점에서 다음은 매우 시사적이다. Robert Kagan, *The Return of History and the End of Dreams* (New York: Alfred A. Knopf, 2008).

---

아직 미국의 영향력을 대체할 글로벌 차원의 도전국가로 성장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동북아 및 서부태평양지역에서 중국의 부상은 2014년에도 꾸준히 지속되었다. 동북아질서 변화양상은 세력전이의 징후를 보이는 미중관계를 주요 축선으로 하여, 구조변화의 틈새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러시아, 일본, 그리고 북한 등 역내 주요 국가들의 대처법을 대별해 볼 때 보다 선명히 드러난다. 특히 도전자 입장에 있는 중국의 대미 및 근린정책과 전략은 미·일·러 등 지역 강대국과 인접국들의 대응을 직간접적으로 규정하는 주도적 변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역패권을 추구하는 잠재적 도전자로서 중국이 처한 문제는 다음 두 가지로 집약될 수 있다. 첫째, 급속한 경제력 확장과 박차를 가하고 있는 근의 현대화 추진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여전히 미국에 비해 우세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현재 국면에서 ‘지나치게 적극적인’ 태도를 중국이 견지한다면, 미국의 전방위적 봉쇄(Containment)나 예방적(Preventive) 공세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더욱이 양국 간 국력차가 현저히 감소하고는 있으나, 동맹국의 수 및 수준 면에서 중국은 절대 약세에 처해있다. 미국은 경제대국 일본은 물론, 한국, 호주, 대만과 같은 역내 주요 국가들과 동맹 또는 파트너십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베트남 등 중국의 확장에 위협을 느낄 수 있는 동남아 국가들을 포용·활용할 수도 있다는 면에서 전략적·외교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 중국의 때 이른 도전은 자승자박(Self-Encirclement)을 불러올 수 있다.

둘째, 중국 부상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경제력 팽창은 사실상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국제경제질서에 편입되며 시작되었다. 적어도 중국은 기존질서의 최대 수혜자 중 하나임은 분명하다. 주도적으로 신경제질서를 창립할 수 있는 경제 및 군사적 능력, 국제적 명성(Reputation)과

---

신뢰도(Credibility)를 구축하기 전까지, 미국 등 서방과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발전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 착석한 상태에서 스스로 의자를 내동댕이칠 수는 없다.

세력전이 국면 초기단계에서 중국은 현상을 유지하며 동시에 변화를 추진해야 하는 일종의 딜레마 상황에 놓여 있다. 중국의 해법은 시스템 내에서 변화를 추구하는 ‘전략적 점진주의’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소프트파워 차원에서의 담론적·문화적·제도적 도전이다. 기존 질서의 정통성과 구심력 약화를 목적으로 하는 행보(Delegitimation/Deconcentration)를 의미한다. 중국은 기존 국제질서의 전면적 부정보다는 정통성에 대한 의문을 표명하며 새로운 규범과 어젠다(Agenda)를 제안하는 등 미래지역맹주로서의 영역을 점차적으로 확보해 나가고 있다. 아시아 신안보관·신형대국관계론 등을 제기하며 보다 대등한 미중관계와 공평한 규칙의 재정립을 요구하였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AIIB)과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 FTAAP), 그리고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 회의(Conference on Interaction and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in Asia: CICA)’의 안보협력기구로의 전환 등을 주창함으로써 기존 국제질서에 대한 대체제도의 설립을 추진하기도 했다. 또한 피식민지 경험과 반일감정이라는 역사적·문화적·정서적 유대감에 기초, 한국의 동조를 얻어 미국의 역내 방위구도의 중핵인 한·미·일 안보 공조관계에 불협화음을 파생시키려 하는 중국의 의도도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하드파워의 신중하면서도 점증적인 투사이다. 직접적 대결 국면을 회피하면서 군사력 증진을 통한 미국의 ‘현상유지비용 확대,’ 그

---

리고 확대된 경제력을 활용하여 ‘현상유지세력의 균열확산’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대양을 건너 군사력을 투사하여야 하는 미국에 비해 중국은 역내에서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가용전력을 집중하고, 신속하게 전개하여 지역 내 미국 동맹국들을 위협할 수 있는 지리 및 거리상의 이점을 향유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중국은 반접근-지역거부(Anti-Access/Area Denial: A2/AD) 능력을 꾸준히 향상시켜 왔다. 특히 최대 사정거리 2,000km에 이르는 동풍(東風) 시리즈 지대함 미사일 등을 배치하여 항공모함 전단 등 미국 신속배치 해상전력의 역내 접근을 봉쇄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미국의 역내 방위공약 실현 비용을 배증시켜, 그 신뢰도를 점차적으로 저하시키고자 하는 속내를 읽을 수 있다. 러시아와의 전략적 제휴 및 관계악화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연결고리 유지 등으로 잠재적인 대미 군사 협력국들을 관리하는 중국의 연횡전략도 연장선상에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확장된 경제력과 시장의 흡입력을 활용하여 국제적 위신(Prestige)과 주변국들의 대중 경제의존도를 차분히 높여가고 있다. 역내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 체결, 금융위기에 대비한 다자간 통화스와프 제도로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hiang Mai Initiative: CMI)의 확대 주도, AIIB와 FTAAP 제안 등은 좋은 사례들이다. 자국시장에 대한 참여기회 확대, 그리고 대규모 투자 등을 제시하며, 미국주도 질서에 대한 역내 국가들의 이탈을 촉진하여, 흥기하는 중국으로의 편승(Bandwagoning)을 유도하고 있다.

중국의 역내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여 미국은 아시아로 회귀하고 있다. 첫째, 재균형(Rebalancing)정책이다. 먼저 재정적 난관에도 불구하고 국방비 수준을 유지하는 등 내부 자원동원으로 힘의 우위를 유지

---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원거리에서 강력한 파괴력을 신속히 투사할 수 있는 무기체계를 갖춰 중국 등 잠재적 도전세력의 A2/AD 시스템 무력화를 기하는 ‘합동작전적 접근 개념(Joint Operational Access Concept: JOAC)’을 도입하여 역내 동맹국들에 대한 방위공약의 신뢰도를 제고하려 한다. 또한 동맹 강화에도 힘을 쏟고 있다. 역내 동맹국/파트너십 국가들이 보유한 방위자산의 동원 잠재력을 높이고 자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비록 단극체제 하의 유일 초강대국으로서 과거에 지향했던 전방위적인 ‘심층적 관여(Deep Engagement)’ 정책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상대적 국력약화를 이유로 지역 권력게임에 대한 개입의지 및 방위공약의 축소를 통해 지역안보의 1차 책임을 동맹국에 이전하는 역외균형자(Offshore Balancer)로서의 역할에만 머물지는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상승하는 중국의 국력과 점증하는 도전을 단순히 전략적 긴축(Strategic Retrenchment)으로 소극적으로만 대처하지는 않겠다는 의도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전통적인 동맹국/파트너십 국가들과의 가치동맹적 유대 강화를 통해 중국의 규범적, 제도적 도전에 응대하고 있다. 자유주의국제질서의 제도적 인프라는 반자유주의(Illiberal) 국가들의 잠재적 도전에 대하여 보편의 이름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략적 유산으로 기능하고 있다. 중국이 보다 매력적인 대안적 규범체제와 국제질서의 신(新)모델을 제시하며,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거세게 도전하는 “전면적 현상타파국가(Full-Scale Revisionist)가 아니라 파트타임 휘방꾼(Part-Time Spoiler)”으로서의 역할에 머무르는 한, 자유주의 질서의 제도적 영향력은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다.<sup>3</sup> 자유주의 국제

---

질서의 주축 담지자로서 미국의 전략적 우위도 역시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다.

역내 국가들은 미중 간 협조체제의 균열 또는 대립의 심화라는 구조적 변화의 틈새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아베정권은 미국의 재균형정책 및 동맹국의 방위분담 요구에 편승하며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보편국가로의 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3차 핵실험 및 장성택 숙청으로 심화되고 있는 북중 간 갈등을 활용하여 납치자 문제를 경우, 북한과의 접촉을 시도하기도 했다. 한국 및 중국에 대한 견제 레버리지를 확보하고 싶다는 속내가 간접적으로 드러난 행보였다. 최근 러시아도 북한과의 관계 개선으로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기하고 있다. 북한은 미중관계가 더욱 경색되어 소위 냉전 체제의 도래가능성이 강화될수록 체제유지에 유익하다고 계산하고 있을 공산이 크다. 이 경우 중러 대륙진영에 가세한다면 전선국가로서 냉전기 중 향유했던 경제·군사외교적 후원체제가 다시 재가동될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미중, 한중 간 협력·공조체제 강화는 북한의 전략적 운신의 폭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포위구도 하에서는 원치 않는 개혁·개방추진 압박이나 비핵화 및 인권개선 압력에 노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중 대립 양상이 보다 구체화된 2014년의 지역질서 변화 트렌드는 ‘구조적인’ 것으로 2015년 이후에도 지속될 것이다. 중국은 미국 및 미국의 역내 주요 동맹국들의 반발을 초래한 2014년도 정책추진의 결과

---

3 G. John Ikenberry, “The Illusion of Geopolitics: The Enduring Power of the Liberal Order,” *Foreign Affairs*, Vol. 93, No. 3 (May/June 2014), pp. 80~90.

---

를 교훈 삼아 보다 신중한 행보를 선보이며 국제협력을 중시하는 외양을 보이기 위해 노력할 수 있다. 다른 한편, 미중대결 심화에 대비하여 지정학적 요인으로 거의 자동적으로 동맹국(ally by default)이 될 수 밖에 없는 북한을 보다 배려하는 외교적 행보를 취할 수 있다. 또한 중국은 국제유가 급락으로 위기에 처한 러시아를 지원하며 대륙동맹 형성의 잠재적 동력을 유지하려고도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의 한중 우호관계의 기초를 유지하면서 한일 갈등의 재점화를 의도하는 한편, 그간 쌓여진 유대 및 친선관계를 근거로 한국 측에 보다 강한 요구를 제기할 수도 있다. 예컨대 전역 고고도방어체계(Theater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의 도입 반대나 미국의 재균형정책에 대한 소극적 태도를 주문하며 간접적으로 대미 견제에 한국을 활용하려 할 수 있다. 아베정부에 대한 재신임은 일본이 대미협조를 더욱 긴밀하게 강화해 나가면서 보통국가로의 우경화 전략을 보다 강력히 추구해 나갈 수 있는 추진력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국지도발이나 핵실험 등 다양한 군사적 수단을 활용하여 국제사회의 대북 포위망돌파를 목표로 모험적 행보를 택할 수 있다. 미중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로 북한이 대화와 협력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하는 어려운 과제가 한국에 주어진 것이다.

- 김진하 국제전략연구센터 소장

## 나. 미국

2014년 미국은 유럽과 중동, 서아프리카에서 3중의 글로벌 위협에 직면하였다. 지난 2월 우크라이나 빅토르 야누코비치(Viktor



---

Yanukovych) 대통령이 사임하고 임시 정부가 수립되자 러시아는 친 러시아 성향의 크림공화국에 군대를 파견하였다. 이후 크림공화국의 투표를 거쳐 러시아가 크림공화국과의 합병을 선포하자 미국과 유럽 연합(European Union: EU)은 비난과 더불어 경제제재를 개시하였다. 한편, 중동에서는 이슬람 수니파 테러단체인 이슬람국가(Islamic State: IS)가 지난 6월 이라크 제2의 도시 모술을 장악하였다. 기존 테러단체와 달리 영토적 기반을 소유했으며 자금력과 군사력, 기술력을 바탕으로 중동과 유럽, 호주 등지에서 참여자를 이끌어내자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행정부의 중동에서의 철군정책을 비난하는 여론이 거세어졌다. 끝으로, 지난해 12월 서아프리카 기니에서 처음으로 에볼라 환자가 발생한 이후 에볼라 바이러스는 당초의 예상과 달리 미국과 유럽까지 확산되면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관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러한 세 가지 위협을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9월 국제연합(United Nation: UN) 연설에서 “만연한 불안(pervasive unease)”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언급하면서 공동대응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이러한 글로벌 위협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행정부는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지속해 왔다. 지난 11월 호주 브리즈번에서 행한 연설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아시아 관여 정책이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의 문제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재균형 정책이 ‘미국이 아시아에서 무언가를 더 하는’ 것을 의미할 뿐 아니라 ‘아태국가들이 미국과 더불어 세계 곳곳에서 무언가를 더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면서, 동맹관계 강화와 방위체제 현대화 계획을 언급하였다. 지난 4월 오바마 대통령은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을 순방하면서 미국의 아시아 회귀정책과 동맹 강화 의지에 변함

---

이 없다는 사실을 재확인시켰다. 한편, 미국은 중국의 신형대국관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화답하기 보다는 중국을 제외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의 체결과 한·미·일, 미·일·호 등의 다자관계를 강화시키고자 하였다. 이에 대하여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아시아 안보는 아시아 국가들이 담당한다’는 신안보관을 내세우면서 러시아와의 가스공급 협정타결을 이끌어내면서 중러 협력을 진전시켰다. 2014년 하반기에 들어서 미일과 중러 사이 대결구도의 가시화로 인하여 미국 내에서 냉전과 지정학의 재현에 대한 다수의 전망이 대두되었다.

2014년 미국의 대북정책은 이른바 “전략적 인내”의 지속으로 평가할 수 있다. 지난 7월 하원 청문회에서 글린 데이비스(Glyn Davies) 전(前)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북한 정권의 속성과 의도에 대한 어떠한 환상도 없음을 강조하면서 제재와 억제의 “혼합 정책(policy mix)”, 제한적 관여와 지속적인 압박의 “양면 접근(dual-track approach)”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데이비스 전(前) 특별대표의 발언은 2013년 3월 상원 청문회의 증언내용과 유사한 것으로 미국 대북정책의 기초에 변화가 없었음을 보여준다. 다만 2013년의 경우 북한문제에 대한 미중 협의가 외교적 노력의 “핵심 사항(a key locus)”이며 북한 압박에 있어서 중국의 협조가 “열쇠”인 점을 강조했다면, 2014년에는 중국의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안 동의와 900개 품목의 대북수출 금지조치를 언급하며 중국의 긍정적 역할과 노력을 기술했다. 로버트 킹(Robert King)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역시 하원 청문회에서 북한인권과 관련한 중국의 입장이 북한문제에 미국이 원하는 영향을 미쳤다고 증언하였다. 로버트 아인혼(Robert Einhorn)

---

전(前) 국무부 비확산·군축 특보를 비롯한 일부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미 간 “탐색적 논의(exploratory discussion)”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나 미국 대북정책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한편 한미 양국은 한미동맹이 “포괄적인 범세계적 동반자관계”로 발전하고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양국은 2013년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에서 한미동맹이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진화했으며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라는 공동의 가치에 기초”하고 있음을 명시한 바 있다. 지난 4월 양국 정상회담 이후 발표한 「한미관계 현황 공동 설명서」에서도 양국의 한반도, 지역, 글로벌 차원에서 안보와 비전통 안보, 경성 이슈와 연성 이슈와 관련한 협력과 유대를 기술하고 있다. 지난 10월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 공동성명은 양국이 북한문제(핵과 인권), 동북아 안정, 에볼라와 IS, 우크라이나와 이란, 원조와 기후변화에 대한 공동인식을 바탕으로 상호협력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동시에 양국이 전 시작전권 전환시기의 재검토와 관련하여 한국이 제안한 “조건에 기초한 전 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한미 원자력협정 마련을 위한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을 언급했다. 이처럼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위협인식을 기반으로 다양한 이슈와 확대된 지역에 대한 파트너십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렇다면 2015년 미국의 외교정책은 어떠한 모습일까? 먼저 글로벌 차원에서 오바마 행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관여와 개입정책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IS의 등장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하여 미국내 여론은 오바마 행정부의 유약한 외교정책에 대한 질타하였으며 지난 11월 중간선거 결과로 야당인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하였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당면한 이슈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

---

이다. 1979년 이란 인질사태와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기점으로 지미 카터(Jimmy Carter) 대통령의 외교정책이 이상주의에서 현실주의로의 전환을 겪은 것처럼 오바마 대통령도 2013년 IS의 부상과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으로 인하여 외교와 협상을 통한 대외정책에 변화를 줄 가능성이 높다.

한편, 미국의 아시아 정책은 앞서 언급한 재균형 정책을 지속하면서 중국에 대한 “봉쇄 없는 균형” 정책을 구체화할 것이다. 중국의 부상으로 위협을 느끼는 아시아 국가들, 특히 일본, 필리핀, 베트남과 같이 영토분쟁을 겪는 동맹 및 우방과 관계를 강화하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 및 외교 기구를 확대하고 군사력의 무게중심을 아시아로 옮기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물론 중동과 유럽의 문제의 해결 정도에 따라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 ‘속도’가 변할 수는 있으나 회귀의 ‘방향’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더구나 제5세대 지도자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의 꿈”을 넘어 “아태지역의 꿈”을 언급하고 새로운 지역 안보 및 경제 비전-“신안보관”과 “FTAAP”-을 제시하면서 미국과의 경쟁을 선언한 상황에서 미중의 역내 국제질서를 둘러싼 주도권 경쟁은 불가피하다. 미국은 냉전을 통해 마련된 양자동맹을 엮어서 다자협력체를 구성하고 기존의 안보와 경제 기구를 활용하는 한편, 자국의 동맹과 우방이 영토와 주권 문제 등을 둘러싸고 중국과 고강도 분쟁을 겪지 않도록 ‘억제’하는 노력을 동시에 기울일 것이다.

2015년 미국의 대북정책은 현재의 “전략적 인내”를 지속 혹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 현재 미국은 공식적으로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한미 양국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북핵 폐기

---

를 목표로 하는 “신뢰할 수 있고 의미 있는” 협상을 원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 초기 발생한 북미 2·29 합의의 일방적 폐기 이후 미국은 북한과 대화할 의지가 여전히 낮은 상태이다. 더구나 현재 이란과의 핵협상에 진전이 없는 상태로 장기화된다고 볼 때 북미 간 대화를 주장하는 국내외 목소리는 힘을 잃어갈 것이다. 또한 지난 2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 COI)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북한인권문제가 미국과 유럽 등 국제사회의 관심을 받으면서 북한 정권에 대한 강한 압박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바마 행정부는 북미대화과 6자회담 등을 통해 북한문제 해결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보다는 당면한 글로벌 이슈에 집중하면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북한관리정책을 펼 것으로 전망된다.

끝으로, 미국은 위협인식과 공동가치에 기반을 둔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 한·미·일 삼각협력의 수준을 격상시키는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특히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이 증대하는 상황에서 2015년 양국의 위협인식은 자연스럽게 강화될 것이기에 미국은 역내 라이벌인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한 한·미·일 연합을 자유와 인권의 ‘가치동맹’으로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펼칠 것이다. 이와 동시에 제2차 대전 종전 및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이 중국과 더불어 반일(反日) ‘역사동맹’을 형성하는 것을 경계하면서 한국이 남북관계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할 뿐 아니라 글로벌 차원의 문제에 대한 공동대응을 취할 수 있도록 양국협력을 지속 및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 정성철 국제전략연구센터 부연구위원

---

## 다. 일본

2014년 일본은 동북아에서 중국의 국력이 증강되고 있는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면서, 미국의 동맹강화 전략에 호응하여 미일동맹의 강화를 추구하고, 이를 기반으로 미국과 전략적 역할의 분담을 지향하는 한편, 호주, 인도 등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면서 대중국 포위망 구축 전략을 적극적으로 전개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아베(安倍晋三) 총리는 취임 이후 지금까지 50여 개국을 순방하며 ‘지구의(地球儀) 외교’라 불릴 정도로 정력적인 행보를 보였지만 정작 한국과 중국, 러시아와 북한 등 이웃하고 있는 동북아 4국과의 관계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은 채 산적한 난제에 직면해 있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 위안부 관련 망언, 역사 교과서 수정, 일본의 전시 침략 행위에 대한 불인정, 1993년 고노 담화와 1995년 무라야마 담화에 대한 수정 의도, 반한·반중 시위와 증오연설(헤이트 스피치) 등 일본의 우경화 행태는 2014년에도 주변국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며 동북아 협력 기조를 크게 손상시켰다.

2014년 중일관계는 정치분야에서 냉각 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제분야도 원활하지 못했다. 경색 국면 타개를 위해 일본은 정상회담의 조속한 실현을 제안했으나 중국은 역사인식과 센카쿠 열도의 영유권 문제를 이유로 대일 비판을 계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은 2014년 들어 중국 공선(해군 및 해경 소유 선박)과 어선의 영해 침입이 빈번해지고 방공식별권 내에서 중국 전투기가 일본 정찰기에 이상 접근하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으며 중국 정부에 수차례 항의했으며, 중국은 이를 무시해 왔다.

또 시진핑 주석이 역사문제를 둘러싸고 일본의 반성을 촉구하는 발

---

언을 거듭하는 한편 위안부 문제를 포함해 일본의 역사인식에 대해 비판하면서 한국과 공조하는 데 대해 일본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일본 언론은 특히 시진핑 주석이 7월 3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2015년은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와 중국의 항일전쟁 승리 및 한반도 해방 70주년”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기념행사를 공동 개최하자고 제안한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2012년 12월, 아베 2기 내각이 출범한 이후 중일 정상회담이 성사되지 못하다가 2014년 11월,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정상회의에서 아베 총리와 시진핑 주석 간 회담이 이루어졌으나 냉각된 양국관계를 개선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한편 2014년에는 일본과 북한관계가 개선될 조짐이 보이면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북한과 일본은 2014년 5월 26~28일,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국장급 회담에서 납치자 조사 및 대북제재 해제에 전격적으로 합의했다. 합의문에는 양국이 과거청산과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국교정상화 실현을 위해 협의했음을 밝히고 있다. 아울러 일본은 모든 납치 일본인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고 이에 대해 북한은 해결할 의사를, 일본은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유엔안보리 결의와 관련한 조치 불포함)를 해제할 의사를 표명했다.

합의에 따라 7월, 북한 측의 조사가 시작되었고 일본은 북한에 대해 제재 조치의 일부를 해제했다. 그러나 여름이 끝나고 가을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던 북한 측이 9월 18일, 이를 연기하면서 교섭은 난관에 봉착했다. 일본 정부는 납치문제 확인을 위해 10월 28~29일,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

---

장을 단장으로 하는 12명의 북한 방문단을 평양에 파견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사실 북일 교섭에 대해서는 북한이 일본보다 더 적극적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북일관계 진전을 통해 국제제재를 무력화시키고 이를 북일 정상회담 더 나아가서는 양국 국교정상화까지 연결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본 역시 북한과의 전략적인 타협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납치문제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는 것은 아베 정권의 성과로 작용할 것이며 이는 아베의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혹 납치자 문제가 원만히 해결된다 할지라도 북한의 핵문제가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만이 제재를 풀고 대북 경제지원을 하는 것은 아베 정권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일본으로서는 중국과의 불편한 관계를 고려할 때 북한문제로 인해 한·미·일 공조에 악영향이 초래되는 일은 최소화하려 할 것이며, 북핵문제의 해결 없이 일본이 먼저 북일 국교정상화를 거론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

한편, 한일관계는 2012년 8월, 위안부 문제 해결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일본 정부를 비판하며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한 이후, 급속히 악화되기 시작했으며 한국과 일본은 2012년 12월 아베 정권 출범, 2013년 2월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아직까지 정상회담을 개최하지 못하고 있는 이례적인 냉각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한국은 아베 정권이 고노 담화를 부정하고 위안부 문제에서 일본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데 대해 분노하고 있으며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나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 교과서의 검정 결과 등에 항의하며 대일 비판의 강도를 높여왔다. 한일관계의 개선을 요구하는



---

미국의 제안으로 2014년 3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된 핵안보정상 회의를 기회로 한·미·일 정상회담이 실현되었으나 역사인식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고 북한에 대해 한·미·일이 공동으로 대처할 것을 확인하는 데 그쳤다.

다만 일본은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8·15 경축사에서 일본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자세를 보이면서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는 2015년을 “두 나라가 새로운 미래로 함께 나아가는 새 출발 원년으로 만들자”고 한 발언에 주목하고 있으며, 2014년 하반기 들어 양국 간 고위급 접촉이 활발해진 점(7월 박근혜 대통령과 마스조에 도쿄도지사 회담, 9월 박근혜 대통령과 모리 요시로 전 총리 회담, 9월 양국 외무장관 회담, 외무차관급 전략대화,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벳쇼 주한일본대사 회담 등)을 들어 한국이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나설 의지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 일부 일본 언론은 한국 측의 이 같은 움직임이 최근 중일, 북일 간 관계 개선 동향에 대해 한국이 다급함을 느꼈기 때문으로 보기도 한다. 특히 11월 베이징에서 열린 APEC 정상회담에서 한일 양국 정상의 대화가 실현됐고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이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의 재개를 제안한 데 대해 아베 총리가 환영의 뜻을 표명함으로써 금명간 동북아 3국 정상이 자리를 함께 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그러나 2015년에도 일본이 동북아 국가들과 전향적인 관계 개선을 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2014년 12월 14일 치러진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자민당과 아베 정권은 국민들의 지지를 토대로 집단적 자위권과 평화헌법 개정을 강행하려 들 가능성이 크며, 그 경우 동북아 국가들의 반발을 초래해 아베 정권의 외교적 입지가 더욱 위축

---

될 수 있다.

평화헌법의 경우, 당장 개정이 추진될 가능성은 낮다. 이번 총선거에서 자민당과 공명당이 연합한 연립여당이 중의원 의석 475석 가운데 326석(자민당 291석, 공명당 35석)을 차지함으로써 개헌선인 3분의 2를 넘었지만, 참의원에서는 자민·공명당이 3분의 2를 장악하지 못한 상황 이어서 2016년 하반기로 예정된 참의원 선거까지 개헌안 발의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적 공감대도 아직 형성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아베 총리는 당분간 경제 회복에 힘쓰면서 2015년 상반기 중 집단자위권 관련 법안 처리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미국이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려는 정책 하에서 아베 정권에 대해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주문하고 있어 2015년에는 어떤 형태로든 한일 간 관계 개선 움직임이 활발해질 가능성이 다분하다. 대니얼 러셀(Daniel Russel)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2014년 12월 10일, 한일관계 개선이 2015년도 미국의 우선순위 정책 이라고 언급할 정도였다. 하지만 한·중·일 3국 정상회담 또는 한일 양국 간 정상회담이 성사된다 할지라도 일본 사회 안에 증폭되고 있는 우경화 경향과 반중 및 혐한 분위기, 역사인식에 대한 3국 간 인식 차, 영유권 분쟁의 해결 난망 등으로 인해 일본이 주변국과의 관계를 개선 하면서 평화국가로서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은 힘들 것이다. 아베 총리는 3기 정권 하에서도 동북아와 국제사회 안에서 일본의 군사적 역할을 강화하는, 이른바 ‘적극적 평화주의(Proactive pacifism)’를 전개해 나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새로 출범하는 아베 3차 내각이 일본 최대 우익 단체인 ‘일본회의’ 소속 정치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점도 이러한 전망에 힘을 실어준다.

---

북일관계 역시,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과 관련해 북한의 대일 비난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또 북한이 반대해 온 재일 조총련 본부 건물의 매각 강행 등의 부정적 여파로 인해 2015년에도 스톡홀름 합의를 실천하려는 북일 교섭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현승수 국제전략연구센터 부연구위원

## 라. 중국

### (1) 중국외교와 동북아

2014년은 중국이 강대국으로서 위상과 영향력을 세계에 과시하는 대국외교(大國外交)를 본격적으로 가동한 해로 기록될 것이다. 중국 지도부는 강대국과 주변국 및 개발도상국 등 40여 개국을 대상으로 전방위 외교를 펼쳤고 현재까지 총 72개의 동반자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커창(李克強) 총리는 각각 18개국과 12개국을 순방하여 중국의 국가이미지를 제고함과 동시에 경제·외교·안보 분야에서 이전보다 더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먼저, 시진핑은 3월 EU 및 4개국(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벨기에) 방문을 통해 120여 개의 협력의향서를 체결하는 등 중국의 유럽에 대한 전면적 전략동반자관계 강화 의지를 보여주었다. 5월 상하이에서 열린 CICA에서는 “아시아의 일과 문제는 아시아인들이 직접 처리해야 하며 아시아의 안보 역시 아시아인들이 수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CICA를 새로운 역내 안보협력기구로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11월 베이징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서는 ‘아태지역의 꿈(亞太夢想)’을

---

역설하고 FTAAP 창설을 주창하는 등 역내 정치적·경제적 영향력 강화 의지를 본격적으로 드러냈다.

2014년 중국의 대국외교 가동은 최근 중국 외교의 대변화 추세와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즉, 2012년 11월 18차 당대회와 2013년 3월 전국 인민대표대회를 거쳐 새롭게 구성된 시진핑 중심의 중국지도부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中國夢)’을 달성하자는 국가 비전을 제시하고, 기존의 ‘평화발전(和平發展)’전략은 유지하되, ‘핵심 이익(core interest)’도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는 등 적극적이고 자신감 있는 외교정책 추진을 강조해 왔다. 이에 기반하여 중국은 미국을 겨냥한 ‘신형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 수립을 제안한 바 있고, “친선(親)·성실(誠)·호혜(惠)·포용(容)”의 주변국 외교를 강조했으며, 주권과 영토문제 등 ‘핵심이익’ 수호를 강조했다.

특히 2014년은 중국이 과거보다 더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외교정책을 펼치는 과정에서 미국과의 본격적인 힘겨루기가 시작된 한 해로 평가할 수 있다. 5월 CICA회의에서 시진핑은 ‘아시아 안보관’을 강조하고 새로운 아시아 안보협력기구 창설을 제안함으로써 미국의 역내 영향력 감소 의도를 표출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자신들을 배제한 아시아 중심의 안보협력기구 창설 제안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한·일·호 등 동맹국과의 양자동맹을 강화하여 중국의 전략 공간 확장을 견제하고 있다. 미중 간 갈등은 7월 미중 전략경제대화(Strategic Economic Dialogue: S&ED)에서도 이어졌다. 미국은 중국이 기존의 국제적인 ‘룰(rule)’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고, 시진핑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강요하지 말라(己所不欲 勿施於人)”는 논어의 구절을 인용하면서, 미중은 정치체제와 가치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룰’도 달

---

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4년 중국은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과 함께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통한 영향력 확대에도 노력했다. 중국은 5월 CICA회의에서 AIIB 설립을 제안했고, 11월 APEC회의에서는 400억 달러의 ‘실�크로드 기금’ 출연을 약속함으로써 2013년에 제안한 소위 ‘일대일로(一帶一路)’<sup>4</sup> 전략구상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다. APEC회의에서 시진핑은 또한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대통령과 대규모 가스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중러 밀월관계를 과시했고, 아베 총리와는 2012년 9월 일본의 센카쿠 국유화 이후 중지된 중일 고위급 대화 재개에 합의했으며, 한국과는 FTA 체결에 전격 합의했다.

## (2) 한중관계와 북중관계

2014년 한중관계는 정상회담 개최 등 양국 간 전방위적이고 전면적인 협력에도 불구하고 양국관계 발전을 제약하는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요인 갈등도 여전히 존재했던 한 해였다.

작년 베이징에 이어 2014년 7월 서울에서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취임 이후 북한보다 한국을 먼저 단독 방문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특히 최근 미중 갈등 격화와 일본 우경화 추세 및 북일관계 개선 등과 같은 동북아정세의 지각변동 속에서 한중 간 전략적 이해관계가 부합된 결과 정상회담이 성사되었다.

---

4 ‘일대일로(一帶一路)’는 중앙아·유럽 교통망을 잇는 ‘육상실�크로드’(一帶)와 동남아·인도양·아프리카를 연결하는 ‘해상실�크로드’(一路)를 동시에 구축하는 전략구상으로서, 동 구상은 44억 명의 인구에 경제총량이 전 세계의 30%(21조 달러)에 달하는 50여 개 개발도상국을 포괄하고 있다.

---

즉, 중국은 미국의 한·미·일 동맹 복원을 통한 자국 견제 의도를 차단하고 일본과의 영토분쟁과 역사갈등에 대한 한중 공조를 도모하기 위해 시진핑의 단독 국빈 방한을 추진했다. 시진핑은 방한 직전에 “한중은 친척처럼 교류해야 한다”며 친밀감을 표시했고, “양국은 한 배를 타고 강을 건너고 있다”며 ‘이익공동체’임을 강조했다. 한국 역시 2013년 6월 정상회담 이후 여전히 답보상태에 있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의 협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했다. 한편 미국의 일부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한중의 밀월관계에 대해 한미동맹을 이격시키기 위한 시도로 해석하며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성숙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구축’을 위한 4개 분야의 합의를 도출했다. 첫째, 전략적 정치안보협력 강화를 위해 정상간 상호방문 정례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중국외교담당 국무위원간 고위전략대화 정례화, 국방분야 고위급 교류 및 직통전화 조속 개통 등에 합의했다. 둘째, 미래지향적 호혜협력 확대를 위해 양국은 연내 한중 FTA 타결 노력(cf. 11월 APEC회의에서 타결), 원-위안화 직거래시장 개설, 어업 및 조업질서 유지 협력 강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감축, 원전 안전 증진을 위한 사전 정보 통보, 2015년 한중 해양경제협력문제 논의 등에 합의했다. 셋째, 쌍방향 인문교류 제고를 위해 2014년에 19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하기로 했고, 한중 공공외교포럼 매년 개최 등에 합의했다. 넷째, 국민체감적 인적 교류를 위해 한중 영사협정 체결, 관용여권 사증면제 및 사증면제 범위의 단계적 확대(cf. 12월 25일부터 한중 ‘외교관·관용·공무여권 사증면제 협정’ 발효), 중국관광의 해(2015)와 한국관광의 해(2016) 지정 등에 합의했다.

하지만 한중 정상회담이 2년 연속 개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관

계 발전을 제약하는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요인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먼저, 북핵과 북한문제에 대한 인식 차이가 존재한다. 시진핑 체제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입장은 여전히 확고하지만, 기존의 강압 정책을 지속할 경우 북미 직접대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인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사전조치로서 주변 국제환경의 안정적 관리를 중시하면서 6자회담 재개를 강조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성의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북한이 협상과 도발을 반복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점에서 중국이 북한에 대해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중국은 개입과 압박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한체제가 변화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북핵문제와 북한문제를 구분해서 사안별로 접근하고 있지만, 한국은 북핵문제와 북한문제를 분리하지 않고 북한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을 중시하는 접근법을 선호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상의 차이로 인해 7월 정상회담에서 한국은 ‘북한 비핵화’ 표현을 공동성명에 삽입하기를 희망했으나, 중국은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에 확고히 반대한다”고 표현하는 데 그쳤다. 작년 6월 정상회담에서도 한국은 ‘북핵 불용, 북한 비핵화’를 강조한 반면 중국은 북한을 의식하여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북핵문제와 관련해서는 2014년에도 한중 간 더 이상의 실질적인 진전은 없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둘째, 한중 양국의 한미동맹에 대한 인식 차이 역시 한중관계 발전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왔고, 2014년 들어 THAAD 재배치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추가되면서 좀 더 심각해졌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한미동맹이 한국안보의 기본축임을 강조해왔고, 한미관계를 한중관계

---

보다 중시하는 일종의 전략적 차별성을 추구해왔다. 중국 역시 그동안 주한미군이나 한미동맹에 대해 명시적으로 지지하지는 않았지만, 역외 균형자로서 미국의 존재를 현실적으로 수용해왔다. 하지만 최근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한국의 미국에 대한 ‘연루’가 심화되자 중국은 한미동맹에 대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기 시작했다. THAAD 문제와 관련하여 11월 26일 치우궈홍(邱國洪) 주한 중국대사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한미군에 THAAD가 배치될 경우 중국에 위협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하지만 한국은 아직까지 THAAD의 한국배치가 결정되지 않았고 한미 간에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결국은 미국의 글로벌·지역적 전략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는 점을 밝히면서도, 북한의 실질적 위협이 상존하는 한 미국의 안보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2014년 북중관계는 양국 고위지도자의 상호방문과 고위급 교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등 정치분야에서 여전히 소원했고, 경협 역시 신압록강대교의 연말 개통이 무산되는 등 작년에 비해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 이는 주로 북한의 3차 핵실험(2013.2)과 장성택 처형(2013.12) 등을 계기로 중국의 북한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고 이는 결국 시진핑 지도부가 북한과 ‘정상국가관계’로의 전환을 모색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으로 평가할 수 있다.

2014년 북중관계가 여전히 소원한 이유는 중국의 대북 전략이익의 핵심인 북핵문제와 관련된 더 이상의 진전이 없었기 때문이다. 시진핑 지도부는 북한의 끊임없는 핵실험이 한미동맹을 강화시키고 있고 이는 결국 중국의 전략이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인식하고 있



---

다. 중국은 2014년에도 역시 북한이 핵포기와 관련된 성의있고 진전된 태도를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김정은을 포함한 북한 지도부를 초청하지 않았고 오히려 북한보다 한국을 먼저 방문하는 전략적인 선택을 했다.

하지만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과 미일동맹 및 한·미·일 공조 강화, 중일 간 동아시아 세력 경쟁 등과 같은 지정학적 구조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속에서 중국은 북한과 기존의 전통적인 우호협력관계 수준은 아니더라도 북중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성도 인식하고 있다. 실제로 11월 18일 제69회 유엔 총회 제3위원회가 “북한인권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에 회부하고 북한 최고지도부의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을 때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반대표를 행사했고, 12월 김정일 사망 3주기에 류원산(劉雲山) 중국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이 베이징 북한대사관을 방문하여 추도했으며, 특히 북한체제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경제협력은 유지하고 있는 것 역시 이러한 이유에서 기인한다.

북한 역시 2014년은 국제적 고립과 경제난 탈피를 위해 미국, 일본, 유럽, 러시아까지 우호적인 제스처를 보냈지만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상태에서 중국과의 관계가 여전히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는 한 해가 되었을 것이다. 7월 2일 조선신보가 “중국은 미국의 대중국 봉쇄정책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조선과의 전통적인 우호협력 관계를 중시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점, 최룡해가 11월 러시아 방문시 “조건 없이 6자회담에 복귀하겠다”고 언급한 점 등은 중국과의 전통적인 우호협력관계 복원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

### (3) 2015년 전망

2015년에도 중국외교는 여전히 글로벌 차원에서 미국의 패권적 지위에 도전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면서, 아태지역 차원에서는 강대국으로서의 중국의 비전과 의지가 반영된 새로운 국제질서를 창출하려는 의도를 좀 더 많이 표출할 것이다. 이는 곧 중국이 이미 2014년 강대국으로서의 정체성에 기반하여 국제무대에서의 역할이나 위상 변화를 시도하기 시작했다는 점에 기반한다. 즉,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미국 주도의 국제체제에 편입하기 위해 노력하는 ‘수용자’였다면, 이제는 국제정치경제 어젠다를 주도하고 ‘새로운 기준(New Normal)’을 만들어가는 ‘생산자 내지는 선도자’ 역할을 자처할 것이다.

향후 미중관계 역시 사안별·지역별로 협력과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제질서에 대한 주도권 경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고, 그 무대는 바로 동아시아지역이 될 것이다. 즉, 아태지역에서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과 이에 대응한 중국의 ‘반접근-지역거부(A2/AD)’ 전략이 충돌하면서 미중 간 힘 겨루기가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특히 시진핑에 대한 정치권력 집중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중국지도부가 좀 더 공세적인 대외정책을 추구할 경우 미중 갈등은 영토문제와 주권 등 ‘핵심이익’을 둘러싸고 가장 첨예하게 나타날 것이다. 다만 중국은 당분간 미국과의 전면적인 충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영토분쟁의 근본적인 해결보다는 ‘관리’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2015년의 한중관계는 미중관계의 향방과 중국의 주변외교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중국외교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전략적 가치가 갈수록 증대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중국은 내년에도 여전히

---

강대국으로의 부상을 위한 외교정책 추진과정에서 한국을 미중관계의 종속변수로 인식할 개연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중국 내에서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증대될 수 있고, 특히 THAAD 문제와 관련된 미중 갈등이 지속될 경우 한국의 전략적 선택은 극히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2015년 북중관계는 2014년에 비해 좀 더 개선될 것이다. 왜냐하면 최근 1년여 동안 지속된 북중관계의 경색 국면은 역설적으로 북중 양국에게 상대방의 전략적 중요성을 절감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올해 북중 양국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적으로 돌리지 않고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자국의 국가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다만 최근 중국정부와 한반도문제 전문가는 물론 언론매체까지 북한에 대한 ‘자신’과 ‘부담’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나타났고, 이는 그 자체로 북한의 중국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었다는 점에서 향후 북중 간 최고위급 상호방문 재개 등과 같은 신뢰회복 조치들이 있을 것이다.

또한 시진핑 지도부가 여전히 비핵화에 대한 ‘성의있는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2015년 북중관계 개선의 핵심 변수는 여전히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입장이나 태도변화 여부라고 할 수 있다. 즉, 북한이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까지는 아니더라도 비핵화로 가겠다는 입장 정도를 보여주지 않을 경우 김정은 방중을 포함한 최고위급 교류는 재개되기 어렵다. 만약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전향된 입장을 표방할 경우 5월 이전에 북중 정상회담을 포함한 최고위급 교류가 가능하며 북중관계는 최소한 장성택 처형 이전으로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2015년 북한의 4차 핵실험 가능성은 관련국 모두가 반대하고 있고 북

---

한 역시 경제건설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라는 점에서 쉽게 예단하기 어렵지만,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관련국과의 관계 개선에 실패할 경우 하반기에 자신들의 핵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고려할 수도 있다.

- 신종호 기획조정실 부연구위원

## 마. 러시아

러시아는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와 크림 합병으로 인한 미국과 EU 등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로 인해 경제적·외교적 난관에 직면했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아시아 지역으로 협력의 시선을 옮기고 있다. 러시아의 위기는 2012년 5월 출범한 푸틴 3기 정권의 핵심 외교 노선인 ‘신동방정책’을 더욱 강화시켰으며, 동북아에서는 중러의 전략적 제휴와 북러 접근으로 표출되고 있다.

러시아와 미국의 갈등은 탈냉전 이후 2014년에 최고조에 달했으며 오바마 대통령은 9월 24일 유엔 총회에서 금년도 국제사회의 위협요소로 에볼라 바이러스의 확산에 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대응을 두 번째로 꼽을 정도였다. 이에 대해 푸틴 정권은 미국 중심의 일극 질서가 다극 질서로 변하고 있으며 러시아가 다극 질서의 중요 축을 담당해야 한다는, 이른바 ‘신푸틴 독트린’으로 대항하면서 미국과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

한편, 중러관계는 두 나라가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후 최고의 정점을 찍고 있는 형국이며 이를 증명하듯 2014년 한 해 동안 양국 정상은 9차례에 걸쳐 회담을 진행했다. 또 러시아는 그동안 안보상의 이유로

---

중국에 대한 첨단무기 수출을 자제해 왔으나 이러한 전통을 깨고 자국의 최신 무기와 잠수함 등을 2015년 상반기 중 중국에 제공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제적으로도 중러 양국의 밀착관계는 심화되고 있으며 기축통화인 달러에 타격을 가하기 위해 양국 간 자국 화폐로 무역 결제를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무엇보다 2014년 5월 21일, 중러 양국이 10년 동안 끌어오던 가스 협상을 타결한 사건은 러시아가 중국에 대해 걸고 있는 전략적 기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협상이 타결됨으로써 러시아는 동부로 향하는 가스관을 통해 30년간 총 4,000억 달러에 달하는 가스를 중국에 공급하게 된다.

중국과는 달리 러시아와 일본의 관계는 난관에 봉착해 있다. 러시아는 일본의 아베 정권 출범 이후, 쿠릴 열도 4개 섬의 영유권 해결과 평화조약 체결을 위해 협상을 벌여 왔지만 일본이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에 동참함으로써 이러한 협력 기조가 깨지고 말았다. 양국 정상은 11월 10일,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협상 재개와 제반분야에서의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합의했으며 일본은 2014년 계획했던 푸틴의 일본 방문을 2015년에 재추진한다는 의사를 피력하고 있으나 그 실현 여부는 미지수이다.

2014년의 한러관계는 러시아와 서방 간 갈등이 동북아의 전략 환경을 변화시키는 가운데, 두 나라가 지속가능한 협력을 모색하며 2013년 양국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사항들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한 한 해로 평가할 수 있다. 정치·안보분야에서는 서방과의 관계 악화가 지속되고 있는 러시아와의 협력에 일정한 한계가 노정되었으나, 한국은 대러 경제제재에 대한 부담 속에서도 ‘유라시아 이니셔티브(Eurasia Initiative)’ 실행을 위한 정지작업에 주력하면서 푸틴 행정부의 극동

---

개발 의지를 남·북·러 삼각협력 가능성으로 연결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한러 무비자 시대의 개막으로 관광 등 상호 인적 교류도 괄목할 만한 증가세를 보였으며 지방 정부 및 민간 기업 간 교류도 활발했던 한 해였다.

우선 정치·안보분야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여파로 양국관계에 주목할 만한 성과는 기대하기 어려웠다. 한국은 3월 19일,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우리 정부는 크림 주민투표와 러시아의 크림 병합을 인정할 수 없으며 우크라이나의 주권, 영토 보전과 독립은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가 내놓은 입장은 미국과 유럽 등 국제사회의 입장과 같은 것이지만, 국제법 위반 등을 언급한 다른 나라에 비해 표현 수위 면에서는 강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또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대러 경제제재에 동참을 요구하는 미국에 대해 한국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는바, 러시아는 대러 경제제재에 동참하지 않은 한국을 높게 평가했다.

그러나 미국이 THAAD를 주한미군 기지 내에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을 놓고 중국과 함께 러시아도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당초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THAAD 배치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억제하고 안보태세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으나, 위성락 주러 대사는 7월 15일, 러시아 ‘인테르팍스(Interfax)’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한국에 미사일 방어체제(Missile Defense: MD)를 배치하겠다고 공식 요청한 바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THAAD 배치 문제가 한러관계 악화로 번지지 못하도록 진화에 나섰다. 러시아 외무부는 7월 24일 성명을 통해 THAAD 배치가 동북아 군비경쟁을 촉발시키고 북핵문제 해결에 더 큰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

---

을 분명히 했다.

한계를 노정했던 정치·안보분야와는 달리 한러 양국 간 경제협력에 서는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1월 11~13일과 7월 15~22일, 라진-하산 물류사업 참여를 추진 중인 컨소시엄 3사(코레일, 포스코, 현대상선)의 실사단이 북한 라진 지역을 방문하였는바, 이는 2013년 11월, 푸틴 대통령의 방한 중에 컨소시엄 3사와 러시아 철도공사 간 체결한 MOU에 따른 것이다. 북러 경협사업인 라진-하산 물류사업은 북한의 라진항과 러시아 극동의 하산을 잇는 54km 구간의 철로 개·보수와 라진항 현대화 작업, 복합 물류사업 등을 골자로 한다. 통일부는 “한러 양국 간 신뢰관계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 국익 차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을 장려해 나가기로 했다”며 “앞으로 각 단계별로 필요한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컨소시엄 3사는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러시아 측과 협상을 벌여 투자지분을 확정된 후 철도 운영 등에 참여하게 되며, 투자금액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 지급보증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11월 29일, 러시아산 석탄(유연탄)이 북한 라진항을 통해 국내로 반입된 일은 남·북·러 삼각 협력 사업으로 추진되는 라진-하산 프로젝트 시범운송 사업의 일환으로서, 러시아산 지하자원이 북한을 거쳐 국내로 수입되는 첫 사례였다. 러시아산 석탄은 28일 라진항을 출발해 포항으로 반입되었으며 수입량은 4만 5백톤이었다. 유연탄을 수입한 포스코는 기존 블라디보스토크 항로에 비해 10~15% 정도 운송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는데, 이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정책의 첫 성과물로 평가될 뿐만 아니라, 유엔의 대북 인권결의안 채택으로 경색되어 있는 남북관계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북한을 통한 석탄

---

반임이 이루어졌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된다.

러시아는 극동개발과 남·북·러 삼각 경협을 연계시키기 위한 노력에 적극적이다. 11월 29일, 알렉산드르 갈루쉬카(Alexander Galushka) 극동개발부 장관이 방한하여 통일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정부관계자들을 만나 경협문제를 논의했다. 그는 류길재 통일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남·북·러 경협이 한반도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며 라진-하산 프로젝트에 대한 북한 측의 관심도 크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2년부터 가시화되기 시작한 러시아의 대북 접근이 2014년 들어 더욱 구체화되면서 한국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10월에 리수용 외무상과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11월에 북한 권력 2인자로 불리는 최룡해 노동당 비서가 연달아 러시아를 방문함으로써 북러관계 진전이 예상롭지 않음을 방증해 주었다.

러시아는 국제적 고립을 해소하기 위해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고 있으며 북한으로서도 소원해지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 가능성에 따른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 러시아에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북핵문제와 장성택 처형으로 중국이 대북 강경책을 펴는 사이, 러시아는 루블화로 북러 간 무역결제, 북한의 광물자원 개발, 라진항에 보조 선박 지원 등 대북 통상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2014년 5월 5일, 푸틴 대통령은 대북 관계의 걸림돌이었던 북한의 채무(약 110억 달러)를 과감하게 탕감해주는 문서에 서명했다. 남은 채무(약 10억 9천만 달러)는 러시아가 북한의 보건과 교육, 에너지분야에 재투자하는 형식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 재무차관은 상환금 중 일부는 남·북·러를 연결하는 천연가스관



---

이나 철도 연결에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 단계에서 러시아가 정치·안보적 의도를 갖고 한국에 대한 압박용 외교 카드로서 대북 접근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기에 는 무리가 있다. 그보다는 러시아의 푸틴 행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극동지역 개발과 시베리아, 극동 산 천연자원의 수출로를 확보하기 위해 남·북·러 삼각 협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치나 군사가 아닌, 경제적 동기에서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러시아 정부는 11월 27~28일 갈루쉬카 극동개발부 장관, 뒤이은 12월 8~9일 부총리 겸 극동연방지구 대통령 전권대표의 한국 방문을 통해 한국이 남·북·러 경협과 극동 개발 투자에 관심을 갖도록 촉구했다. 러시아 측은 남·북·러 경협을 북한 팩터와 연계시키고 있는 한국 측의 입장에 조바심을 느끼고 있는 듯 보인다.

물론 러시아가 북한과의 소원했던 관계를 개선하고 동북아와 한반도문제에 개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정치적 실익도 무시할 수는 없다. 특히 한국 정부가 제안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 호응함으로써 한반도에서 평화적 중재자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내에는 북러관계의 접근을 우리 정부의 ‘동북아평화구상’이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활성화를 위한 기회로 보고 이를 긍정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우리 외교부 당국자는 11월 24일, 북러관계 강화가 한러관계의 악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일축하고 “한러 간 경제협력이 착실히 진행되고 있고 무역액도 200억 달러를 넘었다”고 지적하면서 “최근 한러 정상회담으로 미결 과제도 상당수 해결했고 라진-하산 프로젝트도 잘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5년에도 러시아와 서방의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러 밀착, 북

---

러 접근 등 동북아 전략 환경의 변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며 한러관계 역시 정치·안보적 협력보다는 경제적 교류 확대를 추구하면서 상호간 지속가능한 협력을 모색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러시아는 남·북·러 삼각협력을 극동개발과 연계시키기 위해 남북한 사이에서 협력자 내지 중개자 역할을 최대한 발휘할 것으로 예상되며, 정치·안보적 이해로 인해 한국과의 경험, 극동 개발에 대한 한국의 참여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가 냉전구도로 회귀하면서 북한과의 협력관계를 경제분야 이외의 영역으로 확대하려 시도할 것이고 그 일환으로 북핵문제에서 북한을 감쌀 수도 있다는 관측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2015년 5월 9일, 러시아의 2차 세계대전 전승기념일에 맞추어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정상회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6자회담 재개를 위해 한·미·일 등과 협력하겠다는 세르게이 라브로프(Sergei Lavrov) 외무장관의 발언이나 “북핵이 국제비확산체제에 위협을 가하고 지역 정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러북관계에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다”는 그리고리 로그비노프(Grigory Logvinov) 러시아 북핵 특임대사의 발언 등을 고려할 때, 북핵 비확산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은 확고한 것으로 보이며 변화 가능성은 적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한국은 향후 북한문제 해결에 있어 러시아의 영향력이 서서히 증대될 가능성에 유념하면서 러시아를 통한 대북 레버리지 확보라는 중장기 전략카드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서방의 경제제재와 국제유가 하락, 루블화 폭락으로 총체적 위기에 직면한 러시아로서는 동북아와 한반도에서 자국의 영향력 확대와 미국의 세력 확장 저지를 위해

---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그 실험대가 북한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러시아에게 한국과의 협력이 변수가 아닌 상수로 인식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 현승수 국제전략연구센터 부연구위원

## 2. 북핵문제

2014년도 6자회담은 성사되지 못했다. 회담을 재개하기 위한 입장 차이가 좁혀지질 않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국무부 관계자는 북한이 핵활동을 중단해야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고 못 박고 있다. 성 김 6자회담 수석대표도 북한의 핵관련 태도에서 변화한 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면서 회담의 재개 가능성을 일축했다. 전제조건 없이 회담에 임해야 한다는 북·중·리의 견해와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6자회담은 공전되고 있지만, 미국과 중국이 의견일치를 하는 점은 하나 있다. 한반도의 비핵화다. 11월 12일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한반도의 비핵화가 공동목표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여러 경로를 통해 들려오는 보도의 내용은 중국도 북한을 부담스럽게 생각한다는 소식이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북한이 야기하는 역내 불안정을 중국은 전략적 부담으로 여긴다고 한다. 지난 5월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한국을 방문하여, “북한의 4차 핵실험은 중국에 레드라인이 될 것”이라고 언급한 것을 보면 북한 핵문제가 부담이라는 것은 빈말이 아닌 듯하다. 중국의 환구시보도 “북한이 핵에 집착하게 되면

---

국제적인 고립과 빈곤은 물론, 평양 정권이 구조적으로 위협에 직면할 것”이라는 협박에 가까운 메시지를 내보내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중국의 강경메시지가 북한에 압력으로 작용할지는 미지수다. 핵포기를 하라는 메시지라기보다는, 협상에 나오라는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의구심 때문이다. 류홍차이 북한 주재 중국 대사가 10월에 열린 한국전쟁 참전 64주년 기념식에서 양국의 혈맹관계와 이의 계승을 언급한 것을 보면, 북한이 집착하는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압력을 행사할지에 대해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와중에 러시아는 노골적으로 북한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러시아의 6자회담 차석대표는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주변 국가들을 위협할 정도는 아니라는 발언으로 주목을 끌었다. 그는 “한·미·일이 과도하게 대응하기 때문에 동북아정세가 악화된다”며, “전제조건을 내세우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러시아 핵연구소에 북한 기술진이 파견되어 핵기술을 습득하고 있다는 산케이 신문의 보도가 추측성 기사라고 치부하기 어렵게 만드는 러시아의 입장표명이다.

한편 북한은 틈틈이 핵위협을 쏟아내고 차근차근 핵능력을 쌓아가고 있다. 핵으로 남한을 공격하는 것은 물론 4차 핵실험을 실시하겠다는 암시를 엿볼 수 있는 위협을 내놓고 있다. 유엔 총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하였을 때는 미국의 적대행위 때문에 새로운 핵실험을 자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비난하였고, 그로부터 5일 후인 11월 23일 북한의 국방위원회는 핵전쟁이 터지면 청와대도 안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협박을 했다. 이 뿐만은 아니다. 7월 31일 을지프리덤가디언(Ulchi-Freedom Guardian: UFG) 훈련을 앞두고는 최첨단 초정밀 화력 타격 수단으로 청와대를 공격할 것이고, 또 4차 핵실험도 할 뜻이

---

있음을 내비쳤다. 8월 10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SEAN Regional Forum: ARF)에 참석한 리수용 북한 외무상은 4차 핵실험을 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어떤 행동도 다 할 권리가 있고 실제 이를 행사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러한 위협을 공갈로 평가절하하기 어려운 이유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나날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 군사당국은 북한이 핵무기 소형화에 성공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더구나 북한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을 개발 중인 것으로도 알려졌다. 소련의 골프급 잠수함을 도입하여 독자적인 중거리 SLBM을 개발했다고 한다. 또한 북한이 8월에 발사실험을 한 신형 단거리 지대지미사일은 예전 핵탄두를 장착했던 소련의 SS-21 지대지미사일을 개량한 것이라고 한다. 북한이 핵무기 소형화에 성공했다면 남한은 물론 미국도 북한의 핵공격 사정권 안에 들어간 것이나 마찬가지다.

북한의 핵위협이 동북아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다. 현재 북한의 핵확산에 대한 의혹들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 이스라엘의 정보전략부 장관은 북한이 이란에 미사일과 핵개발 기술을 제공해 왔고, 이란은 북한에 핵개발 자금을 지원해 왔다고 말했다. 올리 하이노넨(Olli Heinonen) 국제원자력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전 사무차장은 북한이 이란에 원심분리기 기술을 이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말하기도 했다.

의도한 것이든 아니든 남한과 미국에 대한 가장 큰 북한의 강경행위는 핵실험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핵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북한의 최대목표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필요에 의해 북한은 핵실험 시기를 정

---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핵실험은 최대의 외교적 강경행위이기도 하지만, 실험을 하는 시기는 주변국의 대응을 고려치 않고 결정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만일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한다고 했을 때, 주변국의 대응이 예전과는 다른 강도 높은 대응을 할 것이라는 점이다. 어쩌면 오바마 정부는 2005년 방코델타아시아(Banco Delta Asia: BDA) 금융제재보다 강력한 금융동결을 실시할 가능성도 있다. 윤병세 외교부장관도 북한이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반발해 핵실험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이번에는 예전과는 다른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단호한 대응에 힘을 합칠지는 두고 볼 일이다. 만일 이 두 국가가 대북한 제재에 협력을 한다면 북한에게는 심각한 압력으로 작용할 것은 분명하다.

만일 기술적인 면에서 핵실험이 필요한 시기가 오면 북한은 핑계거리를 마련할 것이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구실로 삼을 수도 있고, 체면손상을 입은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을 트집삼아 핵실험을 감행할 수도 있다. 북한의 핵실험 주기가 3~4년이라면, 2015년에는 북한의 위협만이 계속되겠지만 장담할 수는 없다.

- 홍우택 북한연구센터 연구위원



# II

북한정세 ...







---

## 1. 정치동향

2014년도 북한 정치의 최대 화두는 장성택 숙청에 따른 어수선한 민심을 수습하고 권력구조를 안정화하여 김정은 유일적 영도체계를 조속히 확립하는 것이었다. 2013년 신년사에서는 ‘유일적 영도체계’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나, 2014년 신년사에서는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에 대한 언급을 명확히 하였다. 그간 김정은이 국정 경험이 일천하다는 이유로 김정은 정권의 권력구조가 후견지배체제, 집단지도체제 등으로 추정되었으나, 북한은 장성택 숙청을 통해 김정은의 유일영도의 확립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2014년 연초부터 김정은의 유일적 영도의 모습을 부각하는 조치를 취했다. 북한 군중대회에서 ‘김정일 찬양가’는 사라지고 김정은을 찬양하는 노래가 집중적으로 불리었다. 아울러 북한 매체에서 김정일의 사진이 점차 자취를 감추었다. 노동신문은 2013년 1월 김정은의 생일(1.8)을 앞두고 김정일 부자가 현지 시찰하는 사진을 잇달아 게재했지만 2014년에는 김정은의 사진만 게재하였다.

또한 북한 군부에 김정은 친정체제를 구축하는 노력이 지속되는 동안 전사회적으로는 김정은 유일영도체계 확립을 위한 ‘사상전’이 진행됐다. 2월 김정은 시대 들어 처음으로 당 사상일꾼대회를 개최해 사상전을 전개했으며, 전국예술인대회를 열어 문화예술의 선전·선동 기능을 강조했다. 북한 매체는 김정은의 ‘위대성’을 부각하는 ‘혁명일화’를 잇달아 게재하고 그를 주민들의 ‘아버이’로 묘사하는 등 우상화 작업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특히 김정은은 제8차 사상일꾼대회(2.24)가 “혁명대오의 사상의지적 통일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가는 데서 우리 당

---

역사에 특기할 또 하나의 역사적 분수령으로 된다”며 대회가 장성택 세력 숙청 작업을 지속하는 가운데 열린다는 점을 부각했다. 이후 당원과 노동자, 학생 등 각계각층에서 김정은의 ‘백두혈통’과 ‘유일적 영도’, ‘수령 결사옹위’ 관철을 위한 사상교양 강화가 연일 강조되었다. 이는 장성택 숙청으로 인한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를 정리하고, 김정은의 유일지배에 대한 신념을 확실히 주입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더불어 김정은의 ‘제도적 리더십’에 더해 ‘인격적 리더십’을 고취하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먼저, 북한은 고아와 무의탁 노인을 비롯한 취약계층 보호를 특별히 강조하는 가운데, 김정은을 ‘자애로운 지도자’로 부각하는데 공을 들였다. 김정은은 고아 양육시설인 육아원과 애육원 방문을 통해 그의 ‘인민 사랑’을 한껏 부각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김정은은 ‘어리다는 것’이 약점이 아닌, 오히려 ‘시대의 젊음’으로 포장하여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려는 선전활동을 강화하였다. 장성택 처형 이후 ‘어린 지도자’에 대한 불안감을 차단하고 세대교체의 정당화를 내세우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수령과 인민이 혈연적 관계라며 김정은에게 ‘아버지’ 이미지를 입히려 총력을 다했다. 김정은의 대중적 기반을 공고화하기 위해 선대 지도자들보다 20년이나 앞당겨 김정은에게 ‘아버지’ 호칭을 일반화한 것이다. 이러한 인격적 리더십의 강화를 통해 북한은 김정은을 김일성, 김정일과 동격화시켜 명실상부한 ‘3대 수령’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하였다.

장성택 숙청에 이은 ‘종파잔재 청산’은 일년 내내 진행되었다. 2014년 초에는 장성택의 당행정부와 평양시 건설사업 라인, 친인척 및 광물 관련 내각 인물 등을 중심으로 숙청이 진행되었고, 2014년 중반에는 주로 군부 또는 군과 연계된 당 엘리트들이 정비되었으며, 하반기에는

---

당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중견엘리트, 공안계 간부들이 숙청되었다. 대표적으로 문경덕 평양시당 책임비서, 리영수 당 근로단체 비서, 리태남 내각부총리 등이 북한정치에서 사라졌다. 최근 노동신문(10.7)에서 “혁명적 원칙과 비타협적인 투쟁으로 당 안에 숨어있던 현대판 종파분자들을 단호히 적발 숙청했다”며 장성택 숙청을 거론한 후, “수령의 사상과 영도에 도전하는 불순이색분자들을 무자비하게 죽탕쳐 버리려는 혁명적 기개의 분출”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아, 숙청작업은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숙청이 진행되는 동안 김정은은 당·군 엘리트의 기강 세우기를 강화하였다. 김정은은 매우 이례적으로 당의 책임일꾼들에게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답사행군(7.30)을 직접 지시하였고, 잦은 보직 변동과 계급 강등으로 군 엘리트의 군기를 잡고자 하였다. 특히, 김정은은 각종 군사훈련을 참관 또는 지도함으로써 군 영도자로서의 위상을 드러냈고, 군중·군단급 지휘성원 사격대회(3.17), 해군지휘관 수영대회(7.2) 등을 통해 군에 대한 장악력을 과시하였다.

2014년 북한 정치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김정은 정권 권력진용의 기본 열개가 마련되었다는 점이다. 수차례 핵심엘리트의 변동을 겪으면서 김여정의 백두혈통, 최룡해의 빨치산혈통, 황병서의 당·군 테크노크라트 집단 등 ‘삼각편대’라는 새로운 조합이 만들어진 것이다. 장성택 숙청과 더불어 가계의 대표격인 김경희의 정치적 위상은 무너졌으나, 김여정이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당부부장이라는 직책으로 비교적 무난하게 백두혈통의 영향력을 복구하고 있다. 빨치산혈통의 대표주자인 최룡해는 황병서에게 총정치국장을 물려준 이후에도 당정치국 상무위원, 당비서, 국가체육지도위원장 등 사실상 2인자로서의 확고한

---

입지를 다졌다. 오일정 당부장과 오금철 인민무력부 부총참모장은 빨치산혈통의 떠오르는 별이라 할 수 있다. 수십 년간 당조직지도부에서 활동한 당료 출신인 황병서는 총정치국장에 임명되어 군에 대한 당적 지도를 강화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이러한 엘리트진용의 기본 열개가 구축되는 과정에서 세대교체가 상당한 수준으로 진척되었다. 김정일 장례의원 50위 내 핵심엘리트들이 김정은 정권 3년 동안에 정치적 숙청이나 노령으로 인해 약 60%가 사망하거나 활동을 중단한 것이다. 김정은은 그 빈자리에 자신의 측근인 50~60대를 발탁하여 세대교체를 진행하면서 친정체제를 강화했다. 내각에서는 임철웅, 김덕훈, 최영건 등 기술관료 출신의 신진인사가 새로 부총리에 임명되었고, 군부에서는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리영길 총참모장, 리병철 당부장, 변인선 총참모부 작전국장 등이 중용되었다.

당을 중심으로 한 제도적 안정화가 정착되고 있다. 2014년에 당중앙 군사위원회 확대회의(3.17, 4.27), 정치국 회의(4.8), 최고인민회의 회의(4.9, 9.25) 개최 등 당과 국가기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주요 정책을 결정하였다. 특히 최고인민회의 회의를 하루 앞둔 4월 8일 당정치국 회의를 개최하여 최고인민회의에 제출될 국가지도기관 구성안을 토의하고 조직문제를 취급하였는데, 김일성 시대처럼 당정치국에서 미리 결정된 사안들을 최고인민회의에서 형식적 절차를 밟아 정당성을 부여하는 모양새를 취해 당국가체제 복원의 의미가 있었다. 또한 총정치국장에 당료 출신인 최룡해와 황병서를 잇따라 임명하고, 당중앙군사위원회에서 군부의 조직문제를 논의하여 당회의의 통해 군부 인사를 결정하였다.

이렇듯 김정은 정권 3년차에 정치적 안정성은 일단 확보되는 모습이

---

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구조적 불안정성이 배태되어 있음이 분명하다. 장성택 숙청에 따른 정책결정과정의 균형과 합리적 조율능력 쇠퇴는 정책실패를 초래하여 체제위기를 가속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권력층 내 누구도 자칫 반동분자, 적대분자로 지탄 받을 수 있는 정책적 건의는 극력 회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풍토가 더 악화되면 정책과정에서 합리적인 건의나 조율 시스템이 붕괴하고 오직 김정은의 즉흥적 판단과 권력층의 충성경쟁, 자기보신, 요지부동, 맹목적 복종에 의해 정책이 이뤄지는 구조가 확립될 수 있다.

2015년 북한 정치의 최우선 과제는 ‘김정은식 북한’ 만들기로 전망된다. ‘김정은 조선’, ‘김정은 백두산강국’ 건설 프로젝트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2015년은 해방·당창건 70주년, 한국전쟁 65주년, 6·15 공동선언 15주년, 탈상 3년의 해이다. 이제 북한은 백두혈통의 정통성만으로는 더 이상 김정은 정권의 정당성이 보장될 수 없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북한은 지난 3년을 ‘성스러운 3년’이자 ‘불덩이처럼 뜨겁게 흐른 3년’으로 평가하여 공식적으로 유훈통치를 종결하고, 2015년부터는 김정은이 ‘역사의 조종간’을 직접 잡고 있음을 선전할 것이다.

2015년 북한의 정치일정은 ‘당창건 70주년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만드는 데 집중될 것이다. 10월 10일 당창건일에 즈음하여 최고인민회의와 당대표자회 개최가 유력하다. 북한은 이 양대 회의를 통해 김정은 정권의 엘리트 진용 정착, 핵무력·경제건설 병진노선의 강화 등 김정은 색채의 새로운 정책적 성과를 부각시키려 할 것이다. 인민생활이 향상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적 성과를 자랑해야 하는 ‘당대회’ 보다는 김정은 친정체제를 과시하는 ‘당대표자회’를 개최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당대표자회를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만들기 위한 ‘조선속도’

---

‘000일 전투’, ‘공납사업’ 등 대규모 대중동원운동이 실시될 것이다. 그러나 이 노력동원으로 인해 북한 주민들의 불만이 증폭될 수도 있다.

2015년에는 이미 구축된 백두혈통(김여정)-빨치산혈통(최룡해)-당·군 테크노크라트(황병서) 등 ‘삼각편대’가 강화될 것이다. 이 삼각편대 하에서 2014년 권력상층부의 세대교체와 종파청산에 이어, 2015년 상반기에는 중상층 엘리트의 종파잔재 청산에 집중하여 김정은 친정체제를 공고화하려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당대표자회에서 ‘종파적결 완료’라는 ‘김정은의 치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1956년 8월 종파사건 이후 1958년 당대표자회에서 종파청산 종결을 선언한 바 있다.

김일성 리더십을 김정은에게 덧씌우고자 하는 북한의 노력은 2015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젊은 이미지를 앞세우고,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전통적 지지계층 및 여성·아동·노인 등 ‘특정보호대상’을 배려하는 ‘친민적’ 리더십을 부각시키려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당 중심(조직지도부, 총정치국)의 정치시스템 강화와 제도적 안정화는 정착단계에 돌입할 것이다. 당정치국, 당중앙군사위원회, 최고인민회의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정책을 결정함으로써 여전히 취약한 김정은의 통치능력을 보완하고 통치의 정당성을 과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북한 권력층의 ‘공동운명체 의식’이 약화되고 점차 이익선회가 명확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탈상이라는 정치적 허니문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권력과 이권을 위한 이합집산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제 더 이상 권력과 이권을 둘러싼 정치적 충돌은 북한정치사에서 예외가 아니다.

- 김갑식 통일정책연구센터 부연구위원

---

## 2. 경제동향

### 가. 2014년 경제정책 방향과 특징

2014년은 김정은 체제의 색깔이 점차 구체화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출범한지 3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이다. 김정은 체제 하에서 북한의 경제정책은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대외 경제개방의 확대와 경제관리체계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국가의 생산력 증대라는 핵심적인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2014년 북한의 경제정책은 신년사와 최고인민회의의 보고문 등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다. 신년사에서 북한은 2013년의 경제부문의 성과로 농업부문과 건설분야의 실적을 강조하였다. 식량의 증산과 함께 대규모 구조물 건설을 주요 성과로 자랑하면서,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은하과학자거리’, ‘문수물놀이장’과 ‘마식령스키장’ 등을 거론하였다. 건설부문의 성과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분위기는 2014년의 경제부문 정책 방향에도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신년사에서 제시된 올해 경제부문의 추진과제들을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이 발견된다. 첫째, 경제부문의 사업을 정치부문이나 군사부문의 사업보다 우선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경제부문을 가장 우선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둘째, 경제부문 내에서도 우선순위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북한은 핵심 전략부문으로 농업부문에 이어 건설부문과 과학기술부문을 강조하였다. 특이한 점은 건설부문을 핵심부문으로 전면으로 내세운 점과 과학기술을 농업부문과 함께 강조한 부분이라고 할



---

수 있다. 정책 과제를 강조하는 방식이 과거와는 달리 상징적인 부문(농업), 실적관리부문(건설), 그리고 핵심 동력(과학기술) 등 다른 성격의 과제들을 모아서 전략부문으로 강조한 것이다.

셋째, 경공업부문의 과제가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으로 나타난 부분이다. 그동안 농업과 함께 강조되어 왔던 경공업에 대한 언급이 상대적으로 중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1차 회의에서 발표된 내각 인사에서 경공업상이 포함되지 않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향후 경공업정책의 변화 가능성에 관심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넷째, 신년사에서 우선적으로 강조된 부문과 실제 예산 증가율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가장 먼저 언급한 농업, 건설,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예산의 증가율이 지난해와 비교해서 변화가 없거나(농업) 오히려 크게 감소(과학기술부문 6.7%에서 3.6%로 하락, 기본건설부문은 5.8%에서 4.3%로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오히려, 신년사의 경제부문 후반부에서 언급한 체육 관련 예산만 지난해 6.1%에서 17.1%로 급증하였다.

신년사에서는 이외에 경제관리방식의 개선 문제도 언급하면서 주요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경제사업에 대한 지도와 관리에서 ‘국가의 통일적 지도’, ‘기업체의 책임성과 창발성 제고’, ‘근로자들의 생산과 관리에서 주인의식 고취’ 등이 강조되고 있다. 국가의 통제 하에서 기업들의 자율성을 확대해서 근로자들의 자발적 노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 나. 2014년 경제부문의 주요 실적

### (1) 경제관리방식의 개선 조치

2013년에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진 ‘새로운 경제관리개선 조치’에 대한 소식이 조선신보에 소개되면서 구체적인 내용의 일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sup>5</sup> 이에 따르면, “작년 3월부터는 전국의 모든 생산단위들이 경영활동을 독자적으로 벌러나가도록 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국가계획을 벗어난 생산을 자체의 결심으로 조직하고 판매하며 종업원들의 보수, 복리후생 등도 자체의 실정에 맞게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북한의 경제관리방식 개선 조치와 관련된 내용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되었는데, 이를 종합하면 크게 산업부문과 농업부문으로 구분하여 정리할 수 있다.

산업부문에서는 공장·기업소와 같은 생산단위에 계획 수립 및 계약의 체결권, 판매 및 수익의 자율 처분권 등에 더하여 수출업무까지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경영 자율성이 폭 넓게 부여되었다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다. 농업부문에서는 기존의 20~30명 규모의 분조를 더욱 세분화하여 3~5명의 규모로 나누어 포전을 맡기는 ‘포전담당책임제’를 도입하였다고 한다. 포전담당제의 핵심은 포전에서 생산된 수확물의 30%는 현물이나 시장가격으로 분배해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도입한 경제관리개선 조치들은 국가의 계획체계와 생산수단의 공유제라는 사회주의 원칙을 고수한다는 원칙 하에서 진행된다는 점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

---

5 “경제관리개선 조치 실시 1년, 생산현장의 변화 -증산증수익의 성과를 노동자들에게 환원-,” 『조선신보』, 2014년 4월 2일.

---

한 북한당국은 이러한 경제관리개선 조치가 실험과 연구단계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착오나 성과에 대한 확인과정을 거쳐서 제도화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포전담당제’의 경우에도 올해는 가뭄과 비료부족으로 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하여 분배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북한의 경제관리개선 조치들은 일정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야 자리를 잡아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 (2) 주요 생산부문의 실적

북한은 올해 년 초부터 농업생산량 증대를 강조하면서 다양한 노력을 집중시킨 것으로 알려졌으며, 올해는 작년과 비슷한 수확량이 예상된다.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United Nations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의 ‘식량전망(Food Outlook)’ 보고서에 따르면(연합뉴스, 10.12), 올해 쌀 생산량의 경우 190만 톤이 예상되어 작년과 같은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 러시아소리(10.12)에서도 올해 곡물생산량을 600만 톤으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에 달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내부에서는 올해 심각한 가뭄과 비료 부족으로 인하여 작년에 비해 40만톤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내년 식량사정이 다소 악화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RFA, 10.13).

건설부문에서는 12월 중순, 괄목할만한 대규모 건축물의 완공 실적이 발표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평양시 고층아파트와 국가기관 건물의 붕괴사고 소식이 연이어 전해지고 있다. 그 중에서 5월 13일 평천구역 23층 아파트 붕괴사고는 공개 사과 및 책임자 처벌 등의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후에도 건설현장의 붕괴사고가

---

전해지기는 했지만 공식적으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김정운의 신축기관 방문 행사가 보도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식료공장과 평양육아원·애육원, 과학자휴양소, 위성과학자주택지구, 교육자아파트,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등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북한당국이 올해 계획된 생산량을 초과달성했다고 선전하고 있는 공장이나 기관들은 다음과 같다. 원산 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 13.8% 초과달성(조선중앙방송, 11.3), 화학공업성 소금생산 전년 대비 2.3배(조선중앙통신, 11.4), 차가평시멘트공장 생산 전년 대비 1.3배(노동신문, 11.6), 북청군 신창수산협동조합 연간계획 1.5배(노동신문, 11.7), 함흥청년전기기구공장 연간계획 초과(노동신문, 11.9), 혜산강철공장 연간계획 초과(노동신문, 11.10), 립업성 산하 각지 사업소 중에서 20개 단위가 연간계획 완수(노동신문, 11.14), 개천탄광 연간 석탄생산계획 조기 완수(노동신문, 11.17), 1,300여개 대상에 대한 CNC화·현대화 실현(노동신문, 11.21), 레성강청년발전소 준공(조선중앙통신, 11.28), 라선제지공장, 원산영예군인수지가공공장, 유선탄광 연간계획 완수(노동신문, 11.30), 라진신발공장, 청단옷공장 연간계획 완수(노동신문, 12.2), 원산통풍기공장 연간계획 초과(노동신문, 12.7), 평양시 장천지구건설 마감단계(노동신문, 12.10), 금야강2호발전소건설 마감단계(노동신문, 12.11) 등이다.

### (3) 대외 경제관계의 주요 특징

북한은 국가급 경제특구 5개에 더하여 지난 해에 지방급 경제개발구를 19곳에 지정하고, 이의 추진을 위해 대외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파악된다. 8월에 라선국제상품전시회와 라경제무역지대토론회

---

를 개최하였으며, 10월에는 중국 단둥에서 북중 경제무역포럼을 개최하고 출입국 수속의 간소화와 ‘원스톱 서비스’ 등 투자환경 개선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2014년 북한의 대외경제협력부문에서 눈에 띄는 특징은 중국과의 경제관계가 정체상태를 보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KOTRA가 발표한 8월까지의 실적을 보면, 2014년 1~8월의 교역실적은 40억 5,500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대북한 수출은 1.3% 감소하였고, 수입은 0.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감소세는 중국이 원유를 포함하여 무연탄제품(HS 27) 수출이 감소(동기 대비 72% 감소)했으며, 차량 및 그 부품의 수출이 전년 동기대비 25.9% 감소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중국과 북한 사이의 의류임가공사업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의류제품 수입이 전년 동기대비 42.1% 증가하였다. 우리가 주목하는 부분은 중국의 원유 수출 상황이다. 공식적인 통계로는 중단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은 휘발유, 비행기 원료 등 기타 가공유제품의 수출을 증대(지난 7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47% 증가)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과의 경제관계가 정체된 상황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는 활기를 보이고 있다. 북한과 러시아의 경제협력이 가장 두드러진 분야는 철도부분이다. 북한 내륙의 중요한 산업 철도인 재동역-강동역-남포역 노선의 현대화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조선중앙통신, 10.21). 러시아가 사업에 필요한 자금과 기술을 제공하고 북한은 석탄을 비롯해 비철금속 등을 대가로 지불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양국 사이의 농업협력도 확대되고 있다. 북한이 아무르주의 농지 1

---

만~1만5천 ha 정도를 임대해 농작물을 재배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연합뉴스, 11.14). 지난 10월부터는 북한과 러시아가 무역 대금의 루블화 결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2014년 양국 경제관계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다. 2015년 북한경제의 전망

2015년 북한은 경제강국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핵심 목표로 제시하고 생산력 강화 및 구체적인 생산실적 확대를 위한 과제를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농업부문 생산 증대가 우선적으로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신문(2014.11.27)은 내년 농사 차비를 강조하면서, “다음해에...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는 해로, 만풍년의 낱알향기가 온 나라에 차넘치고...”라고 역설하고 있어 농업부문에 대한 강조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건설부문의 경우에는 올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아파트붕괴사고 등으로 2015년에도 2014년처럼 전면내세우기는 부담스러울 것으로 보인다.

경제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들은 자율성 확대를 통한 생산력 증대 유도라는 방향성은 유지하면서 여전히 실험적인 성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조치들의 성과들을 평가하기에는 추진 환경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뒷받침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소수의 기업만이 정부가 기대하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농업부문에 도입된 ‘포전관리제’의 경우에는 가뭄과 비료 부족으로 목

---

표량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분배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부족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어 농민들의 불만이 크다고 한다.

북한당국의 시장에 대한 정책은 활용과 견제라는 '이중성'이 유지·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으로는 정부가 제공하지 못하는 상품의 생산 및 유통이라는 측면은 적절하게 활용하면서 국가의 재정 확보라는 추가적인 이점을 추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이 국가의 통제력을 지나치게 벗어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국영기업과 국영상점이 제 기능을 회복하여 시장 기능을 점차 약화시키도록 하겠다는 의도를 견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북한경제의 최대 약점은 대외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사실이다. 특히 대외무역과 외국인의 투자실적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인 수준이며, 북한의 외교적 고립이 심화되면서 이러한 현상은 심화되고 있다. 북한당국의 이러한 편향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2015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러시아와의 경제협력 노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제적인 유가하락으로 러시아 경제상황이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최근에 거론되고 있는 대규모 투자사업은 제대로 추진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이 부진할 경우 북한당국은 중국과의 경제관계 회복 및 한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임강택 북한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

### 3. 사회동향

2014년 북한 사회분야에서 특징적 양상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장성택 숙청 이후 김정은의 리더십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사회 전반에 대한 사상적·물리적 통제를 강화한 점이다. 둘째,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론에 입각한 체육·과학·건설·관광 등 4대 부문에 중점을 둔 정책의 추진이다. 셋째, 자본주의 문화와 정보 유입에 따른 도시의 변화와 계층화가 보다 빠르게 진행된 점이다.

우선 2014년은 장성택 숙청 이후 종파의 뿌리를 제거한다는 차원에서 권력 엘리트들에 대한 잇단 물갈이와 인적 교체를 활발하게 진행한 해였다. 이와 동시에 사회 전반에 대한 사상적·물리적 통제가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특히 2014년은 어느 해보다 ‘사상전’을 강조하였다. 연초부터 김정은 정권 들어 처음으로 당 사상일꾼대회를 개최하고 사상전을 독려한 바 있다. 이어 3월 직업동맹, 5월 보위부문, 8월 조직부문, 9월 교육부문 및 청년동맹 등 각 기관·단체별 군중대회 및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사상중시와 사상 선행의 원칙을 강조하였다. 각 군중대회를 통해 소위 ‘4대 교양’으로 김정일애국주의교양, 신념교양, 계급교양, 도덕교양이 강조되었다. 또한 조직생활 강화 차원에서 철저한 ‘생활총화’ 실시를 강조하였다.

2014년에도 자본주의 문화 및 외부정보 유입을 차단하려는 주민들에 대한 물리적 통제가 지속되었다. 김정은은 2013년 한국영화 및 음란물 시청 등 ‘황색바람’ 차단을 위해 관련자 공개처형 등 강력한 단속을 지시한 바 있다. 2014년에도 ‘부르주아 사상문화 침투’를 막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또한 물리적 통제 장치를



---

마련하는 데도 힘을 기울였다. 구체적으로 주민들을 변질시키는 컴퓨터와 ‘기억기(USB)’에 대한 단속, 휴대폰 저장 기능 차단, 접경지역 휴대폰 사용을 감시하는 보위부 전파탐지과 확대 편성, 해외근무자 휴대전화 검열, 접경지역에서의 밀수 및 탈북자 연계 행위 등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및 검열, 상습 도강지점에 철조망 및 감시카메라 설치 등이다. 특히 탈북 및 밀수 근절을 위해 도 보위부 산하에 ‘특별기동대’를 설치함으로써 북중 접경지역의 탈북·밀수 단속망이 국경경비대, 인민보안부, 국가안전보위부 등 3중으로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둘째, 2014년은 2013년에 이어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에 박차를 가한다는 차원에서 건설·체육·과학·관광에 중점을 둔 정책 추진이 두드러진 해였다. 사회주의 문명국은 ‘세계적 추세’에 맞는 국가 위상을 갖겠다는 것으로, 이를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마식령속도’에 이어 ‘조선속도’, ‘김정은 공격정신’ 등이 새롭게 구호로 등장했다. 2014년은 새롭게 등장한 ‘속도’ 구호를 기초로 건설, 체육, 과학, 관광 등에서 활발한 움직임이 전개되었다.

건설부문에서는 2013년에 이어 2014년에도 마식령 스키장 건설을 체제 선전에 적극 활용했다. 북한은 마식령속도를 “김정은 시대의 새로운 진군속도”라고 강조하고 마식령 스키장 건설 공로자에 대거 표창을 하는 한편 평양 주재 외교관을 마식령 스키장으로 초청하기도 했다. 체제 선전과 더불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눈에 띄는 부분은 ‘위성과학자거리’, ‘미래과학자거리’ 조성 등 과학부문 종사자들의 주거에 김정은이 큰 관심을 둔 부분이다.

한편 올해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평양 중구 평천구역 아파트 붕괴 사고였다. 2010년 이후 건설붐이 조성되면서 평양을 비롯한 도시들

---

에는 대규모 고층 아파트들이 우후죽순 건설되고 있다. 김정은의 치적으로 강조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건설 이권을 둘러싼 권력기관의 이해관계와 부실시공 등이 있었다. 2014년 아파트 붕괴 사고는 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김정은은 김책공대 교육자 아파트 건설 현장을 여러 차례 시찰하는 등 아파트 건설에 의욕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런 분위기에 부응해 북한 당국은 10년 만에 건축가 대회를 개최하여 “건설 대번영기를 열자”고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체육부문은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가장 두드러지게 강조되는 부문 중 하나이고 2014년은 그 어느 해보다 열기가 뜨거웠다. 북한은 체육 열기를 “오늘의 조선을 특징짓는 중요한 징표로,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인 조선이 머지않아 달게 될 또 하나의 문패는 체육강국”라고 까지 강조했다. 과거 김정일이 예술분야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통해 자신의 이미지를 구축한 측면이 있다면, 김정은은 스포츠를 통해 대내외에 자신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대외적으로 체육행사를 직접 관람하고 선수를 격려하는 모습을 통해 주민들에게 친근한 이미지를 심어주려는 행보로도 볼 수 있다. 특히 올해 주목을 끄는 부분은 북한이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11개로 종합 7위라는 성과를 거둔 점이다. 김정은이 ‘체육강국’ 건설을 정책과제로 제시한 이후 첫 국제대회 성과라는 점에서 이미지 구축과 내부 결속에 있어서 성공적인 한 해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체육열기는 올해 축구 드라마 제작이나 생활체육을 통해 더욱 강조되었다.

과학부문에 대한 김정은의 관심은 2014년에도 이어졌다. 김정은은 국가과학원 현지지도를 통해 “아낌없는 과학기술 투자”를 강조하는 한편 연풍호 과학자휴양소 건설현장 시찰, 평양 축섬에 ‘과학기술전당’

---

건설 지시, 은정과학지구에 과학연구소 건설 지시 등 과학부문에 각별한 애정을 보였다. 또한 2013년에 교육법 개정을 통해 과학기술에 대한 내용을 보강한 이후 2014년에는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제시하였다.

관광부문은 2014년 가장 활발한 움직임과 변화가 있었다. 2014년 북한은 관광을 외화벌이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관광사업을 추진했다. 특히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중국 동북 3성을 겨냥한 ‘접경지역 관광활성화’에 주력한 부분이다. 기존 평양 중심의 관광에서 벗어나 북중 접경 도시에서 다양한 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골프관광, 자전거 관광, 전세기 관광, 낚시관광 등 다양한 상품들이 등장했고 이와 함께 중국 관광객 입국 수속 간소화 등에 따라 중국 관광객이 급증했다. 이런 관광산업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관광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2014년 4월에는 ‘평양관광대학’을 설립하고 각 도 사범대학에도 ‘관광학부’를 신설하기도 했다. 한편 김정은은 원산·금강산 일대에 ‘국제관광특구’를 설치하기도 했다.

한편 사회 변화의 측면에서 주목할 부분은 우선 민간투자를 통한 건설과 부동산시장의 활성화이다. 김정은이 조성한 건설 붐을 타고 민간자본이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건설에 투자돼 활발하게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졌다. 민간자본이 투입된 건설시장은 자재거래, 인력시장을 활성화하면서 북한의 시장화를 촉진하는 동력이 되고 있다. 지방도시에서는 당국의 묵인과 협력 속에 민간자본에 의한 판매용 아파트가 활발하게 건설되고 있다. 이런 건설로 인해 도시공간의 변화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소득과 지위에 따른 거주 계층화가 뚜렷해지고 있다. 특히 주택 거래가격의 상승과 연동된 물가상승에 따라 빈부의 차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

2015년에는 정책방향 및 구호 측면에서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이 보다 강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4년에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이라는 상위 목표 속에 건설·체육·과학·관광의 4대 부문을 각별히 강조하면서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2015년에도 건설·체육·과학·관광의 4대 부문이 계속 강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2015년은 당창건 7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이를 빛낼 수 있는 가시적 성과와 새로운 비전을 담는 구호가 이 4대 부문과 관련해 새롭게 등장하면서 강조될 가능성이 높다. 선동 구호 측면에서 ‘마식령속도’, ‘조선속도’와 더불어 2014년에 등장한 ‘김정은 공격정신’을 비롯한 김정은식 새로운 선동 구호가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5년에는 북한인권문제와 관련 유엔 안보리 논의 등 국제사회의 구체적인 움직임이 예상되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체제 내부 결속과 사회 통제에 주력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새로운 세대의 충성심을 다잡고 고취하기 위한 청소년을 상대로 한 사상교양 및 조직생활이 보다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북한이 최근 강조하고 있는 ‘4대 교양(김정일애국주의, 신념, 계급, 도덕)’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나 조치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예상되는 국제정세의 흐름상 체제 내적 결속을 위한 사회기강 확립에 무엇보다 주력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한 각 단위와 단체별로 당창건 70주년에 맞춰 군중대회의 열기가 그 어느 해보다 뜨거울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인권문제로 인한 외교적 고립 속에서도 관광 유치나 체육을 통한 대외적 교류는 계속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식 인권’을 간접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오히려 개방적으로 국제사회와의 교류를 강조하고 확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최근 관계가

---

가까워진 러시아로의 관광산업 확대를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미 증가세에 있는 중국 관광객 유치와 더불어 러시아 관광객 유치에 관심을 갖고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러시아 경제의 악화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외부의 시선을 의식해 주민들을 향한 김정은의 ‘애민’ 또는 ‘위민’의 행보가 보다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고아나 노인과 같은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회통제와 국경통제의 강화로 자본주의 문화 유입이나 정보의 유통이 위축되는 측면도 있겠으나, 극단적인 통제 조치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외부 세계와의 고립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내적으로 통제만 강조할 경우 주민 피로도가 증가하면서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시장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대한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을 통한 정보 유입과 자본주의 문화 유입을 막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마약, 밀수, 인신매매, 강력범죄 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통한 사회기강 잡기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홍민 북한인권연구센터 부연구위원

#### 4. 군사동향

2014년도에도 김정은은 군사적 리더십을 과시하는 차원에서 군사관련 현지지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정은은 선군통치를 위해서는 군대를 틀어쥐 정치지도자가 군대를 장악하는 데 머무를 것이 아니라 실제 군대를 지휘·통솔할 수 있는 군사사업에 능한 지도자로 군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김정은은 ‘무’를 겸비한 선군시대의 명실상부한 최고 선군정치지도자로서 자리매김하면서 군부장악과 동시에 그의 통치역량을 높이고자 하고 있는 것이다.

● 표 II-1 김정은의 현지 군사 지도활동 내용(2014년 1월~12월)

월	보도일	보도내용	수행자
1월	01.12	인민군 제534군부대 지휘부 시찰	최룡해, 김경옥, 황병서
	01.20	군 항공육전병구분대들 야간훈련 지도	최룡해, 리영길, 장정남, 변인선, 김격식, 김수길, 리병철, 박정천, 황병서
	01.23	군 제323군부대 전술훈련 지도	리영길, 김수길, 리병철, 김영철, 박정천, 황병서
	01.28	조선인민군 제323군부대 군인들과 기념사진 촬영	리영길, 김수길, 리병철, 황병서
2월	02.12	경기용총탄공장과 메아리사격관 방문	최부일, 마원춘
	02.18	군인들의 체육경기 관람	리설주, 리영길, 장정남, 서홍찬, 김명식, 리병철
	02.20	인민군 11월2일공장 현지지도	서홍찬, 황병서
3월	03.07	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2620군부대 비행훈련 지도	최룡해, 장정남, 윤동현, 리병철, 박정천, 한광상, 황병서, 홍영길, 마원춘

월	보도일	보도내용	수행자
	03.11	조선인민군 예술선전대 공연관람	최룡해, 장정남, 서홍찬, 김수길, 조경철, 황병서
	03.12	군사학교 교직원들의 사격경기 지도	최룡해, 장정남, 변인선, 서홍찬, 김수길, 김영철, 조경철, 황병서
	03.17	인민군 지휘성원들의 사격경기 지도	
	03.17	제188군부대 비행훈련 지도	최룡해, 리영길, 장정남, 김원홍, 최부일, 한광상, 김경옥, 황병서, 홍영철, 마원춘
4월	04.02	백두산 전적지 답사행군에 참가한 군 연합부대 지휘관들과 담화	최룡해, 장정남, 변인선, 서홍찬, 윤동현, 리병철, 김영철, 박정천
	04.20	조선인민군 제1차 비행사대회 진행	리영길, 장정남, 서홍찬, 황병서, 리병철, 장동운
	04.22	항공 및 반항공군 제188군부대 비행훈련지도	장정남, 서홍찬, 한광상, 황병서, 리재일, 김병호, 마원춘
	04.24	제851군부대 산하 여성 방사포 병구분대 포사격훈련 지도	
	04.26	제681군부대 관하 포병구분대 포사격훈련 지도	윤동현
	04.27	장거리 포병구분대 포사격훈련 지도	황병서, 리영길, 장정남
5월	05.03	인민군 제267부대 군인건설자들과 기념사진 촬영	황병서, 로경준, 김진근
	05.06	군인건설자들과 기념사진 촬영	황병서, 장정남, 김정관
	05.10	전투비행술경기대회 지도	리설주, 황병서, 변인선, 서홍찬, 조경철, 윤동현, 리병철, 김영철, 오금철, 박정천, 장동운
	05.14	항공 및 반항공군 제447군부대 시찰	황병서, 럽철성, 조경철, 윤동현, 홍영철, 마원춘

월	보도일	보도내용	수행자
6월	06.13	여도방어대 시찰	황병서, 변인선, 최통해, 한광상
	06.14	인민군 제863군부대 시찰	황병서
	06.16	해군 제167군부대 시찰	황병서, 변인선
	06.27	조정밀화된 전술유도탄 시험발사 지도	황병서, 변인선, 박정천, 홍영철
	06.30	전술로켓 발사훈련 지도	황병서
7월	07.01	화도방어대 시찰	황병서, 박정천
	07.02	해군 지휘관들의 수영 능력 판정 훈련 지도	황병서, 변인선, 박정천
	07.05	섬 상륙전투훈련 지도	황병서, 리영길, 변인선
	07.07	동해안 옹도방어대 시찰	황병서, 박정천
	07.10	전술로켓발사훈련 현지지도	황병서, 박정천, 윤동현, 홍영철
	07.11	평양 국제비행장 항공역사 건설장 현지지도	황병서, 마원춘
	07.15	민경초소 등 시찰	황병서, 리영길, 서홍찬, 박정천
	07.15	포실탄사격훈련 지도	황병서, 리영길, 서홍찬, 박정천
	07.18	군 예술선전대 공연 지도	
07.26	인민군 전략군의 로켓 발사 시험 또다시 현지지도	황병서, 리영길, 윤동현, 리병철, 오금철, 박정천	
8월	08.15	전술로켓탄 시험발사 지도	황병서, 리영길, 변인선, 박정천, 홍영철
	08.20	완공된 조선인민군 제621호 육종장 현지지도	황병서, 김정관
	08.24	인민군 11월2일공장 현지지도	황병서, 서홍찬, 한광상
	08.28	강하 및 대상물 타격훈련 지도	황병서, 리영길, 변인선, 오금철, 리병철, 방관복, 장동운



월	보도일	보도내용	수행자
	08.30	군인들과 기념촬영	황병서, 리영길, 변인선, 오금철, 리병철, 김명식, 방관복, 장동운, 박태수
10월	10.19	전투비행사들 훈련 지도	황병서, 최룡해, 오일정, 한광상
	10.29	군인식당 현지지도	리설주, 최룡해, 박봉주, 김기남, 김양건, 한광상, 리재일, 박명철, 마원준
	10.30	항공 및 반항공군 전투비행사들의 검열비행훈련 지도	최룡해, 황병서, 오일정, 한광상
11월	11.15	조선인민군 2월20일 공장 현지지도	최룡해, 황병서, 서홍찬, 한광상, 리재일
	11.17	인민군 제534군부대 산하 종합 식료 가공공장 현지지도	황병서, 서홍찬
	11.19	제567군부대 산하 18호 수산사업소 현지지도	황병서, 서홍찬, 윤동현, 리병철, 박정천, 김양건, 오일정, 한광상, 박명철, 리재일, 김여정
	11.21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991군부대 시찰	황병서, 리병철, 서홍찬, 박정천
	11.23	인민군 연합합동훈련 지도	황병서, 리영길, 오일정, 한광상
	11.28	항공 및 반항공군 여성 추격기비행사 비행훈련 지도	황병서, 조경철, 오금철, 오일정, 한광상
12월	12.02	인민군 제963군부대직속 포병중대 시찰	황병서, 박정천
	12.05	인민군 제1313군부대 시찰	황병서, 리영길, 김영철, 최귀현
	12.08	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458군부대 시찰	황병서, 오일정, 한광상, 리병철
	12.13	해군 제189군부대 시찰	최룡해, 황병서, 리영길, 오일정, 한광상

---

2014년에도 북한은 한반도 군사적 긴장조성을 위한 각종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였는데 이것 역시 김정은의 최고군사지휘권의 정통성 강화방안의 하나로 이해된다.

2월 25일 북한 경비정이 서해 북방한계선을 세 차례 침범하여 서해해상의 긴장을 고조시켰다. 2월 27일 오후, 강원도에서 스커드(사거리 300~1,000km) 등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4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하였다. 3월 들어 북한의 군사적 도발은 더욱 심화되었다. 신형 300mm 방사포 4발 발사(3.5), 단거리 로켓 25발 동해상에 기습 발사(3.17), 46발의 단거리 로켓 재발사(3.24), 노동미사일 2발 기습발사(3.27) 등이 있었다. 북한 당국은 한미연합군사훈련(키 리졸브)이 시작된 이후 군사적으로 도발을 강화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맞불’ 성격이 강하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은 이산가족상봉 행사 및 한·미·일 정상회담 개최 시에 감행된 것으로 보아 한미군사훈련 중단을 압박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

6월 들어 또다시 북한은 동해상으로 스커드 미사일 2발을 발사(6.29)하였는가 하면, 7월에는 개성 북쪽에서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동해로 발사(7.13)하고, 이어 300mm 방사포로 추정되는 단거리 발사체 4발이 발사되기도 하였다. 이 역시 UFG 합동군사훈련에 대응하는 성격이 짙다. 특히 10월 들어, 북한은 경비정 1척이 서해 북방한계선(Northern Limit Line: NLL)을 침범함에 따라 5년 만에 다시 서해 교전(10.7)이 있었다. 또한 북한은 남측 민간단체가 날린 대북전단을 향해 14.5mm 고사 기관총(고사총) 10여발을 발포(10.10)함으로써 한반도 긴장상황을 크게 높였다. 고사총 발포 목적은 대북전단을 떨어뜨리는 데 있었지만 총탄이 경기 연천지역 남측 민통선 지역에 떨어지게

하여 우리 군의 K6 기관총 대응사격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 표 II-2 북한 미사일 및 발사체 발사(가동) 일지(2014)

일자	내용
02.04	동해 진천군 일대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KN-08이동식 발사대 조립 공장 추정건물 발견
02.21	호도반도, 300mm 신형 방사포 4발 발사
02.27	강원도 안변군 깃대령, 탄도미사일 4발(추정)발사 사거리 200km이상 탄도미사일
03.03	강원도 깃대령, 탄도미사일 2발 발사(스커드-C 추정)
03.04	강원도 원산 인근 240mm 방사포 3발, 300mm 신형방사포 추정 4발 발사
03.16	강원도 원산, 동해상으로 Frog(추정) 지대지 로켓 25발 발사
03.22	강원도 원산, 동해상으로 Frog(추정) 지대지 로켓 30발 발사
03.23	강원도 원산, 동해상으로 Frog(추정) 지대지 로켓 16발 발사
03.26	평남 속천, 동해상으로 노동(추정)미사일 2발 발사 北 서부지역에서 내륙을 통과하여 동부지역으로 발사된 최초사례
03.31	서해 NLL 인근 서해안포, 방사포 500여발 발사 등 해상사격, 일부 포탄 NLL남쪽 우리측 수역에 떨어짐
4월	KN-08계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엔진시험 징후 포착
04.29	서해 NLL인근 해안포 50여발 해상사격훈련
06.26	강원도 원산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단거리 발사체 (KN-09, 300mm신형방사포로 추정, 전술유도탄이라 주장) 3발 발사
06.29	강원도 원산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단거리 발사체 (스커드 계열로 추정) 2발 발사, 단거리 발사체 3발 발사
07.02	강원도 원산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단거리 발사체 (KN-09, 300mm신형방사포로 추정) 2발 발사
07.09	태탄 및 평산인근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단거리 발사체(스커드-C추정) 2발 발사, 서해안에서 발사 후 북한지역을 가로지른 후 동해 공해상에 떨어짐

일자	내용
07.13	개성 북쪽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스커드 계열 추정) 2발 발사, 최근 발사한 스커드 미사일은 사거리 500km
07.14	강원도 고성 군사분계선(MDL), 동해상으로 방사포(122mm로 추정) 100여발 발사
07.26	황해도 장산곶 일대, 동북 방향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스커드-C 개량형 추정) 1발 발사
07.30	묘향산 일대, 300mm 방사포 추정 단거리 발사체 4발 발사
08.15	원산 일대에서 단거리 발사체 5발 발사 (300mm 방사포 추정, 사거리 220km)
09.01	북, 단거리 발사체 1발 발사 북한이 중국 국경 60여km 남쪽인 자강도 용림 인근에서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 사거리는 220여km 내외로 판단
09.06	북, 추석 앞두고 단거리 발사체 3발 또 동해로 발사 '신형전술미사일'로 추정되는 단거리 발사체 3발을 동해상으로 발사, 기존 전술 미사일인 'KN-02'(최대사거리 170여km 추정)보다 사거리가 긴 신형전술미사일의 성능개량을 위해 잇따라 시험발사를 하는 것으로 분석

2014년도 북한의 이같은 군사도발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띠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첫째, 북한의 군사도발이 점차적으로 과감해지고 다원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예전과는 달리 각종 로켓, 미사일, 포사격을 과감하게 활용해 오고 있다. 이는 북한이 핵탄재 가능 운반수단 능력을 시위하여 한국과 미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남측 민간단체의 전단살포에 대한 대응성격으로 고사총을 발사한 것 역시 도발형태 차원에서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확전을 초래할 수 있을 정도로 과감한 군사적 행위라 할 수 있다. 이에 더해 북한군은 MDL 접근과 침범을 빈번하게 함으로써 최전방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

행태를 보이기도 하였다.<sup>6</sup>

둘째, 한미연합군사훈련 제한 또는 중단을 요구하기 위해 직접적인 군사적 대응을 강화하였다. 기존에는 단순히 한미연합군사훈련 실시에 대해서 비난한다든가 일반적인 군사훈련으로 맞대응하는 행태를 보였지만 점차적으로 미사일 시험발사 등 각종 ‘운반수단’을 과시함으로써 ‘핵전쟁’ 발발 위협을 가중시키는 심리전을 펼쳤다. 실제로 북한 당국은 “우리군대는 현대전의 요구에 맞게 그 어떤 화력타격 임무도 막힘 없이 수행할 수 있게 모든 측면에서 준비됐다”며, “정밀타격에는 초정밀 타격으로, 핵에는 핵으로 맞받아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sup>7</sup>

셋째, 남측의 대북정책을 변화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군사적 강압수단을 적극 활용하였다. 북한은 년초부터 ‘비방중상’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하였다. 2014년 김정은 신년사에서 “백해무익한 비방중상을 끝낼때가 됐다”면서, 한국 정부에 “무모한 동족대결”과 “중북소동”을 벌이지 말고 “남북관계 개선으로 나와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 그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측 민간단체가 전단살포를 강행하자 북한은 고사총 사격이라는 강수를 두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북한은 각종 ‘비대칭’ 군사력을 집중적으로 강화하여 그들의 상대적 국력열세를 만회하고 한반도에서의 주도권을 장악하고자 한다. 북한은 우선적으로 그들의 핵무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오고 있다. 현재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 기술을 갖고 있고 이를 미사일에 탑재

---

6 우리 군이 올해 들어 MDL 접근하는 북한군을 향해 경고방송을 한 횟수는 60여 회로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었으며, 지난해 한 차례도 없었던 경고사격도 올해 5~6회 실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 2014년 11월 17일.

7 『노동신문』, 2014년 8월 8일.

---

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는 커티스 스캐퍼로티(Curtis Scaparrotti) 주한미군사령관의 증언<sup>8</sup>이 나올 정도로 북한의 핵무력은 상당히 위협적인 것으로 발전해 오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북한은 신형 비대칭 무기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2014년 10월 북한이 SLBM 수직발사관을 지상에서 수차례 실험을 했고,<sup>9</sup>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 증축공사도 마무리 단계에 있는 실정이다.<sup>10</sup> 한국 계룡대까지 타격 가능한 사거리(220km)의 300mm 신형 방사포와 KN-02 개량형 미사일도 선보였다. 북한은 사단급 주력포인 122mm 방사포 400여문을 전후방에 추가 배치하여 남측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sup>11</sup>

‘김정일 3년상’을 치르고 난 첫해인 2015년도에는 체제의 공고화를 위해서 김정은이 군사적 수단에 보다 의존하는 강경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크다. 내부적으로도 체제결집을 위해서 전시분위기 창출이 필요할 것이다. 대남 또는 대미차원에서 군사적 수단을 통해서 남한 또는 미국의 대북정책을 인위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할 것이다. 특히 북한은 남한으로부터 대북전단 살포 등 ‘비방중상’ 문제 해결과 관련된 ‘우호적인’ 정책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각종 군사적 위협을 가해 올 것이다. 2014년 12월 초부터 북한군 동계훈련을 한 달 정도 앞당겨 ‘사상최대 규모’로 실시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해마다 12월 초 북한군은 초·중대급 전술훈련에서 시작하여 대대, 연대, 사단, 군단급 순으로 참가규모를 확대해가면서 이듬해 2월 말에

---

8 『조선일보』, 2014년 10월 27일.

9 『중앙일보』, 2014년 10월 20일.

10 『동아일보』, 2014년 11월 6일.

11 『동아일보』, 2014년 12월 11일.

---

서 3월 초 대부분의 병력과 전력이 참가하는 국가급 대규모 상륙훈련으로 마무리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역으로 육해공군 합동으로 실전을 방불케하는 기습 및 국지도발 훈련을 시작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은 2015년 전반기까지 군사적 긴장을 강하게 조성하는 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이를 위해서 북한은 각종 로켓, 포, 미사일 시험발사를 되풀이 할 수도 있다. 서해상에서의 군사적 재도발도 예상된다. 핵실험과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실시 또는 발사 준비 움직임을 보여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높여 한미 당국을 위협하고자 할 것이다.

- 정영태 북한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

## 5. 대외 동향

2014년도 북한의 대외관계 특징은 ‘강대국 관계 강화 모색을 통한 외교노선 다변화’로 요약될 수 있다. 핵심은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와 대일관계 개선 노력이다. 북한이 이러한 전략을 선택한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의 대북정책 기조인 소위 ‘전략적 인내’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둘째, 중국과의 소원한 관계가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셋째, 남북관계 경색 국면이 지속됨에 따라, 외부 지원을 통한 안보·경제 자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김정은은 집권 3년차를 맞이해 김정은의 리더십과 체제의 정당성을 시위할 수 있는 대외적 성과가 필요했던 것도 주요한 이유 중 하나이다. 즉 북한은 대미·대중·대남관계가 악화 및 정체되자, 대러·대일관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생존 및 성장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북한이 이러한 대외전략을 추진했던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단기간 내에 바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재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 비핵화 문제를 서둘러 추진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 북한의 핵보유 의지가 확고해 비핵화 전망이 어두울 뿐 아니라 마땅한 현실적 대안도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우크라이나와 IS 문제 등 더 중요한 지구촌 문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에,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에 소중한 자원을 더 이상 투자하기가 어렵다는 현실적 판단도 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북핵문제와 인권문제 등과 관련한 기존 국제공조를 유지·강화하면서 북한 또는 중국의 전략 변화로 인한 상황의 호전을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오히려 미국은 2014년 8월 존 케리(John Kerry) 국무장관이 천명



---

했듯이, 대북정책의 우선순위에 대북인권문제를 북핵문제와 동일한 반열에 올려놓고 북한에 대한 전방위적인 외교적 강압을 강화하고 있으며, 소니 해킹 사건의 배후로 북한을 지목하며 강경한 대북제재 의사를 피력하고 있다. 따라서 단기간 북미 간 관계 호전을 기대하기는 난망한 상황이다.

북한은 이러한 미국의 전략적 인내와 외교적 강압에 직면해, 미국과의 직접적인 대결은 삼가하며 미국의 무관심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우회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를 통해 자신의 전략적 가치를 미국을 향해 시위하고 있으며, 일본과의 관계 진전을 통해 한·미·일 3국 공조의 균열을 야기하고자 하였다. 특히 북한은 2014년 9월, 황병서 일행의 방한과 같은 남북관계를 활용해 북미관계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였다.

둘째, 북중관계가 소원해진 것도 북한이 외교적 다변화를 추진한 주요한 이유 중 하나이다. 중국은 북한의 핵개발이 국제적 안정이라는 자국의 핵심 목표를 저해하며,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 유지 및 강화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동시에 북한의 핵무장을 저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북한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도 있음을 경계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해 왔다. 중국의 전략적 조치는 크게 세가지 차원에서 전개되었다. 첫째, 유엔 경제제재 등에 동참하며 대북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북한의 핵실험 움직임에 대해서는 한중·미중 및 한·미·중 공조를 통해 외교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둘째, 한중 관계를 진전시키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의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공개적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 셋째, 북중 고위급 회담과 정상회담 개

---

최 등 북한의 요구에 불응함으로써, 북한 지도부를 정치적으로 강압하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우회적 방책으로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의 대체제로 러시아를 활용해 보고자 하는 의도이다. 2014년 11월 최룡해가 러시아를 방문하고 북러 정상회담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것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특히 북한의 최룡해 특사파견 발표 시점이 때마침 박근혜 대통령이 미얀마에서 열린 ASEAN+3 정상회의에서 ‘한·중·일 3국 정상회담 개최 희망’을 밝힌 다음날 이루어진 것도, 러시아를 활용해 중국의 비핵화 공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전략적 대응으로 해석할 수 있다. 11월 APEC 정상회의에서 한·미·중 3국 연쇄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 불용 입장을 재확인한 직후, 북한이 러시아와의 관계 증진에 집중하는 것 또한 북한의 속내를 반증하는 것이다.

북한이 외교적 다변화를 추진했던 또 다른 이유는 국내적 이유 때문이다. 김정은 정권은 집권 3년 기간 동안 체제 안정화 작업을 급속하게 진행해 왔다. 하지만 2013년 채택한 소위 핵-경제 병진노선의 성과가 불확실한 점은 체제 안정성 확보에 큰 도전이 아닐 수 없다. 실제 북한의 경제는 2012년 하반기 이후 시장 환율과 쌀 가격이 안정화되고 배급제가 회복되는 등 최악의 국면은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북중 교역 및 대외경제부문에서의 한계가 뚜렷해지면서 달러부족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으며, 2013년 하반기부터는 국내의 공식부문 생산 역시 정체되고 있다. 특히 병진노선 추구 및 새로운 김정은 정권의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 구축을 위한 달러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수급은 난망한 상황이다. 따라서 북한은 경제

---

제재의 부정적 파급효과를 차단하고 대중 경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아울러 남북관계 경색과 북중 무역 조건 악화로 인한 외화 수입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서 외교관계의 다변화를 적극 추진하였다.

북한은 우선 러시아와 정치·외교적 관계뿐만 아니라 새로운 경제관계를 형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2014년 4월 러시아 하원은 북한 채무 110억 달러 중 약 90%를 탕감하는 양국 간 협정을 비준했다. 또한 ‘라진-하산 프로젝트’에 러시아가 적극 참여하고 있다. 둘째, 일본인 납치자 문제를 매개로 대일관계 개선을 적극 추진하였다. 최근 북일관계 진전이 일본 아베 정부의 국내정치적 목적, 북한과 일본의 한일관계 경색 국면의 상호정치적 이용 등 다양한 이유로 추진되었지만, 북한의 주 목적은 일본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것이다. 실제 북일 협상은 2014년 3월 적십자 회담 및 정부고위급 회담으로 이어졌으며, 북일 양국의 관계 개선은 5월 말 소위 ‘스톡홀름 합의’를 통해 더욱 진전되었다. 양국 간 회담의 주요 의제는 납치문제의 해결과 대북제재의 완화였다. 북한의 외교 다변화 노력은 유럽 주요 국가들과 국제기구 및 협의체를 대상으로도 활발히 전개되었다. 리수용 북한 외무상이 중동과 아프리카 및 아세안 국가를 방문한데 이어 유엔 총회에 참석하였으며, 강석주 노동당 국제비서 또한 지난 9월 독일과 스위스 및 유럽의회 등을 전격 방문하였다. 이들은 방문지에서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움직임과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적극적 대외행보는 북한이 당면한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고자 하는 것이 주목적이라 사료된다.

2015년에도 북한은 2014년과 유사한 대외관계 기조를 유지 및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북한은 미국이 전략적 인내를 지속하는 가

---

운데 비핵화와 인권문제를 중심으로 대북 강압을 지속할 것으로 판단할 것이다. 실제로 미국의 대북정책은 당분간 큰 전기가 없는 한 기존의 기초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현실적으로 북한문제보다 더 중요한 글로벌 이슈들이 많기 때문이며, 2014년 11월 중간선거의 결과 공화당이 상하원을 차지한 것도 중요한 이유이다. 공화당은 그간 큰 틀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기초를 적극 반대하지 않았다. 따라서 북한은 이러한 대북 강압에 저항하며 자국에 대한 부정적 파급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동북아 역내 강대국들을 비롯한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치열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구체적 전략은 다음과 같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북중·북러관계를 강화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강대국 관계를 중시한다. 아울러 미국의 대북정책은 세계 전략과 동아시아 전략의 핵심 목표를 넘어서 구상될 수 없다. 따라서 북한은 미국이 비핵화 및 북한인권문제 그리고 최근의 소니 해킹과 관련해 전방위적인 강압을 강대국의 횡포로 규정하고, 현재 미국의 대북정책은 자국의 제국주의적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한 대전략(Grand Strategy)의 일환이라며 외교적 공세를 더욱 강화할 것이다. 이러한 외교 전략의 실제 타겟은 중국과 러시아일 것이다. 특히 미국의 대북인권정책이 북한 정권의 붕괴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주장하며, 한반도 안정을 바라는 중국의 지도부를 자극할 것이다. 아울러 북러 정상회담 추진을 가시화하는 등 자국의 전략적 가치의 시위를 통해, 대중관계 복원에 진력을 다할 것이다. 러시아와는 최근 진전된 양국관계를 바탕으로 북러 경제협력 등에서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려 할 것이다. 특히 지지부진한 경제구 개발에 러시아 기업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것이며, 라진-하산

---

프로젝트 합작사 경영권을 러시아에 넘기는 등 대러 경제협력 사업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가 모두 반대하는 한미연합군사훈련 문제를 한반도 평화 의제들과 연계 및 제기하며 중국과 러시아의 지지를 확보하고자 할 것이다. 하지만 북한의 이러한 전략이 성공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북한인권문제와 사이버 공격과 관련해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일부 협력은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이 사안으로 인해 한반도 비핵화라는 전략적 목표를 수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아울러 러시아를 활용해 대중관계를 복원하려는 북한의 의도 또한 쉽게 달성되기 어려울 것이다. 북한에게 러시아가 중국의 대체제가 될 수 없음을 중국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2015년 북한은 한·미·일 3국 공조에 균열을 가하기 위한 대외전략 또한 적극적으로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2013년 이후 한일 관계가 경색된 국면을 활용해 대일 접근을 강화하고 있다. 납치자 문제와 같은 대일 협상 의제들은, 북한의 입장에서 큰 정치적 부담을 요하거나 막대한 외교적 자원을 동원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다. 오히려 일본의 대북 경제제재가 해제된다면 부족한 외화수입이 증대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아베 정부 입장에서도 소위 아베노믹스 등의 성과 부진으로 인한 국내정치적 곤란함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양국의 정치적, 경제적 이해의 일치로 인해 당분간은 양국의 협상이 좀 더 진전될 가능성은 있다. 북한은 이러한 대일 접근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일본으로부터 경제지원을 기대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는 한·미·일 3국 공조의 균열을 유도하고자 할 것이다. 북한은 동일한 외교적 효과를 위해 대남관계를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 즉 한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남북 고위급 회담이나 이산가족상봉 정례

---

화 문제 등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등의 유화전략을 적극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북한이 의도하는 한·미·일 3국 공조의 이완 가능성은 극히 낮다. 북한이 대중·대러관계를 개선하고자 한다면 한·미·일 3국 공조는 이에 대응해 강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대일 협력관계에서 일부 가시적인 성과를 얻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 관계가 오랫동안 지속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당장 2015년 상반기 중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법제화하려는 시도를 할 경우 북일관계는 다시 경색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이 문제가 기본적으로 북한 급변사태를 상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일본의 군사적 개입의 핑계가 될 수 있다고 강력히 반발할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일본이 미국과 한국의 의심을 사가면서 북한과의 협력관계를 증진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북한이 상기 분석과 같은 전략처럼 대외관계에 임할 경우, 그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두가지 주요한 변화가 가시화될 수 있다. 첫째, 북한이 2015년에 핵실험을 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2015년 상반기 동안은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에 대한 책임을 요하는 북한인권결의안 국면을 벗어나기 위해 진력을 다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도움은 절대적이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협력의 대가로 최소한 추가 핵실험의 자제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북한이 미국과 한국을 인권문제의 배후로 지목하며 추가 핵실험 등을 언급하며 격하게 반발할 가능성은 아주 높다. 하지만 북한의 입장에서 최고 지도자의 안위와 존엄을 지키는 것이 당면 절대 과제이며 상위 목표이므로,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이 불필요할 때까지는 핵실험을 당분간 자제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한다면 한·중·일 3국 공조가 강화될 것

---

이며, 북일 교섭은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높은 것도 부차적 이유이다. 일본은 결국 납치자 문제 해결보다 미일동맹의 유지 및 강화 그리고 한·미·일 3국 공조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이다.

둘째, 다음과 같은 두가지 상황 조건이 전개된다면, 2015년에는 6자 회담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협력을 조건으로 6자회담 참여를 더욱 독려하고, 이 과정에서 북한의 가시적인 비핵화 조치를 강력히 요구하는 경우이다. 또한 집권 3년차에 접어든 박근혜정부가 좀 더 전향적인 대북정책으로 선회하고 동시에 북일관계가 지금까지처럼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미국이 6자회담 재개 조건을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그간 남북관계의 진전과 북한의 진정성 있는 비핵화 사전조치를 6자회담 재개 조건으로 주장해 왔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이 북한과의 관계 진전을 바탕으로 6자회담 재개를 강력히 희망할 경우, 한·미·일 3국 공조의 대승적 차원에서 미국이 이에 호응할 여지는 있다.

- 정성윤 기획조정실 부연구위원

---

## 6. 대남동향

2014년 북한 대남정책의 두드러진 특징은 강온양면 전술이 동일한 시기와 사안에 동시적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2014년 김정은은 신년사를 통해, 2014년 대남부문 목표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분위기 마련’으로 설정하면서 동시에 핵 위협을 했다.

한국 정부가 미국과 거리를 두고 대북정책 방향을 전환하도록 다양한 방법을 동시에 구사하겠다는 의도이다. 대남정책에서 남한의 대북정책 변화를 추동하기 위한 협상 제의와 정치군사적 긴장조성 등 양면 전술이 동시에 나타날 것을 경고한 것이다.

시기별로 3월 중순까지는 대남 온건정책, 5월까지의 강경정책, 그리고 6월부터는 다시 온건정책, 10월 중순부터는 다시 강경정책으로의 회귀라는 주요 특징을 보였으나, 실상은 시차를 확연히 구별하기 어려운 강온양면 전술의 동시 구사이다.

2014년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분위기 마련의 해’라고 제시한 후 2014년 3월까지 주로 온건전술을 구사했으나, 강경전술도 동시에 수행했다. 먼저 이산가족상봉 행사를 제안하며 유화분위기를 조성했다. 이 과정에서 진행된 남북 고위급 접촉(2.12, 2.14)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3대 합의가 도출되었다. 북한은 남북 고위급 접촉 이후 한편으론 동 합의를향을 대체로 준수하려고 노력하는 태도를 보였다. ‘KR/FE 훈련(2.24~3.6)’ 기간에도 이산가족상봉 행사(2.20~25)를 치루었고, ‘KR/FE 훈련’과 관련한 직접적인 비난도 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나 온건정책 시기에도 군사적 도발과 함께 우리 정부를 직·간접



---

적으로 비난하는 양상을 보이며 정치군사적 위협 행위를 병행했다. 2월 21일부터~3월 4일까지 동해상에서 총 5회 17발의 단거리 미사일·로켓포 발사, 북한 경비정 NLL 침범(2.24~25) 등이 자행되었다. 또한 ‘조선인민군 전략군 대변인 담화(3.5)’에서 ‘미국과 그 추종세력’이라며 남측을 비난하였다.

또한 남측에 대해 고위급 접촉에서 합의한 ‘상호 비방중상 중지’를 이행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남측이 합의를 위반하고 있다며 북측의 강경행위에 대한 선제적 정당성 확보 및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을 남측에 전가했다. 구체적으로 첫째, 남한 당국이 합의에 저촉되는 언동을 하고 있다며, 비방중상을 중지할 것을 촉구하였다(2.22, 우리민족끼리/2.23, 조선중앙통신). 둘째, 북한 국방위원회가 3월 5일 및 3월 7일 통지문을 통해 두 차례에 걸쳐 남측 민간단체의 전단살포에 대해 남북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항의하고 책임 있는 대책을 요구하였다. 셋째, 3월 11일 ‘남북 고위급접촉 북측대표단 대변인 담화’를 통해 우리 당국가 및 보수언론매체의 북한 비난과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문제를 항의하였다.

3월 말부터 5월까지의 심리전을 극대화하며 다시 강경전술 위주의 다음과 같은 양상과 특징을 보였다. 시작은 핵안보정상회의(3.24), 한·미·일 정상회담(3.26), 한중·미중 정상회담(3.28) 등 대북 국제외교에 대한 대응이었다. 이후 드레스덴 구상, 대북외교, 무인기 침투, 위장 탈북 화교 사건, 세월호 참사, 오바마 방한·한미 정상회담, 인권문제를 이슈로 고도화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초점을 맞춘 정책비방 및 인신공격과 함께 비방중상 합의 위반·남북관계 경색 책임을 남측에 전가하였다. 그 형식도 개인필명, 기관·단체 명의의 담화, 진상공개장, 공개

---

질문장 등 다양했다. 3월 말~4월 초에는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개인명의로, 4~5월에는 대남정책을 담당하는 조평통과 국방위원회 및 각 기관·단체·군대 등 공식기구들에 의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성폭력·반인권적 비방과 욕설이 경쟁적으로 확산되는 양상이었다.

이에 대한 남측 국방부의 대북 대응에 대해 “범죄적인 북침통일각본, 체제통일을 노린 전쟁각본”이라며 흡수통일에 대한 불안감을 드러내는 한편, ‘군사적 대결·체제대결 야망을 드러낸 전쟁포고’로 규정하며 군사도발의 선제적 정당화를 의도하는 것과 더불어, 이를 ‘북한 사회주의 체제 공고화’의 호기로 삼아야 한다며 내부 결속력 강화에 활용하였다.

2014년 6월부터는 다시 온건정책으로 선회하면서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10.4)에 황병서, 최룡해, 김양건 등 북한 실세 3인방이 전격 방남하여 대남 고위급 접촉을 시도했다. 동시에 강경책을 펼치는 일련의 과정에서, 유래가 없는 양의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긴장고조와 대남 화해 제스처, 그리고 남측이 합의를 위반한다는 정치적 비난 공세를 동시 병행하였다.

5월 23일 북한이 인천 아시안게임(9.19~10.4) 참가 입장을 발표하고, 남측 민간단체와의 교류를 선별적으로 재개하면서 대남정책이 다시 온건정책으로 변화하였다. 특히 6월 30일 국방위 ‘특별제안’ 및 7월 7일 ‘공화국 정부성명’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주장하고 남한 정부의 호응을 촉구하였다. 그리고 10월 4일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에 맞추어 황병서, 최룡해, 김양건 등 북한 실세 전격 방남과 함께 남북관계 개선을 주장하고 남한 정부의 호응을 촉구하였다. 이 방남의 목적은 단기적인 경제적 실리 추구 의도는 크지 않으며, 대내외적으로 김정은

---

의 건강 이상설 잠식, 정권 안정화 과시 및 이후 남북관계 주도권을 잡은 상태에서 남북대화를 설계하기 위한 선전의 효과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실세 3인 방남 이전인 2014년 9월 말부터 12월까지 북한인권, 남측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살포, 통일현장 제정 등을 소재로 적대적 대남 선전전 및 군사훈련을 강화하는 등 다시 긴장을 강화하였다. 2014년 9월 27일 한국과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관련 논의에 대한 대응으로 “극악한 특등대결광, 현대판 매국역적은 한시라도 빨리 제거해버려야 한다”란 제목의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 담화를 필두로 다시 긴장을 조성하였다.

또한 남측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살포에 대해 2014년 11월 1일 “우리의 최고존엄에 악랄하게 도전해 나선 괴뢰패당의 죄행은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란 제목의 조평통 성명 발표와 2014년 11월 6일 “범죄적인 <통일현장> 조작놀음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를 제목으로 한 조평통 서기국 보도를 통해 한국의 통일준비 사업에 대한 공세적 비난을 전개하였다. 이후 12월 현재까지 김정은이 직접 육해공군 합동훈련 등을 지도하면서 정치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지난 3년간 드러난 김정은 정권 대남정책의 주요 특징은 북한의 내부정치 우선성, 미국의 경제적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남한을 이용하려는 태도, 전환주기가 짧고 수위가 높은 강온양면술, 핵위협과 평화공세의 동시성, 선전선동의 심리전·남남갈등 촉진을 포함한 4세대 전투술 발전이다. 이 5대 특징은 2015년에도 지속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김정은의 대남정책 결정체계 및 남북관계 조율 양상은 김정일 시대와 차이가 있다. 은둔형 개인독재 통치유형을 보인

---

김정일은 군과 당, 조평통, 외무성 측근들의 의견을 조율하여 자신이 직접 대남·남북관계 전략을 결정하고, 이를 국방위원회 중심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러나 조선노동당의 정책결정 체계를 복구하려 시도하는 김정은은 개인독재 경험·능력 부족으로 ‘김정은식 대남정책 결정체계’를 구축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남북관계 관리 및 도발 등 대남정책 실행의 중심이 군세력이 주도하는 국방위원회인지, 당세력이 주도하는 총정치국인지, 조평통과 국제부·외무성 등 대남·대외정책 라인인지, 김정은 개인인지 명확하지 않아 결정체계의 혼선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김정은식 수령독재 시스템’을 구축하려 한 지난 3년간 리영호와 장성택 세력 숙청에 뒤이은 권력구조 및 이권구조 변동과 연계되어 대남정책 결정체계의 불안정성이 커졌다. 김정은 정권의 도발 양태를 보면 시기와 국면에 따라 다양한 요소들의 영향력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정책결정 주체들 간의 세력관계도 변화하고 있다. 점차 두드러진 특징은 단계를 높여 온 군부 길들이기와 군사훈련 강화, 그리고 김정은 지시에 대한 무조건적 복종 수행을 숙청 및 공포정치와 함께 강화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2015년에는 지도자 김정은의 지시와 결정이 대남정책 및 남북관계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의 대내 통치전략과 대남정책의 연관성이 높아졌고, 연이은 숙청의 성공 및 핵·미사일 기술 발전 등으로 대남 자신감이 증대하였다. 2015년 당창건 70년, 일제로부터 해방 70년, 남북분단 70년, 남북한의 통일염원 70년, 한국전쟁 발발 65년 등 중요 계기에 맞추어, 김정은이 김정일 유훈통치·3년 탈상을 넘어서 자신의 권력공고화를 대내외에 각인시킬 필요가

---

있다.

이와 연동되어 새롭게 주목해야 할 지점으로 대남정책 및 남북관계 주도권 확보를 위한 다음과 같은 행보가 가능하다.

첫째, 남북 고위급 회담 제안 등과 함께 통일리더십을 전면화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 3년간 내치에 집중했기 때문에 상반기 이희호 여사의 방북, 6·15 남북정상회담 15주년, 8·15 해방 70주년 등을 계기로 김일성·김정일을 넘어선 통일리더로서 자신을 이미지화하고자 하는 욕구가 작용할 것이다. 또한 2015년 연이은 대규모 군중행사 시 통일 선전전을 통해 남북관계의 주도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과시하려 할 것이다.

둘째, 금강산 관광사업 등의 국제화이다. 자신의 성과로 내세우는 마식령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금강산을 제2의 개성공단 역할을 하도록 유도하며 남측의 경제적 지원을 유도할 수 있다. 특히 자신이 경제특구 등을 통해 국제적 스탠다드(Standard)에 조응하는 지도자임을 강조할 것이다.

셋째, 핵·미사일 전력화는 지속할 것이다. 특히 10월 10일 당창건 70주년에 맞추어, 최소한 장거리 로켓 은하 4호를 발사하거나 최대한 4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 김정은 스스로 자신의 가장 큰 무기인 핵무기를 실질적으로 보유했다고 인식하는 상황에서, 4차 핵실험은 ‘비용-편익’ 간 계산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다. 김정은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의지는 지속될 것이나, 대중·대러 등 대외환경에 미칠 악영향뿐만 아니라 국제 광물가격 급하락 및 대중무역 위축 등으로 북한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2014년 11~12월 김정은의 행보를 보면 2015년엔 김정은 집권 3년차(2014년)에 두드러진 게릴라식 대남정책 및 강은양면 전술을 동

---

시 전개하는 식의 대남정책이 시도되면서 대남 공개적 도발과 비공개적 도발이 모두 가능한 상황이다. 핵문제, 내부 정치경제적 의도, 국제 환경,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과 분리되어 이해될 수 없는 김정은 정권의 대남전략은 기본적으로 핵개발, 핵-경제 병진 노선, 지도자 김정은에 대해 ‘건들지 말고 그대로 인정하며 내버려 두라는 행태’를 포기하지 못할 것이다. 또한 남측을 대내외적으로 활용하려는 태도를 지속할 것이다. 그 의도는 ① 남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모양새를 보이며 미국과 중국에 접근, ② 경제적 실리 획득에 활용, ③ 이것들을 남한 내 남남갈등 촉진과 북한 내부 결속에 활용하는 것이다.

특히 북한 정권에게 핵무기는 단지 협상용이 아니라 붕괴되었던 세력균형을 회복할 수 있는 도구이다. 핵을 정치, 경제, 안보의 해결책이 될 수 있는 만능의 도구로 보기 때문에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4차 핵실험을 비롯해 지속적인 핵능력 강화를 모색할 것이며 핵보유를 기정사실화 할 것이다. 6자회담을 핵군축, 평화협정 체결의 도구로 활용할 것이다. 자신이 NPT 체제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한 문제국이 아니라 다른 핵보유국들과 대등한 당사자임을 논리화할 것이다. 핵전쟁과 핵재난에 대한 언급 및 위협을 하며 남북관계 개선을 주장하는 식의 북한의 핵외교 전략이 발전될 것이다. 따라서 2015년 북한의 핵 위협 및 도발은 지속될 것이며 핵억제력이란 미명으로 재래식 군사력 및 훈련도 강화될 것이다. 북한은 도발 후 천연덕스러운 수습에도 능하다.

이러한 북측의 의도와 요구를 남측에서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2015년 남북관계의 긴장도는 2014년 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북한에 핵개발 수요가 존재하고 대내 경제불안 및 권력과 이권 갈등 등으로 인한 대남 도발 가능성이 상존하는데,

---

전시작전권 연기와 맞물린 한미 군사협력, 대북 심리전, 탈북자 문제, 한중 FTA 체결로 한중 전략적 동반자관계 발전, 북한인권 ICC 회부 및 북한인권사무소 한국 내 설치로 인한 북한인권문제 이슈화 등이 북한을 자극하여 발생할 수 있는 도발 가능성이 있다.

남북한이 2015년 8월 15일 해방과 분단 70년을 맞이하여, 각기 정치적 필요에 따른 '전략적 상호작용'에 의해 '박근혜 대통령의 방북' 등 남북관계의 극적 화해 흐름이 조성될 수는 있다. 그러나 질적이고 구조적인 측면에서 2015년 남북관계 발전 등 결정적 변화가 발생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북한의 대내외 환경이 단기간에 개선되거나 더 악화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6자회담 재개의 쟁점이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6자회담이 재개된다고 해도 협의과정에서 장애물들이 산적해 있다. 핵 문제를 포기할 수 없는 남한의 대북정책뿐만 아니라 북한이 요구하는 6·15 공동선언이나 10·4 정상선언의 이행기조로의 전환도 쉽지 않다.

- 박영자 북한연구센터 부연구위원

# Ⅲ

남북한관계 ...







---

## 1. 남북대화

### 가. 2014년: 남북대화와 대결 국면의 교차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초부터 통일대박론을 제기하여 통일담론의 열기를 고조시켰다. 그리고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통일준비론에 중점을 두고 범국민적 기구인 통일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키는 한편, 작은 걸음으로 실천이 가능한 작은 통일론을 제기하였다.

한편 집권 3년에 접어든 김정은 정권은 장성택 처형 등을 통해 권력 구조를 안정화한 후 대내외 정책을 정비하여 김정은 시대를 열어 나가기 위한 전략수립에 몰두하였다. 김정은 정권의 국가전략은 경제건설·핵무력 병진노선에 입각한 공세적 대외·대남전략으로 요약된다. 북한은 핵보유 능력을 바탕으로 한반도문제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다. 북한은 핵위협을 통해 남북관계에서 우위를 차지하려고 하는 한편, 간헐적이고 파상적으로 대남평화공세를 감행하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통일준비론·작은통일론이 김정은 정권의 핵위협·평화공세 병행노선과 맞물려 남북관계의 지형은 대화와 대결 국면을 오가고 있다. 2014년 2월 남북고위급 접촉, 이산가족상봉, 북한대표단의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 참석 등과 같은 대화 국면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대화 국면이 진행되는 것과 병행하여 북한의 핵위협, 동시다발적인 미사일 시험발사, 대남비방 등의 대결 국면이 전개되었다.

2014년 남북관계는 대화와 대결 국면이 롤러코스터같이 교차하는 양상을 보였다. 첫 번째는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남북 고위급 접촉과

---

이산가족상봉으로 대변되는 대화모색기이다. 2014년 1월 초부터 남북 관계의 기선을 잡기위한 기싸움이 전개되었다. 김정은 위원장은 1월 1일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분위기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함으로써 대화공세를 시작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통일대박의 화두를 던지고 설을 계기로 이산가족상봉을 제안하였다. 북한의 대남정책의 책임부서로 등장한 국방위원회는 중대제안(1.16)에서 비방중상 행위 중단, 군사적 적대행위 중단, 핵재난 방지 조치 등을 전제로 이산가족상봉과 남북현안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다고 제안하였다.

이러한 배경 하에 2월 5일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에서 이산가족상봉 행사를 2월 20일부터 25일까지 금강산에서 갖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이 B-52 전력폭격기 훈련을 했다고 비난하고, 한미연합군 사훈련 중단과 비방중상 중지를 이산가족상봉과 연계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2월 12일과 14일 남북 고위급 접촉이 개최되었다.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예정대로 이산가족상봉을 하기로 합의하였고, 3년 4개월만에 개최된 이산가족상봉 행사(1차: 2월 20~22일, 2차: 2월 23~25일)에서 860여명의 이산가족이 상봉하였다.

남북 고위급 접촉은 새로운 회담 형식이라는 점에서 여러 가지 특징을 지녔다. 2013년 남북장관급회담이 회담대표의 격문제로 무산된 뒤 남북 고위급 접촉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회담 틀이 마련된 것이다. 북한의 국방위원회 정책국이 대남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로 등장하면서 청와대의 국가안보실과 회담 채널이 이루어졌다. 남북 고위급 접촉은 큰 틀에서 남북관계의 현안과 기본방향에 대해서 논의하는 회담의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 남북 고위급 접촉이 남북한의 최고지도자의 의사

---

를 직접 반영하는 남북정상간 일종의 ‘간접 대화’의 성격을 띠게 된 것이다.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이산가족상봉, 상호 비방중지, 추가 고위급 접촉 등 세 가지 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향후 남북관계 진전에 대한 기대가 모아졌다. 그러나 이후 남북관계는 한미연합군사훈련과 이에 대응한 북한의 대남무력시위, 대북전단 살포문제 등으로 다시 냉각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산가족상봉 정례화를 위한 적십자 실무 접촉을 개최하자는 남한의 제안(3.5)에 대해 북한은 대북전단 살포가 비방중상 중지에 대한 합의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거절하였다.

두 번째 시기는 3월 이후 한미연합군사훈련(키 리졸브)이 실시되고 북한이 다양한 형태의 대남위협과 무력시위를 하면서 남북관계가 급냉각된 기간이다. 북한은 핵억제력을 과시하는 추가적 조치 언급(3.14 국방위원회 성명), 새로운 핵실험 불배제(3.30 외무부 성명), 증폭 핵분열 실험이나 새로운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4.28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 등을 통해 추가 핵실험 가능성과 핵능력 고도화를 추진할 것이라는 것을 시사하였다.

또한 북한은 다종화된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다종화된 각종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였다. 북한은 2월과 3월, 그리고 6월과 7월 기간에 대대적으로 전술로켓 발사 실험을 감행했다. 북한은 2월 21일부터 7월 30일까지 신형 방사포, 스커드(scud)미사일, 노동미사일 등 모두 102발의 중·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것은 예년의 3~4배 규모이다.

세 번째 국면은 9월 인천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대화를 모색하는 탐색전이 전개된 시기이다. 북한 고위급 3인방(황병서 총정치국장, 최룡

---

해 당비서, 김양건 대남담당 비서)이 10월 4일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에 전격적으로 참석하고 이를 계기로 비공식적으로 남북 고위급 접촉이 이루어졌다.

북한 3인방의 전격적 방한은 여러 가지 의도를 지닌 것으로 해석된다. 우선 대내적 차원에서 볼 때, 북한 고위급의 방한은 체육강국을 위한 김정은의 업적을 홍보함으로써 대내적 지지를 얻으려는 요인이 작용하였다. 김정은은 집권 이후 3대 세습과 장성택 숙청 등에 대한 비판과 정치적 불안을 무마하기 위해 탈정치화를 위한 수단으로 스포츠 중시 정책을 실시해왔다. 각종 경기장의 건설과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설치 등도 이러한 정책의 일환이다. 김정은은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북한이 종합 7위의 성과를 올리자 이를 격려하고 정치적으로 활용하고자 했다. 김정은은 스포츠 경기에서의 성과를 통해 체육강국의 입지를 달성함으로써 강성대국 건설의 실패를 만회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대남차원에서 보았을 때, 북한 대표단은 전격적 방한으로 대내외 관심을 집중시키고 2차 고위급 접촉에 대해 합의함으로써 향후 남북관계 진전 가능성에 대해 기대를 불러 일으켰다. 이것은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의 변화를 압박하고자 하는 의도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대화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남한사회에서 5·24 조치 해제, 금강산관광 재개 등에 대한 지지 여론이 형성되는 것을 기대하였다.

북한대표단은 남한이 제안했던 2차 고위급 회담 개최(8.11)에 호응하여 10월 말에서 11월 초 사이에 회담을 갖기로 구두 합의하였다. 그러나 북한대표단이 돌아간 뒤 상황이 순탄하지 않게 전개되었다. 10월 7일 북한 경비정이 NLL을 침범하여 남북한 간 소규모 총격전이 있었다. 그런가 하면 10월 10일에는 북한군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총격

---

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북한대표단의 방한과 2차 고위급 회담 개최 합의로 화해 국면이 예상되었던 남북관계에 다시 검은 구름이 드리워졌다. 북한은 노동신문과 고위급 접촉 대변인 담화(10.12) 등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요구하고 이를 전제로 2차 고위급 접촉이 가능하다는 점을 역설하였다. 남한 정부는 북한에게 2차 고위급 접촉을 10월 30일 갖자고 제안(10.13)하였다. 이런 와중에 남북한 간 군사적 충돌에 관한 협의를 위해 남북 군사당국자 접촉(10.15)이 있기도 했으나 성과 없이 끝났다. 또한 파주 군사분계선 부근에서 남북한 부대 간 총격전이 발생하였다(10.19). 이런 상황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둘러싸고 민간단체와 파주 시민 간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다. 남북한 당국은 2차 고위급 접촉의 개최와 관련된 책임공방을 벌인 끝에 결국 회담은 무산되었다.

한편 주목할 것은 남북관계가 긴장과 대화의 국면을 오가는 상황에서 인도적 지원과 경제, 사회분야에서 제한적이거나 교류협력이 지속되었다는 점이다. 개성공단과 관련하여 상사중재위원회 회의 개최,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회의 개최, 개성공단 통신사업자 간 인터넷망 구축공사 및 상시통행 협의 등이 진행되었다. 또한 북한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국제기구와 민간단체를 통해 대북지원이 제공되었다. 그리고 개성 만월대 공동발굴, 한옥보존 사업 관련 협의 등과 같은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협력사업이 진행되었다.

#### 나. 2015년 남북관계 전망: 긴장과 대화 속에서 남북관계 점점 모색

2015년 남북관계에는 부정적 요인과 긍정적 요인이 교차한다. 우선

---

남북관계에 대한 부정적 요인이 산재하고 있다. 2015년 북한의 대남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일차적 요인은 김정은이 집권 4년차를 맞이한다는 점이다. 김정은 3년 동안 권력구조정비와 경제건설·핵무력 증진 병진 노선 채택, 경제관리개선 조치(6·28 조치, 5·30 조치), 대외관계 다변화(북일 스톡홀름 회담, 북러관계 증진) 등의 조치를 취했다. 김정은은 3년 동안의 권력정비와 김정일 사망 3년 탈상을 마치고 집권 4년차를 맞이하여 김정은 시대를 본격적으로 개막하고자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김정은은 대남관계에서 성과를 보이려고 할 것이다.

더욱이 2015년은 광복 70주년이자 당창건 70주년이다. 북한은 김정은 시대의 개막과 광복 70주년, 당창건 70주년을 맞이하여 대내체제를 공고히 하고 대내외 업적을 과시하고자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은 2015년을 ‘통일성전의 해’로 설정하고 있다. 이 구호는 대내적으로 주민동원을 공고히 하고 대외 및 대남차원에서 통일문제에 대한 주도권을 과시하려는 의도를 지닌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북한이 주도권 강화를 위해 군사적 긴장을 고조하고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은 이미 예년보다 강도 높은 동계군사훈련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은 3월부터 실시되는 한미연합군사훈련(키 리졸브) 등을 빌미로 군사적 동원태세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남북대화가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북한은 간헐적으로 서해 NLL, 군사분계선 일대 등에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함으로써 한국의 대화의지를 탐색하는 한편, 협상입지를 강화하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관심의 초점은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로켓발사의 가능성이다. 북한은 핵무기의 경량화, 소형화를 추진하고 고농축우라늄

---

(HEU)을 통한 고성능 핵무기 개발을 지속할 것이다. 또한 북한은 핵무기를 장착할 수 있는 각종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이 국제적 압력이나 대화분위기 조성 등과 무관하게 자체 계획에 따라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시험발사를 감행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그러나 북한이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의도를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4차 핵실험의 시기, 규모 등은 국제정세와 한반도상황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것이다. 만약 북한이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경우 남북관계는 물론 한반도 정세에 짙은 먹구름이 드리울 것이다.

한편, 2015년 남북관계에 긍정적 요인도 존재한다. 김정은은 주민복지 확보를 위해 인민생활향상을 국가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경제활성화를 위해 5개의 경제특구와 19개의 지방경제개발구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자체 재원과 자원만으로는 경제적 성과를 이루기 힘들다. 또한 북중 교역 및 투자와 최근 북러 경제관계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실시되는 상황에서 해외투자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은 경제살리기를 위해 남북관계 진전을 필요로 하는 측면이 있다.

또한 핵문제와 인권문제로 인해 국제적 압박이 가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국제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대미 및 대일접근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남북대화를 필요로 하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6자회담 재개를 위한 관련국의 조정에 힘입어 내년 상반기 6자회담이 개최될 경우 남북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김정은은 집권 후 아직 중국을 방문하지 못했으며, 3차 핵실험 후 중국과 북한 간 정치적 냉기류가 흐르고 있다. 김정은은 중국방문과 양국관계



---

의 회복을 위해서 중국이 중점을 두고 있는 6자회담 복귀를 수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이런 요인에 힘입어 6자회담이 재개된다면 남북관계에 긍정적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이상과 같이 부정적 요인과 긍정적 요인이 교차하는 가운데 2015년 남북관계는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2015년 신년사에서부터 남북한은 탐색전과 기선잡기, 공방전을 치열하게 전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한은 신년사에서 광복 70주년과 분단 7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남북관계의 돌파구 모색과 통일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선제적 제안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분위기에 힘입어 신년 초에 남북대화를 위한 접촉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3월부터 시작되는 한미연합군사훈련(키 리졸브)과 북한의 군사훈련 등은 남북관계를 경색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북한 인권문제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대북압박이 거세지고 유엔 북한인권현장사무소의 서울 개소가 시기적으로 겹쳐질 경우 북한이 대남도발을 감행할 수도 있다. 더욱이 북한이 4차 핵실험과 장거리로켓발사라는 카드를 꺼낼 경우 한반도 상황은 대결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다.

이러한 위기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2015년 상반기 한반도 위기관리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국제적 공조 및 남북대화를 통해 한미연합군사훈련과 북한의 군사적 대응조치를 적절한 수준에서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또한 6자회담을 개최하여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상반기 한반도 위기상황이 적절하게 관리될 경우 중반기 이후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시도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6·15 공동선언 15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남북공동행사나 광

---

북 70주년을 맞이하여 이산가족상봉, 남북공동행사 등이 추진될 수도 있다.

남북대화가 모색될 경우 2014년 무산된 2차 남북 고위급 회담을 재개하는 문제가 논의될 것이다. 아울러 이산가족상봉, 인도적 지원, 남북공동행사, 군사적 긴장완화 등을 위한 분야별 실무회담이 개최될 수도 있다.

남북회담이 개최될 경우 남북한은 의제를 둘러싸고 줄다리기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한미연합군사훈련 중지, 비방중상 중지, 군사적 문제 해결 등 정치군사 문제의 일괄타결을 주장할 것이다. 아울러 북한은 5·24 조치 해제, 금강산관광 재개 등 경제실리를 위한 이슈를 제안할 것이다. 반면 한국은 핵문제의 해결과 함께 인도적 지원, 민생 인프라 구축을 위한 농업·축산업·환경분야 등에서의 협력, 남북사회·문화 교류, DMZ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등을 주요 의제로 제시할 것이다.

남북관계에 대한 남북한의 기본 입장과 관심 사항, 접근방식 등이 다르기 때문에 남북대화에서 남북한이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이 모두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인도적 분야, 경제협력분야, 문화교류 등에서 합의가 도출될 수도 있다. 그리고 남·북·러 협력이 의한 라선·하산 프로젝트와 함께 신의주, 두만강 유역 개발 등에서 남·북·중 협력 등 3자 협력을 통해 남북협력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 박종철 통일정책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 2. 남북 교류협력

### 가. 경제분야

2010년 5·24 조치 이후 남북경협은 대체로 부진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개성공단 하나뿐이며, 준비 중인 사업도 라진·하산 물류 사업 하나밖에 없다.

개성공단 외의 남북경협 중에서 금강산 관광은 2008년 7월 관광객 사망 사건으로 중단되었고 2008년 12월에는 개성 관광까지 중단되었다. 일반교역과 위탁가공교역은 5·24 조치에 의해 2011년부터 중단 상태에 있다. 개성공단 외의 투자 사업은 남북관계가 악화되기 전에 대부분 실패하였으며, 5·24 조치 이후에는 모든 사업이 중단 및 금지되었다. 그 결과 2011년 이후에는 개성공단을 위한 물자 반출입이 남북 교역의 99%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다. 2013년 4월에 북측이 근로자 철수 조치를 취하며 개성공단마저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하기도 했지만 5개월 만인 9월에 재가동에 들어갈 수 있었다.

● 표 III-1 남북교역 전체 및 개성공단 교역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반 입			반 출			합 계		
	교역 전반	그 중 개성공단 교역	개성 비중	교역 전반	그 중 개성공단 교역	개성 비중	교역 전반	그 중 개성공단 교역	개성 비중
2005	340	20	5.8	715	157	21.9	1,056	177	16.7
2006	520	76	14.6	830	223	26.8	1,350	299	22.1
2007	765	101	13.2	1,033	339	32.9	1,798	441	24.5

연도	반 입			반 출			합 계		
	교역 전반	그 중 개성 공단 교역	개성 비중	교역 전반	그 중 개성 공단 교역	개성 비중	교역 전반	그 중 개성 공단 교역	개성 비중
2008	932	290	31.1	888	518	58.4	1,820	808	44.4
2009	934	418	44.7	745	523	70.2	1,679	941	56.0
2010	1,044	705	67.6	868	738	84.9	1,912	1,443	75.5
2011	914	909	99.5	800	789	98.6	1,714	1,698	99.1
2012	1,074	1,073	99.9	897	888	99.0	1,971	1,961	99.5
2013	615	615	99.9	521	518	99.4	1,136	1,132	99.7
2014.1~10	990	989	100.0	938	933	99.5	1,927	1,923	99.8

출처: 통일부, 『남북교류협력동향 10월호』 (서울: 통일부, 2014).

주: 반올림 처리한 수치임.

남북관계가 악화되어 대부분의 경험이 중단되었는데 개성공단만 살아남은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남측 입장에서 보면, 개성공단은 막대한 투자자금이 들어간 사업이라서 쉽게 포기할 수 없다. 또 사업이 정착 단계에 들어가면서 대다수 입주기업이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 대북지원과 남북경협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지만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국민적 지지도가 높은 편인데, 이는 개성공단이 남한경제 및 기업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북측 입장에서 개성공단은 적지 않은 이익이 된다. 북한당국에게 남북경협은 중요한 외화 수입원이었으며, 5·24 조치로 그 중 큰 부분을 이미 잃은 상황에서 추가로 개성공단까지 잃는 것은 현명한 일이 아니다. 물론 북측 근로자들이 남한 기업의 영향을 받는 것은 그들에게 달가운 일이 아니지만, 북측 직장장을 통해 남북 간의 접촉을 상당

---

부분 차단하고 있으며, 지난 10년 동안 큰 문제없이 근로자들을 통제할 수 있었다. 또 북한당국은 근로자 임금이 꾸준히 오르고 있어 점점 더 많은 외화수입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고 있을 것이다.

공단이 가동되기 시작한 2004년 12월 이래 지난 10년 동안 개성공단의 생산 및 교역 규모는 2013년을 제외하면 계속 증가세를 유지했으며, 2014년에는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2010년 5·24 조치로 신규투자가 금지되어 가동기업과 근로자는 늘어나지 않고 있는데도 생산 및 교역 규모가 늘어난 것은 생산성이 뚜렷하게 향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신호이다.

개성공단이 앞으로 얼마나 발전할 수 있을지는 5·24 조치 해제 여부에 달려 있다. 5·24 조치가 해제되지 않을 경우 개성공단 사업환경에도 큰 변화가 없을 것이며 생산 및 교역 규모는 천천히 증가하는 데 그칠 것이다. 2013년에 중단 위기를 겪은 후 남북 당국은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공단의 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으며, 공동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를 여러 차례 열었다. 그러나 실질적인 제도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북측 입장에서는 5·24 조치가 유지되는 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이유가 별로 없다. 어차피 더 이상의 신규 투자는 들어오지 않을 것이고 인근 지역 노동력이 고갈되어 근로자 수를 늘릴 수도 없기 때문이다.

5·24 조치가 해제되고 신규 투자가 가능해진다면 사정은 크게 달라져 북측 입장에서도 제도 개선을 통해 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유인이 생길 것이며, 투자를 고려하는 남측 및 외국기업들도 북측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또 공단이 앞으로 크게 확대되려면 외지 노동력이 많이 들어와야 하고, 이들을 위한 대규모 숙소 건설이 필요해진다

---

다. 숙소 건설과 관리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 것이냐를 둘러싸고 남북 양측 당국과 입주기업이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 물론 제도 개선과 숙소 건설 및 신규 기업 입주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므로, 5·24 조치가 해제되어도 개성공단 사업은 몇 년이 더 지나야 크게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준비 중인 유일한 신규 사업인 라진·하산 물류 사업의 미래는 아직 불투명하다. 라진·하산 물류 사업은 국제협력을 통한 남북경협 첫 사례라는 점,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라는 북방경제권 형성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 기업들이 주체가 되는 민간경협이면서도 남·북·러 3국 당국이 지원하는 민관협력 사업이라는 점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라진·하산 물류 사업이 넘어야 할 난관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 먼저 여러 주체가 참여하는 동업 관계에서는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투자비용을 어떻게 분담하고 이익은 어떻게 나눌지를 둘러싸고 참여자들 간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이 문제 때문에 사업을 시작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으며, 시작한 후에도 언제든 동업 관계가 깨질 위험이 있다. 더욱이 라진·하산 사업은 러시아와 북한이 먼저 시작한 사업에 남한 기업들이 나중에 지분 참여하는 방식이며, 지분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남북관계가 나쁜 상황에서는 정치적 상호 불신이 이런 문제들을 더욱 증폭시킬 가능성도 있다.

2014년 3월 박근혜 대통령은 독일 드레스덴에서 행한 연설에서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를 함께 구축해 나가자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에서 언급된 경제협력 사업은 복합농촌단지 조성, 교통·통신

---

인프라 건설, 지하자원 개발, 남·북·러 및 남·북·중 협력사업 등이다. 이들 사업은 정부가 최근 강조하고 있는 통일준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이들 사업이 실제로 성사되려면 먼저 전반적 남북관계 경색이 풀리고 전면적인 대화와 협력으로 국면이 크게 전환되어야 한다. 2015년에 남북 양측 당국이 그러한 전환에 합의할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된다.

- 김석진 북한연구센터 연구위원

## 나. 사회·문화교류분야

2014년 1월 1일 북한 신년사는 남북관계의 개선을 강조했으며, 1월 7일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대박론이 발표됨으로써 남북교류에 긍정적인 기대감이 형성되었다. 이 같은 분위기를 바탕으로 2월 말 금강산에서 이산가족상봉이 성사되었다. 2014년 내내 북한은 단거리 미사일과 발사체를 지속적으로 발사하고 대남위협을 가했으나 중·저강도의 무력시위 수준을 넘지 않았으며,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추가적인 핵실험을 시도하지는 않았다. 북한은 2014년 내내 금강산 관광사업의 재개와 5·24 조치의 해제를 요구했으며, 이는 대북제재와 북중관계 경색으로 인한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구체화를 위해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했다. 드레스덴 구상은 대북 인도적 지원, 북한 민생인프라 구축, 그리고 남북한 동질성 회복이라는 3대 대북제안을 포함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남북한 간의 생태통로, 민생통로, 그리고 문화통로를 제안했으며, 9월 유엔 총회의

---

연설에서도 남북한 간 3대 통로를 재차 강조했다.

2014년 이 같은 상황적 조건에 힘입어 이명박 정부 및 전년도에 비해 남북교류가 개선된 추이를 보였으나 전반적인 활성화의 국면으로 접어들지는 못했다. 이는 새로운 남북관계 형성을 위한 협상과정에서 남북한 간의 이견차가 원활하게 해소되지 못한 결과로 풀이된다. 당국이 국제적 관례와 신뢰에 기반을 둔 새로운 남북관계의 형성을 추구한 반면, 북한은 과거 자신들에게 유리한 남북협상의 관성을 지속시키려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북한의 인천 아시안게임 참가 등 2014년 남북 사회·문화교류 분야에서 일정한 성과들이 도출되었다. 2월 금강산 이산가족상봉 이후 5월 까지 북한은 각종 미사일을 발사하고 연평도 인근 함정에 대한 포격 등 간헐적 무력시위를 벌임으로써 남북교류에도 진전이 없었다. 그러나 6월 이후 이전에 비해 다양한 분야에서 비교적 활발한 남북교류가 이루어졌으며, 사회·문화분야에서도 성과들이 도출되었다. 특히 6월 4일에는 경남통일농업협력협회 대북지원이 승인되었으며, 소규모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5·24 조치 이후 최초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2014년 남북 사회·문화교류에서 가장 상징적인 사안은 북한의 인천 아시안게임 참가였다. 북한은 6월 10일 인천 아시안게임 엔트리(150명)를 제출했으며, 9월 11일에는 북한 선수단이 인천 아시안게임(9.19~10.4) 참가를 위해 입국했다. 북한은 금메달 11개로 종합 7위의 성적으로 12년만에 10위권에 복귀함으로써 큰 성과를 도출했다. 북한여자축구는 결승에서 강적인 일본을 꺾고 우승함으로써 이목을 집중시켰으며, 특히 10월 4일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일에 황병서, 최룡해, 김양건 등 북한 수뇌부가 선수단 격려차 전격적으로 인천을 방문했다. 비록



---

성사되지는 않았으나 북한은 7월 7일 북한 최고 수준인 공화국 정부성명을 통해 인천 아시안게임 응원단 파견을 발표했다. 또한 북한장애인 대표팀이 최초로 인천 장애인아시안게임 참가를 위해 입국(10.11)했다.

학술분야 교류의 경우 언어와 역사분야에서 일정한 성과가 있었다. 지속사업인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평찬사업과 관련하여 7월에 제21차 공동편찬회의가 5년 만에 중국 선양에서 개최(7.29~8.6)되었으며, 10월에는 개성에서 제22차 공동편찬회의(10.30~11.8)가 개최되었다. 역시 지속사업인 개성만월대 남북 공동발굴 조사사업과 관련하여 개성에서 공동발굴을 재개하는 문제에 대한 협의(7.1)가 있었으며, 7월에는 제6차 공동발굴 조사가 3년만에 실시(개성, 7.22~8.16)되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경기도가 추진하는 개성한옥 보전사업 추진 협의(선양, 3.31~4.2)가 있었으며, 7월 5일에는 개성에서 동 사업에 대한 실무협회가 있었다.

문화·예술분야에서는 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의 주최로, ‘신춘 한반도 통일문화 기획전’이 개최되어 남북한과 중국 작가의 작품 40여점이 전시(서울, 3.28~4.16)되었다. 또한 윤이상평화재단의 관계자들이 윤이상음악연구소 창립 30돌 기념음악회 참관(9.26~29)을 위해 평양을 방문했다.

2014년의 남북 사회·문화교류는 전년도에 비해 일부 분야에서 진전된 성과가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장기간 지속되어온 경색 국면이 관성을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09년~2013년 기간 중 남북 사회·문화교류사업의 승인은 2건에 불과하며, 2014년에는 승인된 경우가 없다. 2014년 12월 현재 종교분야를 중심으로 남북접촉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2015년 남북 사회·문화교류의 확대 가능성을 예상할

---

수 있다. 천주교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 한국종교인평화회의, 평화3000 등이 남북 종교교류를 위한 대북접촉 신청을 했으며,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와 겨레얼살리기운동본부도 대북접촉 신청을 했다.

2014년 남북 사회·문화교류는 일부 분야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단계에 진입하지는 못했으며, 이는 외교안보적 상황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사회·문화분야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2015년에도 단기적으로 해소되기 어려운 북핵문제가 상존하고 있으며, 새로운 남북관계 형성을 위한 남북한 간의 인식차이가 해소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남북 사회·문화교류가 급격한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또한 대북전단문제 및 북한인권문제 등을 둘러싼 북한의 반발 등 남북 교류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적 요인도 있다.

그러나 남북교류의 장기경색 국면은 남북한 모두에 피로감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일정한 관계 개선의 소지가 있다. 북한은 시급한 금강산관광사업 재개와 5·24 조치의 해제를 위해서 남북관계 개선의 필요성에 직면해 있으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구체화 및 드레스덴 구상의 실현을 위해서도 남북관계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 특히 2015년이 분단 70년이라는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남북교류의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핵문제 및 남북관계가 현 상황보다 악화되지 않을 경우 2015년 남북 사회·문화교류는 금년에 비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 조한범 국제전략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 IV

북한인권과 인도주의 사안...





---

2014년 국제사회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2.17)를 통해 북한 인권 침해상황을 인도에 반한 죄(crimes against humanity)로 규정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인권침해 책임 관련, 북한 최고 지도층을 ICC에 회부할 것을 권고하였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구성 및 활동을 전면거부하며, 현장방문도 불허했던 북한은 조사위원회 보고서 발간 직후 “인권 보호를 빌미로 한 어떠한 정권교체 시도와 압박에 끝까지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북한에는 보고서에 언급한 인권침해 사례가 없음을 다시한번 확인한다”고 강력히 반발(2.17)하였다. 한편,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2013년과 2014년에 투표 없이(without a vote)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이 2014년에는 찬성 30표, 반대 6표, 기권 11표로 채택(3.28)되었으며, 유엔 총회는 북한인권 침해 관련 북한 지도부의 ICC 회부 조항을 포함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12.18)하였다.

2014년은 북한인권 관련하여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던 한 해로 평가할 수 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제25차 인권이사회에서 조사 결과를 최종발표(3.17)하였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북한에서 최고 지도층의 정책과 결정에 따라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이루어졌음을 지적하고, 북한 정치제도의 근본적 개혁, 국제사회의 ‘보호책임’ 의무 환기, 유엔 북한인권 현장사무소(field-based structure) 설치, 중국의 탈북민 강제복송 방지 등을 권고하였다. 조사위원회 활동 이후 유엔 안보리는 13개 이사국이 참석한 가운데 아리아 방식(Aria formula) 비공식 회의(4.17)를 통해 북한인권사안의 ICC 회부에 대한 총 9개국의 찬성을 확인하였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 구성과 활동에 대한 북한의 전면거부에도 불구하고, 조사위원회의 활동과 보고서를 통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질적인 변환

---

을 가져왔다고 평가된다.

국제사회의 압력에 대해 북한 당국은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최종보고 직후 토론 과정에서 북한의 서세평 대사는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기도 했다. 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대한 북한의 기본 입장은 “우리 공화국에는 인권문제가 없으며, 인권문제에 대한 언급은 미 제국주의의 책동이다”라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북한인권조사위원회에 대한 이러한 반발 이후 유엔 인권이사회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에 2차 국가보고서를 제출(3.26)하고, 2009년 1차 보고서에 이어 2014년 2차 보고서에서 상당수의 권고를 수용하는 등 다소 진전된 모습을 보였다. UPR 2차 보고서에서 북한은 특히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 등 북한 내 취약계층에 대한 인권증진 노력을 강조하였다. 또한, 268개의 국제사회의 권고안 중에서 113개의 권고안을 최종적으로 받아들였다. 또한 북한은 조선인권연구협회 명의의 인권보고서를 발간(9.13)하여 자국의 인권상황을 국제사회에 설명하였다. 조선인권연구협회의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의 인권인식은 ‘인권은 자주적 권리이다’, ‘참다운 인권의 체현자는 인민대중이다’, ‘인권은 국권이다’, ‘기본인권과 인권기준’이라는 명제로 요약된다. 보고서는 특히, 기본인권과 인권기준 관련 북한이 인식하고 있는 기본인권과 서방세계 중심의 인권기준을 설명하면서 세계 여러 각국마다 상황이 다르므로 서방의 기준을 보편적 기준인 양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고서는 또한 북한의 인권관이 자본주의 세계관과 차별되는 차원의 사회주의 세계관을 전제하고 있는 인권관이고, 타국의 개입 및 간섭을 부정하는 자주적 권리로서의 인권관이며, 국가 중심의 인권관이라고 설명하였다. 북한은 이러한 보고서 내용을

---

중심으로 유엔에서 인권설명회를 개최(10.8)하는 등 자국의 인권개선 노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였다.

북한은 북한인권 침해상황에 대한 ‘최고준엄’의 책임성을 거론하며, 국제형사법적 처벌 가능성을 논의하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이 통과되기 전, 유엔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11.5)했다. 또한, 북한은 마르주키 다루스만(Marzuki Darusma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방북을 제안하며, 결의안 내용 중 ‘민감한’ 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지금까지의 국제사회의 인권사안 제기에 대한 북한 당국의 태도가 일부 협력 혹은 전면배격 및 비협조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북한의 대응은 이례적인 것이었다. 북한은 유엔 인권 메커니즘 중 UPR에는 협조적 태도를 보이며,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해 왔으나,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방북에 대해서는 단호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다. 하지만, 유엔 총회 결의안 채택 이전 보고관의 방북 관련 협상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 총회는 강력한 차원의 북한인권결의를 통해 북한 최고 지도층의 국제형사처벌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국내적으로는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다양한 움직임이 있었다. 신년 초 여야 양당의 대표들의 합의에 의한 북한인권법 제정 가능성이 대두되었다. 야당의 심재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인권증진법안’(4.28)과 새누리당의 김영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인권법안’(11.21)은 각각 양당의 통합법안으로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11.24)를 거쳐 공청회(12.19)를 통해 논의되었다. 자유권과 사회권 논쟁으로 요약되는 북한인권법에 대한 여야의 상이한 입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여당이 주장하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북한인권재단과 야당이 제시하



---

는 인도적지원협의회, 인권정보센터 등이 주요 쟁점이다. 특히, 북한인권재단을 둘러싼 논쟁이 가장 첨예한데, 이는 북한인권재단의 설립이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에 기여하기보다는 논란이 되는 일부 북한이탈주민 단체들의 활동을 더욱 활성화할 수도 있다는 야당의 우려 때문이다. 북한인권법 제정 논의는 한국 사회 내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각 계각층의 합의를 도출하는 데 주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2014년 한 해 한국 정착 북한이탈주민의 숫자는 2012년과 2013년에 비해 감소한 1,100명대를 유지하였다. 한국 정착 총 북한이탈주민 숫자는 27,000명대 초반으로 파악된다. 김정은 체제에서 북한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북중 국경지대의 감시를 강화하여,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을 이탈하는 탈북민의 숫자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양강도 혜산과 같은 주요 국경도시의 경우 김정은의 직접 지시 하에 탈북 시도자에 대한 대대적 단속이 이루어지는 등 사회통제 및 국경통제가 이전에 비해 더욱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2015년 국제사회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에서 제시된 인권우선(rights up front)전략을 중심으로 특히, 2014년 북한이 UPR 과정을 통해 받아들인 권고사항을 시작으로 북한과의 인권대화를 추구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북한 내 교회소 시설 개선과 같은 구체적 사안이 그 대상이 될 것이다. 2015년에는 국제사회의 다자적 차원의 압박과 더불어 각 국가별로 양자적 차원의 북한인권 개선 관련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동북아 지역에서는 북미 대화, 남북관계, 북일 협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 이후 북한인권 논의가 활발해질 것이다.

2015년 북한인권문제는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 등 동북아정세 일반

---

에 협력보다는 갈등을 유발하는 핵심 이슈가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2014년 북한인권문제와 대북·통일정책과의 연계성이 강조되었고, 북한인권문제가 북핵문제와 더불어 대북정책의 주요 사안으로 간주되었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동력이 약화된 현시점을 감안할 때, 한국 정부는 북한인권문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북한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행복한 통일’로 대변되는 통일정책의 큰 틀로 연결시킬 가능성이 높다. 또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후속 조치로서 논의된 북한인권 현장사무소(field-based structure)의 서울 설치가 이미 결정되었고, 2015년에 실행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인권 현장사무소 설치를 계기로, 국내외 다양한 인권 관련 단체들을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와 정부와의 상호작용이 더 활발해질 것이다. 한국 정부는 북한인권 현장사무소 설립을 중심으로 인권조사위원회의 구체적 후속조치를 지원하여 북한인권 침해실태의 객관적 조사체계 마련,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 방안 모색,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 등 다양한 차원의 대북 인권정책을 실행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적으로는 여야가 각각 발의한 북한인권법 통합안이 국회에서 상정되어 논의되고 있음을 볼 때, 2015년 상반기 중 여야 합의된 형태의 북한인권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인권법이 통과되면 2005년부터 논의된 한국 사회 내 북한인권 개선논의가 일정 정도의 합의를 이루고, 이후의 제도화 과정을 통해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담보한다는 함의를 가지게 될 것이다.

북한은 2015년에도 자국의 인권사안과 관련하여 적극적이고 공세적 대응을 선택할 것이다. 필요에 따라서는 자체 보고서를 발간하고 자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설명을 지속할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양자 간

---

인권대화에도 응할 것이다. 또한, 유엔을 위시한 각국의 북한인권문제 제기에도 적극적으로 맞설 것이다. 미국의 북한인권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대북 적대시 정책을 통한 반공화국 몰락’이라는 비판을 서슴치 않을 것이며,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북한인권문제 제기에 민감하게 대응할 것이다. 특히, 북한인권문제 제기에 맞서 핵무력 위기 혹은 핵실험 위협이라는 카드를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2015년 한국이 광복 70주년을 기념하여 통일준비를 본격화하는 데 반하여 북한은 조선노동당 창립 70주년을 기념하며 체제 내부결속을 더욱 공고히 하며, 북한 내부 인권문제 제기에 대해 더욱 공세적 대응을 펴나감으로써 남북 간 인식과 정책의 차이를 드러낼 것이다.

- 한동호 북한인권연구센터 부연구위원

## 부록: 2014년 주요 사건일지

### 남북관계 일지

- 1.1 김정은,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 마련” 촉구
- 1.6 박근혜 대통령 “통일은 대박” 신년 기자회견
- 1.16 북한 국방위 ‘중대제안’ 발표, 상호 비방·중상·군사적 적대행위 전면 중단 제의
- 1.17 정부, 북한의 ‘중대제안’ 거부, “신뢰, 행동으로 보여야”
- 1.24 북한 국방위 공개서한, “중대제안, 위장평화공세 아니다”  
정부 “북한은 행동으로 진정성 보여야” 이산상봉 등 ‘진정성 입증 행동 리스트’ 제시
- 북한 적십자회, 한국 적십사회에 통지문 보내 이산가족상봉 제의
- 2.3 남북, 5일 적십자 실무접촉 합의
- 2.5 남북 적십자 실무 접촉
- 2.12 남북 고위급 접촉 개최
- 2.20~25 남북 이산가족상봉 행사(금강산)
- 2.21 북한, 단거리 발사체 4발 발사  
개성공단 3통 관련 통신 사업자 간 협의 개최
- 2.24~25 북한 경비정 연평도 근해에서 NLL 세 차례 침범
- 2.27 북한, 탄도미사일 4발 발사  
북한 억류 우리 국민(김정욱 씨) 기자회견 실시
- 2.28 북한, 우리 국민 억류 관련 조속한 송환을 촉구하는 우리측 통지문 수령 거부
- 3.1 박근혜 대통령, 3·1절 기념사에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기반 구축의 중요성 강조 및 이산가족상봉 정례화 제안
- 3.5 정부, 상봉 정례화 등 관련 남북적십자 실무접촉 3월 12일 제의
- 3.7 북한, 남북적십자 실무접촉 제의 거절
- 3.13 남북 개성공단 상사중재위원회 1차 회의
- 3.26 북한 조평통 서기국 보도 통해 대북전단 살포 관련 “남북관계의 파괴적 후과” 위협
- 3.28 서해 NLL 침범으로 나포(3.27)했던 북한 어선 송환  
박근혜 대통령, 독일 드레스덴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연설에서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위한 3대 구상 발표 △남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문제 해결, △남북한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 구축, △남북 주민간 동질성 회복
- 3.30 북한 외무성 성명, 핵억제력 강화하기 위해 핵실험 배제하지 않을 것

- 이라 위협
- 3.31 북한, 서해 해상 사격훈련 실시
- 4.11 국방부 합동조사 결과, 추락 무인기가 북한 소행으로 확실시 되는 정황근거를 다수 식별했다고 중간발표
- 4.12 북한 국방부 대변인, 드레스덴 구상을 ‘흡수통일’ 논리이자 없는 사실을 날조해 북한을 비방중상했다고 비난
- 4.23 북한,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위로의 뜻을 표명, 박근혜 대통령에게 공개질문장 전달과 더불어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전가
- 4.29 북한, 서해 해안포 사격훈련 실시
- 5.3 북한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 대변인 담화, 한미 정상의 ‘전시작전권’ 전환 시기 재검토 합의를 ‘반민족적 범죄행위’라고 비난
- 5.8 국방부, 북한 소형 무인기 관련 과학기술 조사결과 발표 통해 북한의 소행임을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과학적 증거(Smoking Gun) 제시
- 5.11 북한 국방위 검열단 대변인 담화, 우리 국방부의 무인기 조사 결과를 부인하며, 공동조사를 재차 주장
- 5.20 정부, 통신문 통해 평양 평천 구역 살림집 붕괴 사고 관련 위로의사 전달
- 5.21 염수정 추기경, 개성공단 방문
- 5.22 북한, 연평도 부근에서 초계임무 중이던 우리측 함정 근방에 포격, 우리측 함정도 NLL 이북에서 경비중이던 북한 함정 인근에 대응사격 북한의 6·15 북측위·민화협, ‘노무현 前대통령 서거 5년’ 관련 추모 전문 발송
- 5.23 북한, 인천 아시안게임(9.19~10.4) 참가의사 표명
- 5.30 북한 최고재판소 재판절차 진행, 북에 억류된 김정욱 선교사에 ‘무기노동교화형’ 언도
- 6.6 박근혜 대통령 현충일 추념사, 북한의 핵개발 및 도발위협 중단 촉구
- 6.9 북한 조평통 대변인 성명, 북한인권사무소 남한 설치 관련 ‘침략과 체제전복을 노린 반공화국 모략도구’라고 비난하며 ‘무자비한 불벼락 세례’ 등 위협
- 6.16 동해상 표류 북 선박(6.3)관련, 귀환의사를 밝힌 선원 5명 판문점 통해 송환
- 6.25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 남측 관계자 방북 및 사업 재개방안 협의(개성)
- 6.26 ‘겨레의 숲’, 북한 민족화해협의회와 산림협력 관련 실무접촉(개성) 남북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제5차 회의 개최
- 6.29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
- 7.2 경기도 및 경기문화재단, 개성 한옥보존 사업관련 방북 협의(개성)
- 7.3 북한 주민 1명, 백령도로 넘어와 귀순 요청
- 7.7 북한 공화국 정부 성명, 북침전쟁연습 전면중지와 6·15, 10·4 선언

- 등 남북합의 존중·이행 등을 주장하며, 인천 아시안게임 응원단 파견 발표
- 7.9 북한, 동해상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 7.13 북한, 동해상 단거리 미사일 발사
- 7.17 인천 아시안게임 북한 선수단·응원단 참가 관련 남북실무접촉 개최 (판문점)
- 7.26 북한,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발사
- 7.29~8.6 거례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회의 개최(중국 선양)
- 7.30 북한, 묘향산 일대에서 동쪽 방향으로 단거리 발사체 발사
- 8.12 북한 어선 1척 NLL 침범, 우리 해군의 경고사격 후 퇴각
- 8.14 북한 주민 2명, 인천 교동도로 귀순
- 8.17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김대중 前대통령 서거 5주기 (8.18) 계기 추모화환 전달(개성, 김양건 북한 통전부장 전달)
- 8.19 인천 아시안게임 조추점 관련 북한 올림픽 위원회 대표단 방남(8.19~23)
- 8.28 손광호 북한 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 조선중앙TV 출연해 인천 아시안게임 응원단 불참 입장 표명
- 9.1 북한, 자강도에서 단거리 발사체 동해상으로 발사
- 9.6 북한, 원산에서 단거리 발사체 동해상으로 발사
- 9.7 북한 조평통 대변인 담화,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과 미군 철수 촉구
- 9.8 독도 근해서 구조(9.7)한 북한 주민 및 어선, 판문점 통해 북측 송환
- 9.11 인천 아시안게임 참가 북 선수단 선발대(94명) 방남
- 9.19 북한 경비정 서해 NLL 침범
- 9.24 박근혜 대통령,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북핵문제와 북한인권문제 언급 △북핵문제와 인권문제가 해결된 통일 한반도의 비전 제시 △북한에 핵을 포기하고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변화의 길로 나올 것 촉구 △북한인권 관련 COI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조치와 국제사회의 탈북민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 강조
- 9.28 북한 리수용 외무상 유엔 총회 연설에서 기존 핵 보유 입장을 재강조 하고, 북한의 인권문제제기 비난 및 연방제 통일방안 등 주장
- 10.4~5 북한 고위급 대표단(황병서 총정치국장, 최룡해 노동당비서, 김양건 통일정치부장),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 참석차 방남
- 10.4 남북대표단 오찬 겸 회담
- 10.7 북한 경비정, NLL 침범으로 교전 발생
- 10.10 북한, 민간단체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첫 무력대응
- 10.11 인천 장애인아시안경기대회 북한 선수단 방남
- 10.15 남북 군사당국 비공개 판문점 접촉(합의 없이 종료)
- 10.16 조평통, 남북 공동 조국평화통일 기도회 개최
- 정부, 인천 아시안게임 북한 선수단 참가 경비 중 일부 지원 결정

- 10.19 파주지역 군사분계선에서 남북 간 총격전 발발
- 10.30~11.18 겨레말큰사전 남북동등편찬회의 개최 방북(평양)
- 11.2~11 연천 국제유소년축구대회 북한 선수단 참가(32명, 연천군)
- 11.5 정부, 이희호 여사 북한 주민접촉 신고 수리
- 11.6 영통사 낙성 9주년 기념 통일기원 남북 합동법회 협의 관련 친태종자(4명) 방북(개성)
- 11.9 정부, 억류 미국인 석방을 환영하며, 북한이 김정옥 선교사 석방·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 간 인도주의적 문제 해결에도 적극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외교부 대변인 논평)
- 11.10 북한군 판문점 부근 군사분계선에 접근, 우리 군의 경고사격 후 퇴각
- 11.11 개성공단 북측 통행검사소의 에볼라 검역장비 지원 요청(10.29)에 열감지 카메라 3대 지원(대여) 결정(11.20 설치 예정)
- 11.12 조평통 서기국 보도, 호국훈련에 대해 '북침전쟁연습'이라며 비난
- 11.16 현대아산 관계자 금강산관광 16주년 기념행사 참석(금강산)
- 11.20 민화협 관계자, 광복 70주년 계기 남북청소년교류 관련 방북 협의(개성)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개성공업지구노동규정' 개정
- 11.21 이희호 여사 방북 관련 김대중평화센터 관계자 방북 협의(개성)
- 11.23 정부, 독도 근해 표류중인 북한어선 구조(11.26 북측에 인계)
- 12.9~11 현대아산, 겨울철 시설점검 위해 방북
- 12.10 북한, 남한 '북한인권법' 제정 비난
- 12.11 북한, 박근혜 대통령 인권 발언 관련 원색 비난
- 12.12 북한 조선신보, 평창 동계올림픽의 남북한 공동 개최 방안 제안
- 12.15~16 북한, 정부의 개성공단 노동규정 개정관련 항의 통지문 거부
- 12.16 김대중평화센터 및 현대아산, 김정일 3주기 관련 조화전달 위해 개성방문
- 12.24 김정은, 김대중 前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에 친서 전달
- 12.29 정부, 북측에 남북 당국 간 대화 개최 제안

### 북한정세 일지

- 1.1 김정은,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및 신년사
- 1.5 김정은 신년사 과업 관철위한 군 켈기모임 개최
- 1.7 김정은, 취약계층을 위한 군수산사업소 신설 지시
- 1.8 김정은 부부, 로드먼 등 미국 NBA 출신 선수들과 북한선수들 농구경기 관람
- 1.12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중앙선거위 구성
- 김정은, 인민군 제534군부대 지휘부 시찰
- 1.15 김정은, 국가과학원 현지지도

- 1.20 김정은, 항공육전병부대 야간훈련 참관  
 1.23 김정은, 오중흡 7연대 칭호 조선인민군 제232군부대 훈련지도  
 1.29 박봉주 내각총리, 축산기지 건설현장 시찰  
 2.4 김정은, '제111호 백두산선거구 선거자 대회'에서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후보로 첫 추대  
 2.12 김정은, 사격경기용 총탄공장과 메아리사격관 시찰  
 2.15 김정일 탄생 72돌 경축 중앙보고대회 실시  
 2.16 김정은, 김정일 생일 맞아 군 지휘부와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2.18 김정은 부부, '해군 대 공군' 체육경기 관람  
 2.23 김정은, 취약계층 위한 군수산사업소 건설현장 시찰  
 3.7 김정은, 오중흡 7연대 칭호 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2620군부대 비행훈련 지도 및 군부대 시찰  
 3.10 김정은,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에 첫 선출  
 3.17 김정은, 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188군부대 비행훈련 지도 및 군중·군단급 단위 지휘성원들의 사격경기 지도  
 3.22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 위성과학자거리 건설 정형 현지 요해  
 3.31 NLL 인근 서해안포, 방사포 발사  
 4.2 박봉주 내각 총리, 황해남도 내 협동농장 영농실태 현지 요해  
 4.8 김정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 개최  
 4.9 김정은, 최고인민회의의 제13기 제1차 회의의 진행 및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서 재추대  
 4.15 김정은, 김일성 생일 맞아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4.20 조선인민군 제1차 비행사대회 진행  
 4.27 김정은, 서남해상의 주요 적대상물 타격임무를 맡은 장거리포병구분대 포사격훈련지도 및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 개최  
 5.1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에 임명(최룡해 해임)  
 5.2 김정은,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에서 전국 소년축구경기대회 결승경기와 모란봉악단의 축하공연 및 축포발사 관람  
 5.10 김정은 부부, 서부 지구작전비행장에서 진행된 '조선인민군항공 및 반항공군 비행지휘성원들의 전투비행술 경기대회-2014'지도  
 5.14 김정은, 1월 18일 기계종합공장을 방문하고 현대화과업 제시  
 5.19 평양 아파트 붕괴사고 발생  
 5.20 리용호 북한 6자수석 중국 방문  
 5.24 리수용 북한 외무상 중동·아프리카 순방  
 5.26~28 북일 국장급 회담 개최(송일호 북일국교정상화교섭 담당대사·이하라 준이치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스웨덴)  
 5.27 김정은, 평북 '허철용 동무가 사업하는 기계공장'시찰 및 현대화 지시  
 5.28 리수용 북한 외무상, '블럭불기담운동(비동맹운동)' 외무상회의에서 연설



- 6.7 북한, 비영리 아동복지단체 ‘조선어린이후원협회’ 설립
- 6.11 북한, 원산·금강산 일대 ‘국제관광특구’ 설치에 대한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 정령 발표
- 6.13 김정은, 동해안 전방초소 여도방어대 시찰
- 6.14 오중흡 7연대 칭호 받은 조선인민군 제863군부대 시찰
- 6.18 북한, 외자유치·경협 총괄 ‘대외경제성’ 출범
- 6.19 김정일 당 사업개시 50주년 기념행사  
북한, 내각 총리에 최영건 임명
- 6.25 북한, 인민무력부장인 조선인민군 육군대장에 현영철 임명
- 6.27 김정은, 최첨단 수준의 새로 개발된 초정밀화된 전술유도탄 시험 발사 지도
- 6.29 중국, 옌지-평양 관광 전세기 운항 개시
- 6.30 김정은, 인민군 전략군의 전술로케트 발사훈련 지도
- 7.1 송일호 외무성 대사, 북일 회담 참가  
중국, 창춘-평양 관광 전세기 운항 개시
- 7.3 북한 칠보산,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록
- 7.5 김정은, 인민군 육군·해군·항공 및 반항공군의 섬 상륙전투훈련 지도
- 7.7 김정은, 동해안 전방초소 옹도방어대 시찰
- 7.8 김정은, 김일성 20주기 맞아 금수산태양궁전 참배(황병서·리영길·현영철·변인선·서홍찬·박영식·렵철성·조경철)  
김일성 사망 20주기 중앙추모대회(평양체육관)
- 7.10 김정은, 전략군 서부전선 타격부대 전술로케트 발사훈련 현지지도
- 7.11 김정은, 평양 국제비행장 항공역사 건설장 현지지도
- 7.14 북한, 고성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방사포 및 해안포 동해로 발사
- 7.23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평양시·황해남도·남포시·평안남북도 일부 지역들에 ‘경제개발구 지정’ 정령 발표
- 7.26 ‘정전협정 체결(조국해방전쟁승리, 전승절)’ 61주년 경축 중앙보고대회 개최
- 8.1 김정일의 ‘전 당 김일성주의화 방침’ 제시 40주년 기념 중앙보고대회
- 8.3 ‘8월 3일 인민소비품생산운동’ 30주년 기념보고회(인민문화궁전)
- 8.5 김정은, 천지윤활유공장 현지지도
- 8.10 리수용 외무상,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연설
- 8.15 김정은, 전술로케트탄 시험발사 지도 및 새로 조업한 갈마식료공장 현지지도
- 8.17 중국 지안-북한 만포 당일 관광코스 개통
- 8.30~31 북한, 평양국제프로레슬링대회 개막
- 9.1 북한, 자강도 용립 인근서 단거리 발사체 발사
- 9.3 김정은 부부, 모란봉악단의 신작음악회 관람
- 9.6~16 강석주 당 중앙위 비서, 유럽 순방

- 9.8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9월 8일 북일 우호 야마나시현 대표단(단장: 가네마루 야스노부)과 담화
- 9.9 북한 정권수립 66주년 경축 중앙보고대회 개최  
북한, 지난 8월 김정은 현지도 당시 다리 저는 모습 처음 공개
- 9.10 북한, 평양에 '미래과학자거리' 건설 시작
- 9.11 북한-몽골, '과학기술 협조에 관한 양해문' 조인  
리수용 외무상 아시아-아프리카법률협상기구 제53차 회의 참석차 이란 방문
- 9.12 강석주 노동당 국제담당 비서, EU 인권특별대표(스타브로스 람브리 니디스)와 회동
- 9.13 조선인권연구협회 보고서(인권보고서) 발표
- 9.16 북한, 건설 시공 감독 강화를 위한 '건설감독법' 제정
- 9.17 제14차 평양국제영화축전 개막
- 9.25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2차 회의(평양)
- 9.27 북한, '김정은 친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전달
- 9.29 송일호 북일 국교정상화교섭 담당대사, 이하라 준이치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국장과 회담
- 9.30~10.10 리수용 북한 외무상 러시아 방문
- 10.1 김정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리극강 국무원 총리, 장덕강 전인대상 무위원장에게 '중국 창건' 65주년 축전 발송
- 10.4 황병서(군 총정치국장), 최룡해(노동당 비서), 김양건(노동당 통일전선부장) 인천 방문
- 10.7 북한, 유엔본부에서 처음으로 북한인권설명회 진행
- 10.10 노동당 창건일 기념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 10.12 김경희, 북한TV 기록영화에 등장
- 10.14 김정은, 40일 만에 지팡이 짚고 공개석상에 등장(위성과학자주택지구 현지도 및 국가과학원 자연과지연구소 시찰)
- 10.15 북한, 유엔본부에서 비공개 설명회를 열어 자체 인권결의안 초안 회람
- 10.19 김정은, 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1017군부대 제458군부대 전투비행사들의 도로비행장 이착륙 비행훈련 지도
- 10.20 리수용 외무상, 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알렉산드르 갈투슈카) 면담
- 10.21~10.3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아프리카 순방(중국, 수단, 콩고, 우간다)
- 10.22 북한에 억류되었던 미국인 제프리 에드워드 파울 석방  
김정은, 과학자 복지시설인 연풍과학자휴양소 현지도
- 10.26 김정은, 평양 육아원·애육원 현지시찰
- 10.30 북한, 압록강 인근 평북 '청수개발구' 관광개통식  
북한, 대학입학시험 등에 외국어 듣기·회화 시험 도입
- 10.31 북한, 대외공작기관인 내각225국 국장 지낸 강관주 사망

- 11.5 북한, '조선 외무성과 우간다 외무성 사이의 협조에 관한 협정' 체결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부속  
문건인 '아동매매·매춘·색정문화금지에 관한 선택의정서' 비준
- 11.8 북한, 북한에 억류되었던 미국인 케네스 배와 매튜 토드 밀러 석방
- 11.12 북러, 불법체류자 강제송환 협정 체결
- 11.17~24 최룡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당중앙위원  
회 비서, 김정은 특사로 러시아 방문
- 11.19 김정은, 김여정과 함께 인민군 제567군부대 관하 18호 수산사업소 현  
지도
- 11.21 김정은, 오중흡 7연대 칭호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991군부대 시찰
- 11.25 북한,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관한 국방위원회  
성명지시 및 미국 비난하는 평양시 군민대회 개최
- 11.27 김정은, '530조치'로 불리는 새로운 경제개신대책 지시  
북한, 아리랑 인류무형유산 등재
- 11.28 김정은, 첫 여성 전투기 조종사 비행훈련 참관
- 11.29 북한, 관광 특화 웹사이트인 '조선의 오늘(www.dprktoday.com)' 개설
- 12.1 김정은, 최고지도자 경호부대인 호위사령부 직속 인민군 제963군부  
대 직속 포병중대 시찰 및 강도 높은 훈련 독려
- 12.2 김정은, '외국담배 소비 금지령' 지시
- 12.2~5 국가과학원 창립 62주년 기념 과학연구성과전시회(270여건 과학연  
구성과자료)
- 12.3 리수용 북한 외무상, 이임주 북한 러시아 대사와 담화
- 12.4 북한, 장성택 처형 후속작업으로 노동당 행정부를 없애고 당 조직부  
에 7과 신설
- 12.5 김정은, 오중흡 7연대 칭호 받은 인민군 제1313부대 시찰
- 12.6 김정일 사망(2011.12.17) 3주기 즈음 '사회주의 조선의 강성변영을 위  
해 한평생 인민행 열차를 타고 초강도의 현지도 강행군을 단행하며  
주체100년의 총공세를 승리로 이끌었다'고 칭송 및 '김정은의 선군  
혁명 영도따라 최후 승리를 향하여 전진해 나갈 것'을 강조
- 12.8 북한, 김정일을 '주체혁명의 연대기마다 주체의 강성국가건설 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끈 탁월한 정치가, 위인중의 위인'이라며 '김정일 생  
전 강성국가건설 노고(2009년 200여개 현지도 등)' 찬양
- 12.9 김정은 부부, 조선인민군 제2차 군인가족열성자대회 참가자들과 공  
연관람 및 연설
- 12.12 최룡해, 방러 이후 첫 공개활동으로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행사 참석  
북한, 김일성종합대학 홈페이지 새로 개설 및 학보 수록
- 12.13 김정은, 해군 잠수함부대인 인민군 제189군부대 시찰 및 전투훈련의  
혁신 강조

- 12.14 김정일 사망 3주기 즈음 인민내무군 청년전위들의 응변·맹세모임 진행
- 12.16 김정은, 어린이식품공장 시찰 및 아동 영양지원 강조
- 12.17 김정일 3주기 중앙추모대회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서 거행
- 12.20 북한 남조선인권대책협회, '남조선인권유린조사 통보' 보고서 발표
- 12.23 김정은 조모 김정숙 띄우기
- 12.24 김정은, 군 장성 이끌고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북한 일부 인터넷 사이트 접속 불량
- 12.27 북한, 영화 '인터뷰' 상영 비난  
헌법절 맞아 체제 우월성 강조 및 준법 촉구

### 동북아정세 일지

- 1.5~10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제9차 협상 개최
- 1.7 한미 외교장관 회담(윤병세 외교부 장관·존 케리 국무장관)
- 1.7~8 제9차 한미원자력협정 진행 및 원전수출 별도문서화 합의
- 1.13 한미, 워싱턴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첫 예비 양자협의
- 1.20 남·북·중, '유엔우먼' 회의에서 일본군 위안부와 야스쿠니 신사참배 문제합동 비판
- 1.26~27 북일 정부 당국자 간 비밀 접촉(송일호 북한 외무성 북일국교정상화 교섭 담당대사·오노 게이치 일본 외무성 동북아과장, 하노이)
- 1.28 북한, 일본의 중·고등학교 교과서 제작 지침 비난
- 2.2 윤병세 외교부 장관·성김 주한 미국대사, 제9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협정(SMA) 정식 서명
- 2.8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러시아서 회동
- 2.14 한중 국제학술대회, 일본군 종군위안부 관련 문헌과 조사자료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공동 신청(공동선언문)
- 2.24 한중, 중국 시안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 광복군 기념비 설치 합의
- 3.3~9 북일 적십자 실무회담(중국 선양), 일본인 유골 문제 해결 협의진행
- 3.7 그리고리 로그비노프 러시아 외무부 북핵담당 특별대사, 북한 방문
- 3.12 한일 외교차관 협의(조태용 외교부 제1차관·사이키 아키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
- 3.16 북 피랍 요코타 메구미, 부모와 딸 몽골서 상봉
- 3.17 우다웨이 중국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북한 방문
- 3.17~21 한중 FTA 제10차 협상 개최
- 3.20 북일 적십자 실무회담에서 '정부 간 교섭 재개' 합의
- 3.25 한·미·일 정상회담(헤이그)

- 3.26 최선희 북한 6자회담 차석대표, 중국 방문
- 3.30~31 북일, 정부 협상 개최
- 4.5 북한, 미사일 추가 발사계획 일본에 비공식 통지
- 4.10 러시아, 북한 라진항 통해 석탄 첫 수출
- 4.11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베이징)
- 4.12~13 북일, 중국 다렌서 극비협약
- 4.15 중국, 북한 단순 노무자에 대한 단기 취업비자 발급 중단
- 4.16 한일 군 위안부 국장급 협의
- 4.25~26 오바마 미국 대통령 방한 및 한미 정상회담
- 5.5 러시아, 북한 채무탕감 협정 비준안 최종 서명
- 5.23 한·EU 외교장관회담, 북한 핵실험 및 도발 억지와 비핵화 추진 위한 협력 강화 합의
- 5.26~27 왕이 중국 외교부장 방한
- 5.26~28 북일 외무성 국장급 회담(스톡홀름) 진행 및 북일 협상 합의문 발표
- 5.29 중국, '광복군 제2지대 표지석' 제막식 거행
- 5.30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북한 제재 이행법안(HR 1771)' 통과
- 6.5 북러, 정부 간 통상경제·과학기술협력위원회 제6차 회의서 무역대금 무분할 결제 합의
- 6.16~17 한미 국방부, 전시작전권 고위급협의체 회의 개최
- 6.16~18 한러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황준규 수석대표·이고르 마르굴로프 수석대표)
- 6.17~18 한미, 원자력협력 협정 개정위한 제10차 협상 개최
- 7.1 북일, 국장급 협의 개최(베이징)
- 7.3~4 시진핑, 방한 및 한중 정상회담
- 7.4 일본, 대북 제재 조치 일부 해제(인적왕래 허용·송금규제 완화 등)
- 7.23 한중 국방부 간 직통전화(핫라인) 설치 합의
- 7.31 대북제재 해제 후 조총련 부의장 고덕우 서도쿄본부 위원장 방북
- 8.4 북한, 중국군 진군기념식에 북한무관 전원 불참
- 8.8 한중 외교장관회담
- 8.9 한일 외교장관회담
- 8.10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미얀마서 개최,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북중 양자회담
- 8.11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중국 방문
- 8.16 고려인 동포 자동차 팰리뮴, 러시아~한반도 팰리 대장정 일환으로 북쪽에서 휴전선 넘어 남쪽으로 들어옴.
- 8.17 북중, 지안-만포 당일 관광코스 개통
- 8.19 북한, 러시아 무기박람회인 '2014 오보론 엑스포'에 대표단 파견
- 8.21 유엔 안보리, 한미훈련 항의를 위한 북한의 회의 개최 요청 거부
- 8.22 북한,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 및 러시아 기업에 IT 서비스 제공

- 제안
- 8.30 방북 중인 안토니오 이노키 참의원, 북한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  
임위원장과 회담
- 9.5 미국, 6자회담 특사에 시드니 사일러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한반도담당 보좌관 임명
- 9.6~7 이하라 준이치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베이징서 북한 국가안  
전보위부 간부와 극비 접촉
- 9.7 북러, 양국 영토에 불법으로 입국했거나 체류 중인 상대방 국가 국민  
을 본국으로 송환하는 협정 체결
- 9.8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 미국 방문
- 9.11 제9차 한·중·일 고위급 회의 개최
- 9.17~18 한·미·중, 동북아시아협력대화(NEACD) 참석
- 9.23 한미 외교장관회담 (뉴욕)
- 9.25 한일 외교장관회담 (뉴욕)
- 9.29 북일 양국 중국 선양시 정부 간 협의 개최
- 9.30 김정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에 국경절 축전
- 10.1 리수용 북한 외무상, 러시아 방문
- 10.2 글린 데이비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와이하라 준이치 일  
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국장 회담
- 10.6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데이비드  
시어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방한
- 10.7 미·중·호, 첫 합동군사 훈련 돌입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측근인 리샤오린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회장  
일본 방문
- 10.11 북중, 백두산 관광코스 추가 개통
- 10.12~14 리커창 중국 총리, 러시아 방문
- 10.14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구상찬 총영사와 독대
- 10.17 아베 일본 총리와 푸틴 러시아 대통령 회담
- 10.18 일본 아베 내각 각료 3명 야스쿠니 신사 참배
- 10.21 한·중·일 사이버분야 당국자 협의
- 박근혜 대통령, 제14차 한중지도자포럼 참가 및 탕자쉬안 전 중국 외  
교담당 국무위원 접견
- 10.22 알렉산드르 갈루슈카 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 북한 청진 경제개발구  
방문
- 10.23 한미 외교·국방장관 연석회의(2+2) 개최
- 10.24 중국,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
- 10.27 이하라 준이치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등 일본 납치문제조사단  
입북  
유홍수 주일대사, 아베 일본 총리와 면담

- 10.29 후쿠다 야스오 전 일본 총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
- 11.10 한중 FTA 체결, 중일 정상회담
- 11.11 한미 정상회담(베이징), 한일 정상회담
- 11.12 미중 정상회담
- 11.17~24 최룡해 노동당 비서, 김정은 특사로 러시아 방문
- 11.19 최룡해 노동당 비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면담
- 11.29 러시아산 석탄, 북한 라진항 통해 국내로 반입
- 12.1~3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러시아 방문
- 12.4 미국 상원, 대만에 군함 판매하는 ‘군함이송법안’ 통과
- 12.4~10 성 김 미국 6자회담대표, 한·중·일 3국 순방
- 12.9 미국 중앙정보국(CIA), 고문실태에 관한 보고서 공개
- 12.12 정의화 국회의장, 추귀홍 중국대사 접견
- 12.15 러시아-북한, ‘위험한 군사 활동 예방에 관한 협정’ 초안 서명
- 12.16 북한, 김정일 고향 러시아 하바롭스크에 방문 기념비 제막식
- 12.17 중국, 북한에 김정일 국방위원장 3주기 추모 꽃바구니 전달
- 12.19 푸틴 러시아 대통령, 2015년 제2차 세계대전 승전 70주년기념식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초청
- 12.24 소니픽처스, 김정은 암살을 다룬 코미디 영화 ‘인터뷰’ 온라인 배포
- 12.29 한·미·일, 북한 핵·미사일 정보 공유 약정 체결  
한일, 외교차관 합의

## 북한인권 일지

- 2.11 탈북자 통해 전거리 교화소 참상 공개
- 2.16 북한 입국 호주 선교사, 북한에 억류
- 2.17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최종보고서 발표
- 2.21 북한 외무성,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날조된 것이라 비난
- 2.27 북한에 억류된 김정옥 한국인 선교사 평양서 기자회견
- 3.3 억류 중이던 호주 선교사 존 쇼트 추방
- 3.18 중국, 유엔 북한인권보고서에 거부권 시사
- 3.21 일-EU, 북한인권결의안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
- 3.24 미국 일리노이주 의회,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 3.26 북한, 유엔에 인권보고서 제출
- 3.28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 4.5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방한
- 4.17 유엔 안보리, 북한인권 논의 비공식 회의

- 4.30 북한 조국통일연구원 남조선인권대책협의회, ‘남조선인권백서’ 발표  
5.1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실시  
5.6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 보편적 정례인권검토 보고서 마련  
5.15 독일에서 북한인권단체 출범  
5.28 유엔, 북한인권 현장사무소 한국에 설치 결정  
6.9 북한, 한국에 유엔 북한인권 사무소 설치하는 것은 정치적 도발이라 비난  
7.21 통일연구원,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한국어판 발간  
7.31 미 국무부, 북한에 케네스 배 석방 촉구  
8.13 북한, 억류 중인 케네스 배 면담 허용  
8.19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 중국 공위관리와 북한인권문제 논의  
8.23 북한 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 연맹, 루마니아서 공동선언문 채택  
9.1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 기록전시관 설립 추진  
9.2 비영리예술기관인 ‘아마도 예술공간/연구소’, 북한 전지리교화소 참상 폭로 그림 전시회 개최  
9.9 북한, 유엔 아동 매매와 아동 성매매,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에 서명  
9.13 북한 조선인권연구협회, 인권보고서 발표  
9.14 북한, 억류 미국인 매튜 밀러에 6년 노동교화형 선고  
9.19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의 전반적 인권상황 점검한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보고서 정식 채택  
9.23 휴먼 리버티,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관한 동영상 공개  
재입북 고경희, 북한 보위부 탄압과 정치범교화소 수용 고발 기자회견(서울)  
9.26 북한인권 국제영화제 개막  
10.7 북한, 유엔서 북한인권 관련 첫 설명회 진행  
10.15 북한, 유엔서 자체 ‘인권결의안’ 초안 설명회 진행  
10.22 북한, 억류 미국인 제프리 에드워드 파울 석방  
10.23 중국, 북한인권문제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반대  
10.27 북한,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방북 초청  
10.29 유엔 총회 제3위원회, 홈페이지에 북한인권결의안 초안 공개  
11.4 주미 중국대사, 북한인권실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 비난  
11.8 북한, 억류 미국인 케네스 배와 매튜 토드 밀러 석방  
11.10~14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한국 방문  
11.11~13 로버트 킹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한국 방문  
11.12 쿠버, 북한인권결의안에서 ‘ICC 회부’ 뺀 수정안 마련  
11.19 유엔 총회, ICC회부 내용 포함한 북한인권결의안 통과



- 
- 11.24 중국,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통과 반대  
자성남 북한 대사,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서 유엔 총회의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 전달
  - 11.25 북한, 북한인권결의안 통과 비난 대규모 군중대회
  - 11.28 북한,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주도한 일본과 EU 비난
  - 12.5 한·미·호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소속 10개 이사국이 안보리 의장에  
게 북한인권상황을 의제로 상정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 발송
  - 12.9 북한, 지난해 라오스에서 강제북송된 탈북 청소년들의 최근 모습 공개
  - 12.18 ‘북한인권결의안’, 유엔 총회 본회의 통과
  - 12.19 북한, 북한인권결의안 통과에 남한 비난
  - 12.20 북한 남조선인권대책협회, 남조선인권유린 보고서 발표
  - 12.22 유엔 안보리, 북한인권문제 정식 안건으로 채택

연구총서

2012-01	미국의 對韓 핵우산정책에 관한 연구	진성훈	14,000원
2012-01	미국의 對韓 핵우산정책에 관한 연구	진성훈	14,000원
2012-02	북한부패와 인권의 상관성	김수암 외	11,000원
2012-03	보호책임(R2P) 이행에 관한 연구	이규창 외	11,000원
2012-04	EC/EU사례분석을 통한 남북 및 동북아공동체 추진방안: 유럽공동체 형성기를 중심으로	손기웅 외	14,000원
2012-05	김정은체제의 권력엘리트 연구	이교덕 외	13,000원
2012-06	독재정권의 성격과 정치변동: 북한 관련 시사점	박형중 외	11,000원
2012-07	북방삼각관계 변화와 지속: 북한의 균형화 전략을 중심으로	허문영, 유동원, 심승우	10,000원
2012-08	북한 핵문제의 전망과 대응책: 정책결정모델(Decision Making Model)을 이용한 전략 분석	홍우택	8,000원
2012-09	중국의 한반도 관련 정책연구기관 및 전문가 현황분석	전병근, 양갑용	6,000원
2012-10	2000년대 대북정책 평가와 정책대안: '동시병행 선순환 모델'의 원칙과 과제	박종철 외	12,500원
2012-11	리더십교체기의 동북아 4국의 국내정치 및 대외정책 변화와 한국의 통일외교 전략	배정호 외	11,500원
2012-12	김정은 정권의 정책전망: 정권 초기의 권력구조와 리더십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최진욱, 한기범, 장용석	7,500원
2012-13	신정부 '국가전략 DMZ 평화적 이용'	손기웅 외	8,000원
2013-01	남북러 가스관과 동북아 에너지 협력의 지정학	이기현 외	6,000원
2013-02	한국의 FTA전략과 한반도	김규륜 외	8,500원
2013-03	김정은 체제의 변화 전망과 우리의 대책	박종철 외	10,000원
2013-04	EC/EU사례분석을 통한 남북 및 동북아공동체 추진방안 - EC기 분석을 중심으로 -	손기웅 외	12,000원
2013-05	오바마-시진핑 시대의 동북아 국가들의 국내정치 및 대외정책과 한국의 대북 및 통일외교	배정호 외	11,000원
2013-06	북한사회 위기구조와 사회변동전망: 비교사회론적 관점	조한범, 황선영	6,000원
2013-07	인도적 지원을 통한 북한 취약계층 인권 증진 방안 연구	이규창 외	12,500원
2013-08	새로운 세대의 탄생: 북한 청소년의 세대경험과 특성	조정아 외	15,000원
2013-09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책 연구	홍우택	6,000원
2013-10	북한에서 국가재정의 분열과 조세 및 재정체계	박형중, 최사현	7,000원
2013-11	북한경제의 비공식(시장)부문 실태 분석: 기업활동을 중심으로	임강택	11,000원

2014-01	북·중 간 인적 교류 및 네트워크 연구	이교덕 외	7,500원
2014-02	북한변화 촉진 및 남북친화성 증대: 이론발굴과 적용모색	박형중, 박영자	7,500원
2014-03	북한 비공식 경제 성장요인 연구	김석진, 양문수	9,000원
2014-04	신동북아질서 시대의 중장기 통일전략	성기영 외	7,000원
2014-05	'행복한 통일'로 가는 남북 및 동북아공동체 형성을 위한 통합정책: EC/EU 사례 분석을 통한 남북 및 동북아공동체 추진방안	손기웅 외	6,000원
2014-06	탈북청소년의 경계 경험과 정체성 재구성	조정아, 홍민, 이희영, 이항규, 조영주	14,000원
2014-07	한국의 대북 인권정책 연구	한동호	6,000원
2014-08	법치지원과 인권 증진: 이론과 실제	이금순, 도경옥	8,000원
2014-09	신뢰정책의 과제와 추진전략	박영호, 정성철 외	11,000원
2014-10	대미(對美·대중(對中) 조화외교: 국내 및 해외 사례연구	김규륜 외	10,500원
2014-11	북한의 핵전략과 한국의 대응전략	정영태, 홍우택 외	12,000원
2014-12	중국의 주변외교 전략 연구: 중국의 대북정책 결정에 대한 함의	이기현, 김애경, 이영학	7,000원

## 학술회의총서

2012-01	The Outlook for the North Korean Situation & Prospects for U.S.-ROK Cooperation After the Death of Kim Jong-il		6,000원
2012-02	김정은 체제의 북한 인권문제와 국제협력		19,000원
2012-03	해외 이주·난민 지원제도의 시사점		12,000원
2013-01	유엔 인권메커니즘과 북한인권 증진방안		20,000원
2013-02	한반도신뢰프로세스 추진전략		19,000원
2014-01	한반도 평화통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제네바 합의 이후 20년의 교훈과 과제		19,000원

## 협동연구총서

2012-11-01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 실행방안(총괄보고서)	임강택 외	11,000원
2012-11-02	북한 부패실태와 반부패 전략: 국제협력의 모색	박형중 외	10,000원
2012-11-03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체계 구축 및 개발지원전략 수립 방안	장형수 외	8,000원
2012-11-04	북한의 역량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이종무 외	8,000원
2012-11-05	북한의 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프로그램 추진방안	이상준 외	8,000원
2012-12-01	한반도 통일 공공외교 추진전략(1) - 공공외교의 이론적 조명과 한반도 주변4국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총괄보고서)	황병덕 외	13,500원

2012-12-02 공공외교의 이론적 조명과 주변4국의 한반도통일 공공외교 분석들

	김규륜 외	8,500원
2012-12-03 미국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박영호 외	9,500원
2012-12-04 중국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이교덕 외	7,500원
2012-12-05 일본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이진원 외	8,000원
2012-12-06 러시아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여인곤 외	7,500원
2013-26-01 한반도 통일 공공외교 추진전략(II) - 한국의 주변4국 통일공공외교의 실태 연구(총괄보고서)	황병덕 외	14,000원
2013-26-02 한국의 對미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박영호 외	8,000원
2013-26-03 한국의 對중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전병곤 외	7,500원
2013-26-04 한국의 對일본 통일 공공외교 실태	이기태 외	8,000원
2013-26-05 한국의 對러시아 통일 공공외교 실태	조한범 외	6,000원

**논문**

통일정책연구, 제21권 1호 (2012)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1, No. 1 (2012)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1권 2호 (2012)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1, No. 2 (2012)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2권 1호 (2013)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2, No. 1 (2013)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2권 2호 (2013)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2, No. 2 (2013)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3권 1호 (2014)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3, No. 1 (2014)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3권 2호 (2014)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3, No. 2 (2014)	10,000원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12	김수암 외	19,5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2</i>	손기웅 외	23,500원
북한인권백서 2013	조정현 외	24,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3</i>	조정현 외	23,000원
북한인권백서 2014	한동호 외	24,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4</i>	한동호 외	23,000원

## 기타

2012	탈북자 관련 국제조약 및 법령	이규창 외	19,500원
2012	북한인권 이해의 새로운 지평	북한인권연구센터 편	20,500원
2012	알기쉬운 통일교육: 해외한인용	허문영 외	30,000원
2012	통일대비를 위한 대북통일정책 모색(통일대계연구 12-01)	박형중 외	15,000원
2012	통일한국에 대한 국제적 우려해소와 편익: 지역 및 주변국 차원 (통일대계연구 12-02)	박종철 외	14,000원
2012	Korean Unification and a New East Asian Order (Grand Plan for Korean Unification 12-03)	최진욱 편저	6,000원
2012	Korean Peninsula Division/Unification: From the International Perspective Kim Kyuryoon, Park Jae-Jeok		13,000원
2012	중국의 국내정치 및 대외정책과 주요 국가들의 대중국 전략 배경호, 구재회 편		22,000원
2012	China's Domestic Politics and Foreign Policies and Major Countries' Strategies toward China	Bae Jung-Ho, Ku Jae H.	22,500원
2012	통일 비용·편익의 분석모형 구축(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2012-1)	김규륜 외	11,500원
2012	'선도형 통일'의 경로와 과제(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2012-2)	김규륜 외	9,000원
2013	유엔 인권메커니즘과 북한인권	북한인권사회연구센터 편	18,000원
2013	중국 시진핑 지도부의 구성 및 특징 연구 (중국 지도부의 리더십 분석과 한중정책협력방안 2013)	전병곤 외	9,000원
2013	통일 이후 통합을 위한 갈등해소 방안: 사례연구 및 분야별 갈등해소의 기본방향	박종철 외	13,000원
2013	한반도 통일에 대한 동북아 4국의 인식 (통일외교 컨텐츠 생산(1))	배정호 외	16,500원
2013	알기 쉬운 통일교육III: 북한이탈주민용	조정아 외	11,000원
2013	알기 쉬운 통일교육III: 북한이탈주민용 수업지침서	조정아 외	6,000원
2013	민주화 및 양질의 거버넌스 수립: 북한 변화와 통일을 위한 시사점 (통일대계연구 13-01)	박형중 외	13,500원
2013	시장화 및 빈곤감소형 경제질서 수립: 북한 변화와 통일을 위한 시사점 (통일대계연구 13-02)	임강택 외	12,500원
2014	The Trust-building Process and Korean Unification (통일대계연구 13-03)	최진욱 편저	8,000원
2013	통일대계연구: 4년 연구 종합논의 (통일대계연구 13-04)	박형중 외	8,000원
2013	정치·사회·경제 분야 통일 비용·편익 연구 (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2013-1)	조한범 외	17,500원
2013	The Attraction of Korean Unification: Inter-Korean and International Costs and Benefits (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2013-2)	김규륜 외	15,500원
2013	한반도 통일의 미래와 주변 4국의 기대 (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2013-3)	김규륜 외	10,500원

2013	전환기 중국의 정치경제 (통일대비 중국에 대한 종합적 전략 연구: 통일시대 한중관계 전망 2013-1)	배정호 외	17,500원
2013	China's Internal and External Relations and Lessons for Korea and Asia (통일대비 중국에 대한 종합적 전략 연구: 통일시대 한중관계 전망 2013-2)	Bae Jung-Ho, Ku Jae H.	17,500원
2013	중국의 대내외 관계와 한국의 전략적 교훈 (통일대비 중국에 대한 종합적 전략 연구: 통일시대 한중관계 전망 2013-3)	배정호, 구재희 편	16,500원
2014	중국 권력엘리트와 한중교류 네트워크 분석 및 DB화 (중국 지도부의 리더십 분석과 한중 정책협력방안2014)	전병근, 홍우택, 신중호 외	9,000원
2014	북한의 시장화와 인권의 상관성 (『북한인권정책연구』 2014)	북한인권연구센터	11,000원
2014	동북아 4국의 대외전략 및 대북전략과 한국의 통일외교 전략	배정호, 봉영식, 한석희 외	9,500원
2014	2014년 통일예측시계	박영호, 김형기	9,500원
2014	통일한국의 국가상과 한중협력 (통일대비 중국에 대한 종합적 전략 연구 2014-01)	배정호 외	15,500원
2014	China's Strategic Environment and External Relations in the Transition Period (A Comprehensive Strategic Study on China in Preparation for Korean Unification 2014-02)	Bae, Jung-Ho et al.	18,000원
2014	Global Expectations for Korean Unification (Research on Unification Costs and Benefits 2014-01)	Kyuryoon Kim et al.	19,000원
2014	Lessons of Transformation for Korean Unification (Research on Unification Costs and Benefits 2014-02)	Kyuryoon Kim et al.	15,500원
2014	한반도 통일의 효과 (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2014-3)	김규륜 외	14,500원
2014	2014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박종철 외	12,000원
2014	신통일대계 구현을 위한 구조분석(신통일대계2014)	허문영 외	12,000원
2014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 IV (1)	조정아, 박영자 외	7,000원
2014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 IV (2)	조정아, 박영자 외	22,000원
2014	'그린 데탕트'실천전략 환경공동체 형성과 접경지역 DMZ평화생태적 이용방안 (그린데탕트2014)	손기웅 외	17,000원
2014	Law and Policy on Korean Unification: Analysis and Implications	Jong-Chul Park, Jeong-Ho Roh	11,000원

## 연례정보보고서

2012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2~2013	7,000원
2013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3~2014	7,000원
2014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4~2015	6,000원

## KINU 정책연구시리즈

비매품

2012-01	통일재원 마련 및 통일의지 결집 관련 국민의 인식	김규륜, 김형기
2012-02	2012년 상반기, 북한 정책동향 분석: 북한 매체의 논조를 중심으로	박형중 외
2012-03	러시아의 극동개발과 북한 노동자	이영형
2012-04	오바마 2기 행정부의 대 한반도 정책 전망	김장호 외
2012-04(E)	The Second Term Obama Administration's Policy towards the Korean Peninsula	Jangho kim
2012-05	중국 18차 당대회 분석과 대내외정책 전망	이기현 외
2013-01	북한 지하자원을 활용한 DMZ/접경지역 남북 산업단지 조성방안	손기웅 외
2013-02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 추진 방향	최진욱 외
2013-03	박근혜정부의 통일외교안보 비전과 추진 과제	최진욱 외
2013-04	유엔조사위원회(COI) 운영 사례 연구	김수암 외
2013-05	Trustpolitik: 박근혜정부의 국가안보전략 - 이론과 실제 탐색연구 -	박형중 외
2013-06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	안지호 외
2013-07	2013년 북한 정책 논조 분석과 평가	박형중 외
2013-09	김정은 정권의 대남 긴장조성: 2013년과 향후 전망	박영자 외
2013-10	국내불안과 대외도발: 북한에 대한 적용 가능성 탐색	정성철
2013-11	2013년 북한 핵프로그램 및 능력 평가	김동수 외
2013-14	유라시아이니셔티브 구현을 위한 한러 협력 방안	조한범 외
2014-01	농업분야의 지속가능한 대북지원 및 남북 협력방안 모색	임강택, 권태진

##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비매품

2012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7권 1호	손기웅 외
2012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7권 2호	손기웅 외
2013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8권 1호	이금순 외
2013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8권 2호	이금순 외
2014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9권 1호	이금순 외

- 2012-01 Study of Disciplinary Problems in the North Korean Army  
Lee Kyo Duk, Chung Kyu Sup
- 2012-02 The Quality of Life of North Korean: Current Status and Understanding  
Kim Soo Am et al.
- 2012-03 Basic Reading on Korean Unification  
Huh Moon Young et al.
- 2013-01 Study on the Power Elite of the Kim Jong Un Regim  
Lee Kyo Duk et al.
- 2013-02 Relations between Corruption and Human Rights in North Korea  
Kim Soo Am et al.
- 2013-03 Easing International Concerns over a Unified Korea and Regional  
Benefits of Korean Unification  
Park Jong Chul et al.
- 2013-04 'Peaceful Utilization of the DMZ' as a National Strategy  
Son Gi Woong et al.
- 2014-01 Korea's FTA Strategy and the Korean Peninsula  
Kim, Kyuroon et al.
- 2014-02 The Perceptions of Northeast Asia's Four States on Korean Unification  
Bae, Jung-Ho et al.
- 2014-03 The Emergence of a New Generation: The Generational Experience  
and Characteristics of Young North Koreans  
Cho, Jeong-ah et al.
- 2014-04 Geopolitics of the Russo-Korean Gas Pipeline Project and Energ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Lee, Kihyun et al.
- 2014-05 Fiscal Segmentation and Economic Changes in North Korea  
Park Hyeong Jung, Choi Sahyun

- 2014 북핵일지 1955~2014  
조민, 김진하
- 2014 통일환경 및 남북한관계 전망: 2014~2015  
통일연구원





## ■■■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 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학술회의총서, 협동연구총서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구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4.19로 123(수유동)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출판자료팀 도서회원 담당자(books@kinu.or.kr)
- 나) 전화: (02)901-2679, FAX: (02)901-2545
-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변경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  
취  
선

<h2 style="margin: 0;">회원가입신청서</h2>			
성 명			입금일자
			입금자 (가입자와 입금자가 다를 경우 기입)
소 속			
간 행 물 받을 주소	(우편번호 :            )		
연 락 처	전 화		E-Mail
	핸드폰		FAX
Mailing Service	수신 (    ) 수신거부 (    )		
회원구분	학생회원 (    ) 일반회원 (    ) 기관회원 (    )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0;">본인은 통일연구원의 연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10px 0 0 0;">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0 0 0 20%;">신청인                      (인)</p>			

※ 본 신청서를 보내주시시오.  
(우142-728) 서울시 강북구 4.19로 123(수유동)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전화: (02)901-2679, FAX: (02)901-2545 E-Mail: books@kinu.or.kr  
※ 신한은행 온라인 140-002-389681 (예금주: 통일연구원)

| 연례정세보고서 2014 |

통일환경 및 남북한관계 전망:  
2014~2015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